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The Korean Economic Outlook
for the 21th National Assembly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총 괄 | 이정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작 성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황종률·오현희·박선아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지 원 | 장유진 거시경제분석과 행정실무원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여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02) 6788-3775 | macro@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2020. 6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0. 6. 1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제21대 국회가 개원되는 2020년 들어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내내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미·중 간 무역분쟁, 대일 무역마찰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세계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수많은 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각국의 방역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되는 등 커다란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제시하여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 침체를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야기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언제 통제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경제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도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커다란 고통을 감내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는 국민·정부와 함께 이같은 재난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종식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가계와 기업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구조는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공론화하는 장이 제21대 국회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정부 간 협력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21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21대 국회 임기 중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를 전망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경제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난적 경제상황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때에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요약

I. 서론

- 제21대 국회 임기 기간은 방향이 불투명한 변화의 시대
 - 미·중간 무역분쟁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변화의 방향은 불투명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코로나19가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
 - 제21대 국회 임기기간은 어느 때보다 제21대 국회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긴요
 - 세계경제의 변화에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적절한 대처 여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
- 본 보고서는 새롭게 개원한 제21대 국회 임기 중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될 세계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의 향후 방향성을 점검할 목적으로 작성
- 또한 경제전망을 통해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과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경제가 향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찾고자 함

II. 제21대 국회 기간 중 세계경제 흐름

1. 세계경제의 변화

가.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 3가지 특징을 들 수 있음
 - 첫째,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저물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세계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 4.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 각각 3.6%, 3.6%로 하락
 - 선진국들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로금리, 양적완화정책 등 적극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저성장·저물가가 지속

- 둘째, 선진국 경제성장률과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의 격차 축소
 -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경제성장률보다 2008년에는 5.4%p 높았으나 2019년에는 2.0%p에 그침
 -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의 원인 중 하나는 신흥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부진으로 2000~2007년 중 신흥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금융투자 제외)는 연평균 15.0% 증가하였으나 2011~2018년에는 1.0%에 불과
- 셋째, 세계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준 코로나19 팬데믹
 - 각국의 방역과정에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는데 4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3.0%로 전망하여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상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선진국 정부들이 시행한 격리, 지역봉쇄, 일시적 업무중단 조치가 총수요(소비, 투자 감소)와 총공급(노동 및 부품 공급 축소)의 양방향으로 실물경제에 충격
 - 팬데믹은 향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연평균 3%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세계교역질서를 훼손하는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음
- 무역장벽의 수단으로는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 추이가 꾸준히 낮아져 왔다는 점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은 1997년 10.8%에서 2010년 6.2% 수준까지 하락
 - 국제통화기금(IMF, 2016)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취한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비중은 1995년 WTO체제 출범 당시 세계 교역 상품의 1% 수준에서 2015년 2.5%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고
-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교역신장을 위축시키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전망
 - 세계교역신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연평균 7.0%에서 2008년 위기 이후 3.0%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며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으로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

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은 국가 간 생산분업을 통한 세계교역신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세계경제성장을 촉진하였으나 2008년 이후 약화되는 추세
 -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제품의 설계와 부품,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각 국가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음
 - GVC의 확산은 국가 간 생산분업을 통해 세계교역규모 확대와 국가 간 기술 전파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촉진하여 세계경제성장률을 제고
 - 그러나 GVC의 확산은 2008년을 정점으로 약화되는 추세
 - 세계GDP에서 GVC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로 정의한 GVC 참여도(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는 1990년대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08년(14.1%)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추세
- GVC 확산의 약화 배경으로는 크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주요 생산기지국가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변화, 선진국과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 축소 등이 거론
 - 첫째,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국가 간 GVC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이는 GVC분업의 확산을 제약
 -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중심 경제구조 변화도 한 원인
 -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던 중국 등 신흥국에서 수입품 국내대체가 가능해지면서 기술선도국의 핵심부품을 신흥국에서 조립하는 수직분업 체제가 약화
 - 또한 신흥국의 가계 구매력 증대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생산 제품을 재수출하지 않고 현지판매로 전환한 것도 생산 분업의 약화요인으로 작용
 - 셋째, 선진국과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 축소로 다국적 기업들이 GVC네트워크에 참여할 유인이 축소
 - 중국, 인도 등의 임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한 반면 선진국의 인건비 부담은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 발전, 생산공정 자동화 등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들의 GVC 분업정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조공정, 비즈니스 모델 등을 조정
 - 또한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등 비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선진국의 해외직출기업 본국회귀(리쇼어링) 사례는 증가

라.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 환경규제는 환경오염의 처리·복구를 위한 비용 측면과 환경오염의 방지·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 존재
-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 등 전 세계적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환경규제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
 - 온실가스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도, 최적가용기법(BAT-AEL)제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환경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가치도 창출
- 최근 포장재 폐기물 처리 문제도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
 - 유엔환경계획(UNEP)을 비롯한 선진국은 보증금 환불제도, 포장재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 관리기관 설립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하여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독려
- 녹색경제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경제 성장을 추구
 - 영국의 경우 탄소 저감 목표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하고 녹색투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전 세계 녹색금융시장을 선도

2. 불확실성의 확대

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세계 경제의 가장 주요한 불확실성 확대 요인 중 하나로 작용
- 2017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 누적되어왔던 미·중 간의 구조적 긴장관계가 본격적으로 표면화
 - ‘중국몽(中國夢)’을 표방한 시진핑 주석이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등을 추진하자 미·중 간 전략적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
- 미·중 무역 분쟁은 2018년 7월 미·중의 상호 추가관세부과를 계기로 본격화되어 지난 2020년 1월 양국이 ‘미·중 1단계 경제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때까지 1년 6개월 간 지속
 - 최근에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발병진원지 공방을 벌이는 등 미·중 분쟁의 전선이 확장되는 양상

- 우리나라의 1,2위 교역상대국인 미·중 갈등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나. 글로벌 부채확대 리스크

- 세계 주요국의 부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재정위기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당국이 팽창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증가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총부채/GDP 비율은 2008년 말 201.5%에서 2019년 3/4분기 239.0%로 37.5%p 증가
 - 선진국의 총부채는 국채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정부 부채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 등 신흥국의 총부채는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
 - 완화적인 금융여건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금융위험 신호를 통해 가계나 기업의 금융 취약성을 축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에는 장기간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부채 증가와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기업 부문의 금융 취약성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
 -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은 세계금융시장에 전례 없는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은 기존에 축적되어왔던 금융 취약성에 노출
 - 특히 신흥국은 급속한 자본유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자본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대외 부채 조달 능력이 상실될 위험에 처함

다. 국제유가 및 브렉시트

(1) 국제유가

- 중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원유수요 둔화 및 공급시장 다변화로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은 상존
 - 원유수요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시행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점차 재편되고 각국이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
 - 원유공급은 미국 셰일오일과 비OPEC 국가들의 생산 확대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다만, OPEC 공조의 불확실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업스트림(원유의 탐사와 생산) 부문 투자 감소와 셰일오일 업체들의 파산 가능성 등 공급측면의 불확실성은 상존

(2) 브렉시트

- 브렉시트는 2020년 1월 31일에 공식적으로 비준 되었으나, 브렉시트 이행준비기간 동안 세부사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 영국과 EU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이행준비기간동안 국경, 통관, 이동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고,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경봉쇄·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협상당사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협상 여건이 어려워져 브렉시트 국면에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으로 대두

Ⅲ. 제21대 국회 기간 중 한국경제 전망

1.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 한 경제의 잠재GDP는 주어진 기술여건과 생산요소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산출량 수준
- 최근에는 경기안정화 측면에서 생산요소시장이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생산수준으로 정의됨
- 잠재성장률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안정화정책,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개념
- 자본스톡과 노동투입, 실질GDP성장률에 대한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하락
- 1970년 고도성장기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제2차 석유파동과 10.26, 5.17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촉발된 1979년 1/4 ~ 1980년 3/4분기 기간 중의 경기침체기 중에는 7% 초반까지 하락
- 1980년대 들어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황과 3저현상(저유가, 저금리, 약달러) 등과 같은 양호한 대외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80년대 중후반에는 연평균 9.6%로 상승

- 1990년대 들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는 6% 후반대로 진입
- 1998년 외환위기 충격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
 - 지난 2009~2019년 중에는 노동의 기여도가 정체된 가운데 투자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도 연평균 3.1%대로 하락
- 우리 경제는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을 받을 경우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첫째, 경기불황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면서 자본축적이 감소하고, 둘째, 자연실업률이 증가해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셋째, 위기 시 노출된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총요소 생산성 증가를 저해하였기 때문임
- 향후 5년(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이전 5년(2015~2019년) 기간에 비해 0.5%p 하락하여 연평균 2.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는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 기여도가 정체된 가운데 자본과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들어 지속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이전 5년 기간(1.2%p)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생산인구증가세 둔화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이전 5년 기간(0.1%p)에 비해 소폭 둔화될 전망
-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건설투자 감소, 설비투자 증가폭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이전 5년 기간(1.5%p)에 비해 0.4%p 하락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경제 전망

가. 경제성장률

-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 경제의 실질GDP와 명목GDP는 각각 연평균 2.0%와 3.1% 성장 전망

- 2020년 실질GDP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반기 중 급락한 뒤 하반기 중 완만한 개선을 보이며 연간 0.1%를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고용과 임금 등 소득창출 여건이 나빠지고 소비심리도 악화되면서 전년대비 1% 내외 감소를 기록할 전망
 - 다만 정부소비는 코로나19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의 추진으로 민간소비 감소를 상쇄하고 경제성장 하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
 - 건설투자는 민간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8년부터 시작된 수축국면을 이어갈 전망
 -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부문의 투자확대가 예상되나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석유화학 등 비IT부문의 투자회복이 지연되며 소폭 반등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
 - 수출(물량)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세계경기 부진과 세계교역량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할 전망

[2020년 및 향후 5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19	2020	2020~2024년 5년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2.0	0.1	2.0
민간소비	1.7	-0.9	1.8
설비투자	-7.5	0.2	2.9
건설투자	-2.5	-2.5	0.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1	3.4
총수출	1.7	-2.8	1.3
총수입	-0.6	-2.5	1.5
GDP디플레이터	-0.9	0.7	1.1
명목 국내총생산(GDP)	1.1	0.8	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0년 명목GDP성장률은 GDP디플레이터의 낮은 상승률과 실질GDP 성장률의 큰 폭 하락으로 0.8%에 그칠 전망
 - 올해 실질GDP성장률은 0% 내외로 예상되고 GDP디플레이터는 반도체 가격 회복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 (-0.9%) 감소에서는 벗어나지만 낮은 상승률(0.7%)에 그칠 전망
 - 이에 따라 2020년 명목GDP성장률은 1998년(-0.9%)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치였던 2019년(1.1%) 수준을 다시 경신할 전망
 - 2020년 전망: 명목GDP성장률(0.8%) = 실질GDP 성장률(0.1%) + GDP 디플레이터상승률(0.7%)

- 2020~2024년 기간 중 실질GDP성장률은 이전 5년간(2015~2019년: 2.8%) 실적에 비해 0.8%p 하락한 연평균 2.0% 전망
 -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동기간 중 실질GDP성장률을 하회하는 연평균 1.8% 성장하고 건설투자(0.9%)와 총수출(1.3%)도 낮은 성장이 예상
- 2020~2024년 기간 중 명목GDP성장률은 이전 5년간(2015~2019년: 4.2%) 실적에 비해 1.1%p 하락한 연평균 3.1% 전망
 - 동 기간 중 실질GDP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 동반 하락
- 1인당 GDP는 2020년 31,000달러 수준에서 2024년경 37,600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020년 1인당 GDP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할 전망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6년 2만 달러대(21,727달러), 2017년 3만 달러대(31,605달러)에 각각 처음 진입하였으며 2018년 33,429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2021~2024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연평균 3.7%)과 원화가치 상승률(연평균 1.3%)을 전제로 할 경우 2024년경 1인당 GDP는 37,600달러 수준을 나타낼 전망
 - 다만 1인당 GDP의 시산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전망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전망 시계구간에서의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실제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민간소비

- 2020~2024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1.8% 증가하여 지난 5년(2015~2019년 2.5%)에 비해 둔화될 전망
- 2020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소비여력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0.9% 감소할 전망
 -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가계소비의 기반이 되는 고용과 임금 등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중에는 정부정책 효과 등으로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둔화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임금상승률 둔화 등이 소비를 제약하면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집단감염 재발 우려 및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불안심리로 소비심리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

- 2020~2024년 기간 중에는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로 소비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소득과 고용상황의 불안정 등이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 설비투자

- 2020~2024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지난 5년(2015~2019년, 연평균 2.8%)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할 전망
- 2020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전망
 - IT부문 설비투자는 반도체 가격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패널 시설확대, 5G 상용화 지속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비IT부문은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여타 업종에서는 유지보수 위주의 제한적인 투자가 예상
 -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대외수요마저 위축되며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 중기적으로 4차 산업 및 IT제조업과 연계된 제조업의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업 관련투자 확대가 전체 설비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
 - 반면 세계교역량 증가율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수평적 해외 직접투자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확대에 따른 제조업생산비중 정체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상대적 중요성 증가 등은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라. 건설투자

- 2020~2024년 기간 중 건설투자는 주택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며 연평균 0.9% 증가할 전망
- 2020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의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할 전망
 - 주택시장안정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주택투자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만 토목투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증가할 전망
 - 생활SOC와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인프라투자 확대 계획으로 건설투자 위축을 일부 완화할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건설투자(연평균 0.9%)는 감소에서는 벗어나지만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전망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GTX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SOC 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의 확대는 건설투자 부진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마. 대외거래

- 2020~2024년 기간 중 수출은 연평균 1.2%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를 전망
- 2020년 수출(통관기준)은 코로나19로 세계경기부진과 글로벌 교역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9.3% 감소 전망
 - 반도체 가격은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 전환할 전망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수입수요 급감으로 석유제품 등 비IT품목을 중심으로 대부분 감소를 기록할 전망
 - 통관일수를 조정한 일평균수출액은 2018년(22.5억 달러)을 정점으로 2019년(19.9억 달러)과 2020년(18억 달러) 2년 연속 하락할 전망
 -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수출(-9.3%)이 수입(-8.0%)보다 더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지난해(389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축소된 287억 달러, 교역 규모는 9,545억 달러를 나타내어 1조 달러를 하회할 전망
 -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2011년 사상 처음 1조 달러대에 진입하여 2014년까지 유지되었고, 세계경기부진으로 2015~2016년 중 1조 달러를 하회하였으며, 이후 1조 달러대에 재진입
- 2020~2024년 기간 중 대외 수출은 연평균 1.2%(2020년 제외 시 3.9%) 증가하여 이전 5년(2015~2019년)의 -0.6%보다 개선되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세계교역탄력성(세계교역신장률/세계경제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율에 그칠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2%대 후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 2020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축소된 540억 달러 전망
 - 상품수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이 모두 감소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출이 더 큰 폭 감소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지난해(769억 달러)보다 축소된 64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여행수지가 개선되는 등 지난해(-169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축소된 107억 달러 적자를 보일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매년 축소되면서 이전 5년(2015~2019년) 기간 중 평균인 5.3%보다 2.7%p 하락한 2.8% 수준을 나타낼 전망

바. 소비자물가

- 2020~2024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1% 상승하며 2019~2020년의 0%대 저물가 상황에서는 벗어날 전망
- 2020년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측 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정책 등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0.4% 상승에 그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
 - 국제유가 급락과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압력이 약화되고 무상교육 확대 및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정책이 물가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1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완만하게 상승하겠으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여전히 낮아 물가안정목표 수준(2.0%)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사. 금리·환율

- 2020~2024년 기간 중 국고채금리는 2021년부터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2020년보다 높은 연평균 1.7% 수준을 나타낼 전망
- 2020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국내수요(소비 및 투자) 부진, 해외금리 하락 등으로 2019년(연평균 1.5%)보다 하락한 연평균 0.9%를 나타낼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은 최근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총수요와 총공급의 양방향으로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국내경제성장률이 2019년 전년대비 2.0%에서 2020년 0.1%,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9년 0.4%에 이어 2020년에도 0.4%에 그칠 전망
 - 또한 한국은행이 기업신용경색 완화 및 금융시장 안정,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금리 하락요인이 될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국고채금리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연평균 1.7% 수준을 나타낼 전망

- 세계경제가 올해 마이너스성장에서 내년 플러스성장으로 전환되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난다면 비교적 효과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2%대를 회복할 전망
 - 그러나 저성장·저물가 환경으로 인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운용되어 금리 상승폭은 작을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은 미달러화가 약세국면을 나타내면서 연평균 1,171원 수준으로 2020년보다 하락할 전망
-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2019년(1,166원)보다 3.3%(39원) 상승한 연평균 1,205원을 나타낼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가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را 야기하고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
 - 2020~2024년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정상적 성장경로로 복귀하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면 미달러화 약세로 연평균 1,171원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현재 달러 당 1,200원을 넘는 수준은 과거 미국 IT버블붕괴(2001~2002년)와 미국 금융버블붕괴(2008~2009년)와 같이 미국 경제가 불안했던 시기이며, 현재도 코로나19의 방역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
 - 미달러 약세는 국제자금의 미국 집중을 완화시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

IV. 향후 과제

- 첫째,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중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시키는 대책이 필요
- 실질GDP성장률이 지난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2.8%에서 향후 5년간(2020~2024년)에는 2.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코로나19의 충격뿐만 아니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제고가 어려워지는 상황

■ 둘째,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가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 팬데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 큰 충격을 주면서 가계의 실업 위험이 상승
- 가계소비는 GDP의 약 49%(2019년 실질기준)를 차지하여 가계가 파산, 실업 등으로 붕괴되면 경제에도 충격 우려

■ 셋째, 한국경제에 비우호적인 세계경제 여건에 대비

-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가 야기한 높은 불확실성 지속
 - 팬데믹과 미·중 간 분쟁의 격화는 점차 글로벌 가치사슬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에게는 심각한 위협
-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격화된다면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할 가능성

■ 넷째,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지만 향후 수반되는 중장기적 부작용도 감안

- 우량기업과 부실기업 간 차별없는 지원은 단기에 그쳐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국내외 경기동향을 고려하면서 출구전략(금융지원액 축소, 구조조정)을 고민할 필요
 - 기업금융지원이 기업부채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중기적으로 기업의 지속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시장기능 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대규모 저금리 유동성이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종식 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에도 대비

■ 다섯째,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인프라 및 기술투자에 관심을 둘 필요

- 팬데믹은 선진국들이 자국 내 혹은 대외거래와 관련한 환경규제를 보다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전망

■ 기업과 정부의 노력과 제21대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긴요한 시기

- 세계경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이 가능

요약 _ ii

I. 서론	2
II. 제21대 국회 기간 중 세계경제 흐름	6
1. 세계경제의 변화	6
가.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	6
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11
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14
라.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17
2. 불확실성의 확대	20
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20
나. 글로벌 부채확대 리스크	23
다. 국제유가 및 브렉시트	27
III. 제21대 국회 기간 중 한국경제 전망	40
1. 국내경제 여건	40
가. 소비동향	40
나. 설비투자 동향	41
다. 건설투자 동향	43
라. 수출 동향	44
마. 소비자물가 동향	45
바. 금리·환율 동향	46
2.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47
3. 경제전망	56
가. 경제성장률	56
나. 민간소비	66
다. 설비투자	71
라. 건설투자	75
마. 대외거래	82
바. 소비자물가	90
사. 금리·환율	95
IV. 향후 과제	104
참고문헌	107

표 차례

[표 II-1]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 추이	13
[표 II-2] 국제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17
[표 II-3] 미·중 무역 분쟁 주요 일지	22
[표 III-1] 2000년대 이후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49
[표 III-2] 노동투입 주요 변수 추이 및 전망	52
[표 III-3] 자본투입 추이 및 전망	53
[표 III-4] 우리나라 기준순환일 및 국면지속기간	56
[표 III-5] 국내총생산(GDP) 지출부문별 성장 추이	57
[표 III-6] 명목GDP성장률 및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이와 전망	61
[표 III-7] 전통적 SOC와 생활SOC 비교	81
[표 III-8]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84
[표 III-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변화	85
[표 III-10] 신수출성장품목 개요	88
[표 III-11] 경상수지 전망	89
[표 III-12] S&P 기준 국가신용등급(장기외화채 등급)과 주요 등급별 국가	100

[그림 II-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경제성장 및 소비자물가 변화	6
[그림 II-2]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 갭	8
[그림 II-3]	신흥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9
[그림 II-4]	무역증가율/세계GDP증가율 추이	9
[그림 II-5]	시나리오별 2020~2021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10
[그림 II-6]	세계교역량 신장률 추이	12
[그림 II-7]	연도별 무역기술장벽의 통보문 발행 건수	13
[그림 II-8]	세계교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15
[그림 II-9]	미국과 중국 GDP의 세계GDP대비 비중 추이	21
[그림 II-10]	미국의 대중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23
[그림 II-11]	세계 경제의 부문별 GDP대비 부채 비율	24
[그림 II-12]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의 금융위기 전후(2008년과 2019년) 부문별 GDP대비 부채 비율	24
[그림 II-13]	투자등급채권에서 BBB가 차지하는 비중	25
[그림 II-14]	경기침체 충격 시 부채위험 기업(ICR<1)의 부채 비중 전망	26
[그림 II-1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흥국에서의 외국 자본 유출 추이 (GDP대비 비율)	27
[그림 II-16]	국제유가 추이	28
[그림 II-17]	2020~2025년 전세계 원유수요 전망	30
[그림 II-18]	영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	35
[그림 II-19]	영국 경제지표 추이	35
[그림 II-20]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전 세계 실질GDP 변화(IMF 전망)	36
[그림 III-1]	소매판매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40
[그림 III-2]	자본재형태별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42
[그림 III-3]	기계류 및 운송장비 형태별 투자	42
[그림 III-4]	최근 건설투자 동향	43
[그림 III-5]	최근 수출 동향	44
[그림 III-6]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45
[그림 III-7]	시장금리 추이	46
[그림 III-8]	원/달러 환율 추이	47
[그림 III-9]	우리나라의 실질GDP성장률과 잠재GDP성장률 추이	48
[그림 III-10]	생산투입 요소별 경제성장기여도 추이	49

[그림 III-11] 생산인구 및 총고정자본투자 추이	50
[그림 III-12] 총요소생산성 추이 및 전망	51
[그림 III-13] 총노동투입 추이 및 전망	52
[그림 III-14] 자본재 형태별 고정자본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53
[그림 III-15] 실질GDP성장률 추이	57
[그림 III-16] 2020년 실질GDP 지출항목별 성장률 전망	58
[그림 III-17] GDP성장률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도 전망	60
[그림 III-18] 교역조건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이 및 전망	61
[그림 III-19] 2020~2024년 실질국내총생산과 지출부문별 성장 전망	63
[그림 III-20] 2020~2024년 명목국내총생산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	64
[그림 III-21] 분기별 민간소비 증가율 및 GDP성장률	66
[그림 III-22] 2020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67
[그림 III-23] GDP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68
[그림 III-24]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 추이	68
[그림 III-25] 민간소비 구조적 부진의 원인	69
[그림 III-26] 가계의 조세 및 사회부담금 비율	70
[그림 III-27] 평균소비성향 추이	71
[그림 III-28]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71
[그림 III-29] 2020년 세계반도체시장 전망	72
[그림 III-30] 기계류 및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추이	73
[그림 III-31]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	73
[그림 III-32] 정보통신부문 및 비정보통신부문 설비투자	74
[그림 III-33] 제조업/GDP비중 및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75
[그림 III-34] 공종별 경상건설기성액 추이	76
[그림 III-35]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거래량 추이	77
[그림 III-36] 주택건설수주액과 주택착공면적	77
[그림 III-37] 미분양주택 추이	78
[그림 III-38] 사무실 건설수주액과 투자수익률 추이	78
[그림 III-39] 토목 수주액 추이와 민간투자사업 계획	79
[그림 III-40] 건설투자 추이 및 전망	80
[그림 III-41] 주택공급 전망	80
[그림 III-42] 중기 SOC 예산 투입 계획	81
[그림 III-43] 세계 수입물량 및 산업생산 추이	82
[그림 III-44] 수출증가율과 세계교역량 전망	83
[그림 III-45] 일평균 수출액 추이 및 전망	85

[그림 III-46]	교역규모 전망	86
[그림 III-47]	세계성장률, 세계교역신장률, 수출증가율 추이	87
[그림 III-48]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88
[그림 III-49]	경상수지 추이	89
[그림 III-50]	경상수지(GDP대비) 흑자 비율 추이 및 전망	90
[그림 III-51]	연간 소비자물가 추이	91
[그림 III-52]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2020년 전망	91
[그림 III-53]	농축수산물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92
[그림 III-54]	석유류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률	93
[그림 III-55]	서비스물가 상승률 추이	93
[그림 III-56]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상승률 추이	94
[그림 III-57]	국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95
[그림 III-58]	장기 및 단기 회사채의 스프레드	96
[그림 III-59]	한국·미국·유럽 정책금리 추이	97
[그림 III-60]	한국 및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97
[그림 III-61]	미달러 대비 아시아국 통화 추이	98
[그림 III-62]	달러 대비 원화 및 위안화 추이	99
[그림 III-63]	원화 및 위안화 환율의 전분기대비 변동률 추이	99
[그림 III-64]	외평채(5년 만기) CDS프리미엄 추이	99
[그림 III-65]	외국인의 국내증권 매매 추이	99
[그림 III-66]	주요 선진국 국채와 우리나라 국고채의 금리차	100
[그림 III-67]	달러인덱스 장기 추이	101
[그림 III-68]	원/달러 환율의 장기 추이	102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서론

현재 세계경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세계화의 과정을 통해 무역·기술·금융의 교류를 확대시켜온 세계경제는 눈부신 기술발전을 이루면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모두 높은 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변화의 전주곡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저성장과 저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앙은행들은 경제성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대규모 통화를 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저성장·저물가와 무역증가세 둔화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하였다. 세계화 과정에서 형성된 글로벌 가치사슬은 상품의 공급을 증대시켰으나 총수요의 증가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초과공급과 저물가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 세계경제 흐름의 방향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내세우며 기존 세계경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무역체제보다 쌍방 국가 간 무역협상을 요구하고 국력을 앞세워 자국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선호하였다. 전세계 지도적 역할을 통해 국가 간 경제교류 확대를 도모했던 미국이 그 역할을 포기하면서 다른 태도를 보이자 세계경제는 구심점을 잃고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9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불확실성을 매우 높여 세계경제 성장에 큰 부담을 주었다. 무역곡절을 겪는 끝에 올해 1월 15일 1차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는 불안한 시선으로 협상과정을 바라보던 세계가 안도하였다. 그러나 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코로나19가 중국에 이어 선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코로나19는 과거 사스, 메르스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전염성을 나타내며 중국에서 발생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각국 정부는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특정지역 봉쇄를 통해 인적이동을 통제하고 감염자 및 감염 위험자 격리조치를 단행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3월 10일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렸고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정부가 자택대피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 간 국경봉쇄조치를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이 시행하게 되면서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위축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로 국가 간 기업들이 상호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한 국가 내 기업의 생산과 공급의 감소는 이와 연계된 타국 내 기업의 원활한 생산에 애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충격은 과거 위기에서 없었던 요인으로 경제적 피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위험기피 현상으로 인해 특히 서비스업에서 큰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수요와 공급 양방향으로 충격을 주면서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3.0%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불과 3개월만에 -6.3%p를 낮춘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미국경제도 -5.9% 역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충격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전례 없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매우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야기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코로나19 통제 혹은 재확산 가능성, 백신 개발 성공 여부 및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각국의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적 결과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문제가 제기되면서 미·중 간 분쟁이 더욱 격화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분쟁의 영역도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 기업규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격화되는 미·중간 분쟁,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고려해볼 때 과거 미국이 주도해왔던 세계화시대가 흔들리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미래 경제여건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점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 세계경제 환경이 우리 경제에게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향후 제21대 국회 임기기간은 국가 간 협력이 축소되고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코로나19가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의 변화에 우리나라 경제주체가 얼마나 적절히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가 좌우되는 중요하고도 힘겨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제21대 국회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긴요할 때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새롭게 개원한 제21대 국회 임기기간 동안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될 세계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의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올해와 향후 4년간 전개될 세계경제의 특징과 세계경제에 미칠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경제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세계경제 안에서 우리가 처해진 경제적 현실을 되짚어 보았으며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부문별 전망을 시도하였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경제전망은 향후 경제환경이 전망과 다르게 변화할 때 경제주체가 이에 대응한 새로운 의사결정 시 기준선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전망을 통해 새로운 세계경제 체계로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경제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았다.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

제21대 국회 기간 중 세계경제 흐름

1. 세계경제의 변화
2. 불확실성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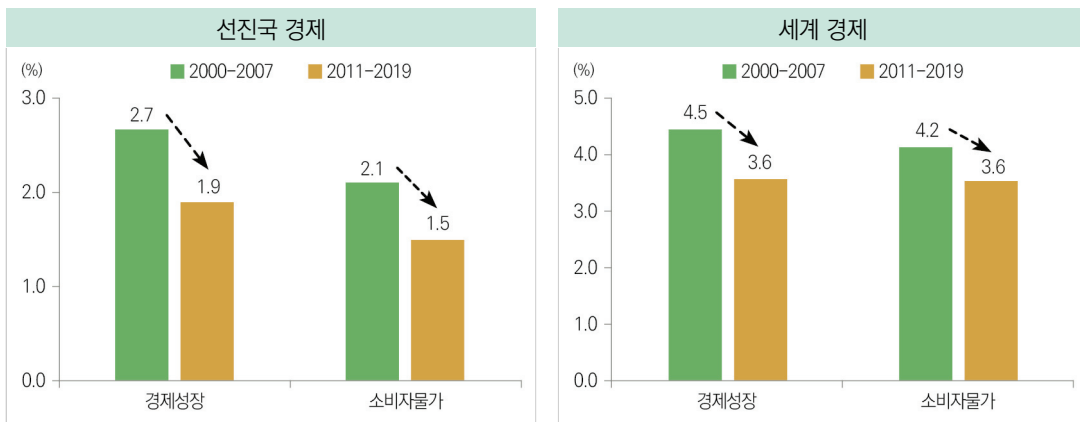
제21대 국회 기간 중 세계경제 흐름

1. 세계경제의 변화

가.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

선진국들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로금리, 양적완화정책 등 적극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었다.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연평균 2.7%에서 이후(2011~2019년)¹⁾에 1.9%로 낮아진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따른 총수요 증가세의 둔화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1%에서 1.5%로 하락하였다. 선진국의 경제성장세가 약화된 영향으로 세계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 4.2%에서 각각 3.6%, 3.6%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 동향의 첫 번째 특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된 점이다.

[그림 II-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경제성장 및 소비자물가 변화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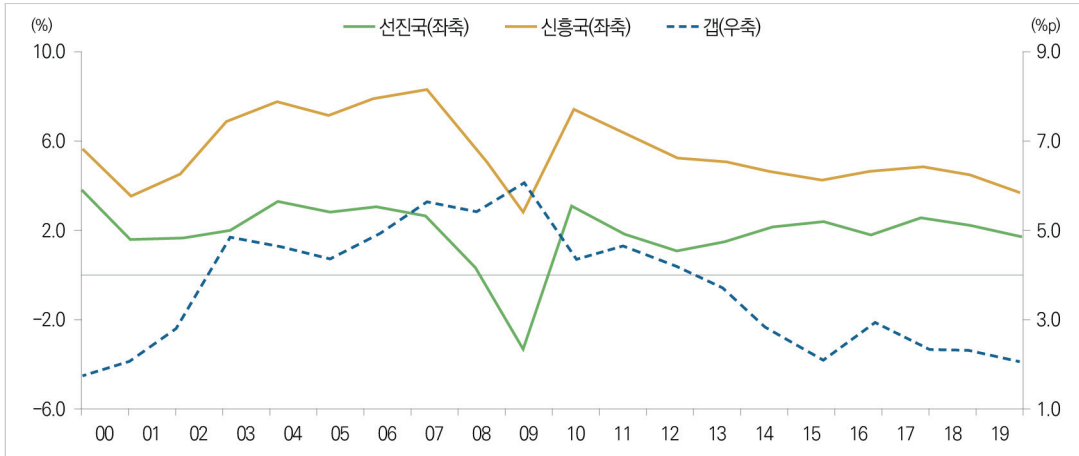
1) 2008년 말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2008~2010년 3년은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이후 내용에서 비교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대표적으로 유동성함정(expectation-driven liquidity trap)이론²⁾과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이론이 있다. Krugman(1998)은 유동성함정이 물가와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기대로부터 발생하는데 경제주체의 비관적인 기대로 인해 경제가 유동성 함정과 같은 상황에 빠지면 실질이자율을 충분히 낮출 수 없어 저성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구조적 장기침체이론은 낮은 물가와 제로금리제약으로 정책금리로는 자연이자율³⁾까지 낮출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중앙은행은 명목정책금리를 0%보다 낮출 수 없다. 이때 물가상승률도 낮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질이자율이 자연이자율에 미치지 못하여 과잉저축(총저축>총투자)이 발생하게 되므로 즉 총수요 부족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Summers(2015)는 완전고용 하에서도 총투자와 총저축을 일치시키는 균형이자율(자연이자율)이 마이너스(-) 이자율 일 수 있다고 주장⁴⁾하였으며, Krugman(2014)도 마이너스 자연이자율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의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실물경제와 괴리를 보이며 장기간 상승세를 보였다.⁵⁾ 이에 대해 구조적 장기침체이론에서는 자연이자율이 마이너스에 있으면 미연준이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과잉유동성이 자산시장을 과열시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산시장의 과열과 버블 발생·붕괴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경제 동향의 두 번째 특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성장률과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2008년에는 5.4%p에 이르렀으나 2019년에는 2.0%p에 그쳤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의 원인 중 하나로 신흥개도국의 대한 직접투자의 부진을 들 수 있다.

- 2) 경제주체들의 통화수요가 매우 높아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통화량을 추가로 공급하여도 차입을 통한 투자(기업)와 소비(가계)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경제주체가 채권과 현금을 완전대체재로 간주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3) 자연이자율(혹은 중립이자율)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실질이자율이며, 다른 표현으로는 경제 내 총저축과 총투자가 일치하는 균형이자율을 의미한다. 자연이자율은 현실에서 볼 수는 없으며 계량분석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한다. 한편 명목이자율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융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현실의 이자율이며,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 기대인플레이션을 차감하여 구한다.
- 4) 자연이자율이 이처럼 낮게 하락(심지어 마이너스 자연이자율의 원인)하는 원인에 대해서 Eggertson and Mehrotra ("A Model of Secular Stagnation," NBER Working Paper, No. 20574, 2014)는 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축소노력이 초래한 과잉저축 ② 저출산에 따른 인구성장을 둔화 ③ 소득계층간, 세대간 소득불평등의 확대 ④ 투자(특히 IT산업)의 상대가격 하락이 결국 투자지출을 축소시키는 경향을 들고 있으며, 또한 Summers(2015)는 추가로 ⑥ 글로벌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⑦ 연금저축의 확대 ⑧ 국제적인 외환준비금의 축적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 5)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월평균 기준 2011년 1월 11,802포인트에서 2020년 1월 28,880포인트로 10년간 약 2.45배 상승하였다.

[그림 II-2]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 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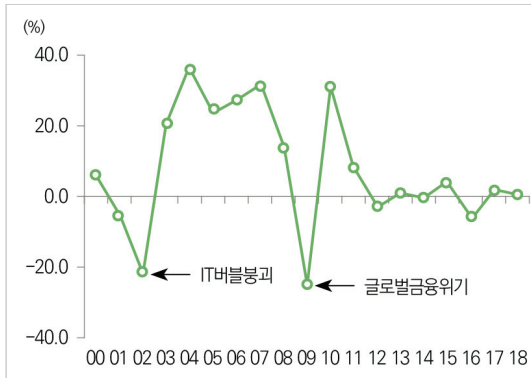


자료: IMF

2000~2007년 중 신흥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금융투자 제외)는 연평균 15.0% 증가 하였으나 2011~2018년에는 1.0%에 불과하였다. 선진국 기업들은 미국 IT버블 붕괴(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의 충격이 발생한 해를 제외하면 2000~2008년 중에는 꾸준히 직접투자를 확대해왔다. 선진국의 직접투자는 생산과 수요의 세계화를 촉진시켰는데 선진국은 신흥개도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가격을 낮추고, 신흥개도국은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여 수출확대 및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⁶⁾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접투자액이 정체되었다는 것이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세에 비해 세계무역량 증가의 둔화세가 더욱 빠르다는 점이다. 세계GDP증가율 대비 세계무역증가율의 배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에는 1.7배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는 1.0배로 하락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직접투자의 정체가 신흥개도국의 수출증가세를 약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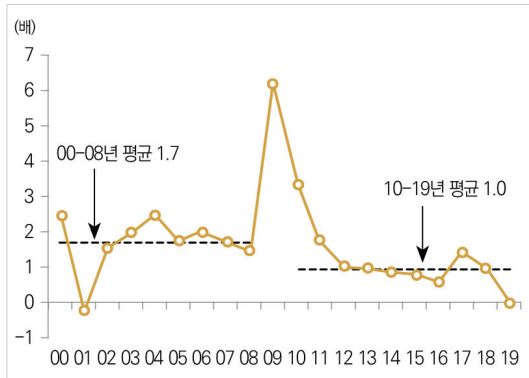
6) 이를 통해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과 소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었다. 가치사슬은 기업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생산이 국제적으로 분업화됨에 따라 한 상품에 내재된 부가가치 역시 사슬처럼 국제적으로 얹혀 있는 구조를 글로벌 가치사슬이라고 부른다.

[그림 II-3] 신흥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



자료: UN무역개발협회의회(UNCTAD)

[그림 II-4] 무역증가율/세계GDP증가율 추이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세 번째 특징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경 중국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높은 감염위험성과 고령층의 높은 치사율로 인해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역조치에 나섰다. 각국의 방역과정에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는데 4월 14일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3.0%로 전망된다고 발표하여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상하였다. 특히 미국 -5.9%를 비롯하여 유로지역 -7.5%, 일본 -5.2%로 전망하여 선진국 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던 중국경제도 전년대비 1.2% 성장하는 데 그쳐 지난해 6.1%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게 된 요인으로 첫째, 격리, 지역봉쇄 등을 통해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공급충격이 매우 컸다는 점이다. 둘째,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실업 증가와 투자 감소로 총수요 감소도 동반되었다. 셋째, 산업 활동과 총수요가 위축되자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폭락한 영향도 있었다. 특히 유가의 하락은 중동 국가들의 총수요 감소 뿐만 아니라 동 국가들이 운용하는 국부펀드의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양방향으로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한층 더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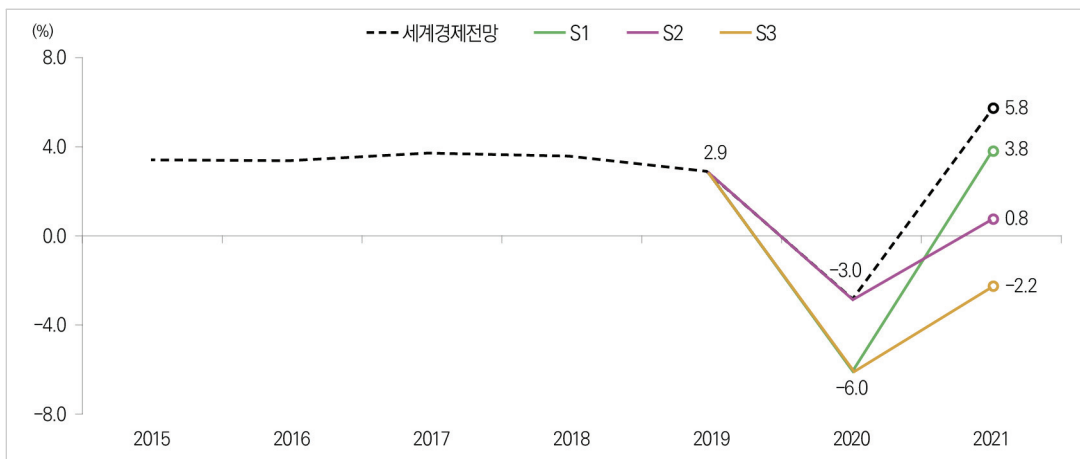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하는 불확실성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IMF에 따르면 팬데믹의 확산경로와 종식시점, 방역대책의 효율성(봉쇄 지속기간), 집단면역의 가능성, 글로벌 가치사슬의 훼손 및 복구 여부, 글로벌 금융여건, 기업투자지출의 변동, 가계의 소비행동방식의 변화, 기업과 가계의 경제에 대한 신뢰성, 원자재가격의 변동성, 치료약 혹은 백신 개발 시기 등을

불확실성의 예로 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어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음을 인식한 IMF는 세계경제전망(2020년 4월 발표)에서 기본 전망 이외에도 추가로 3개의 시나리오별 세계경제의 성장경로를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기본 전망(베이스라인)에다 추가로 각국별로 방역기간을 추가로 50% 연장하는 경우(시나리오1), 2021년 팬데믹이 재발하지만 다소 완화된 정도인 경우(시나리오2), 앞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반되는 경우(시나리오 3)에 따라 세계경제가 추가로 받는 충격을 추정하였다.

시나리오1에서는 2020년 약 -3%p, 2021년 약 -2%p 시나리오2에서는 각각 약 0%p, 약 -5%p가 기본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에 비해 추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시나리오1에서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20년 약 -6.0%, 2021년 3.8%, 시나리오2에서는 각각 -3.0%, 0.8%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나리오3에서는 기본 전망에 비해 2020년에 약 -3%p 추가 하락하고, 특히 2021년의 경우 시나리오 1, 2의 합보다 큰 -8%p 추가 하락하여 세계경제성장률을 2020년 -6.0%, 2021년 -2.2%로 추정하였다.

[그림 II-5] 시나리오별 2020~2021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IMF전망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성장률 경로가 상방향 보다는 하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팬데믹 재발이 방역능력 부족 등 다수의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세계경제의 충격은 각각의 요인들 보다 더욱 클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팬데믹을 올해 내에 종료시키지 못한다면 그 충격은 2023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중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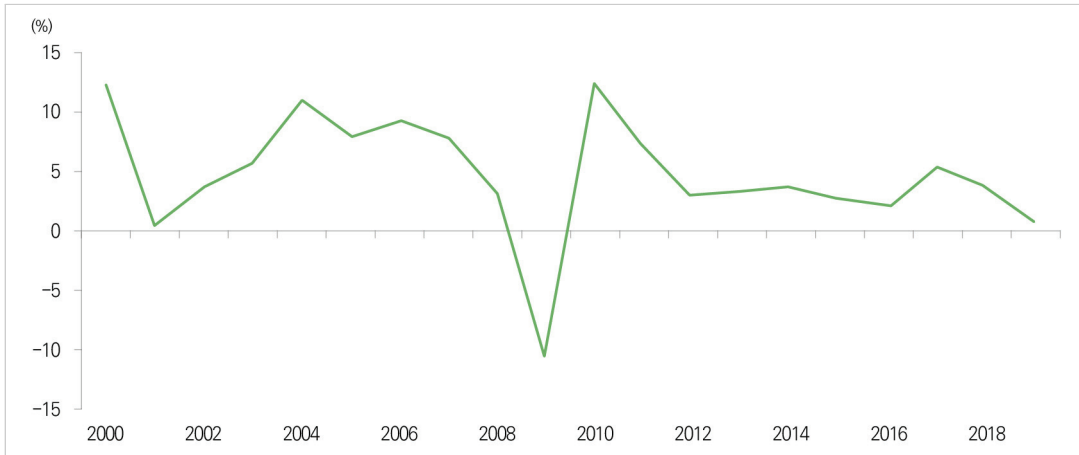
팬데믹이 올해 안에 통제되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된다고 해도 세계경제는 기존의 흐름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첫째,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그리고 이에 따른 저금리 현상은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연준도 역사적으로 전염병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자연이자율이 10년 이상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연이자율의 하락은 저성장과 저물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업 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기업부채는 중장기적으로 부채 상환부담을 높일 것이며, 이는 중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성향의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 둘째, 1990년대부터 선진국에 비해 두각을 보였던 신흥개도국들의 경제성장세가 향후에는 예전같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가격의 급등을 주도했던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및 직접투자 정체는 팬데믹 이후에 지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확고한 틀을 갖추게 된 글로벌 가치사슬이 팬데믹을 계기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고, 자연재해 등으로 부품공급이 중단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비용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공급중단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고 확대, 부품생산지역 다변화, 일부 생산시설의 자국 혹은 선진국 설치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세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자국이익 우선을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대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교역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신장률은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기간 동안 세계경제는 연평균 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연평균 3% 내외의 낮은 성장률로 경제 활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선진국을 대신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과 주요 신흥개도국도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저성장 탈피를 위한 방편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세계 교역질서를 훼손하는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자국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의 보복성 무역규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자국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동시에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촉발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교역질서가 훼손되면서 발생하는 세계교역량의 위축도 상당하다. 세계교역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기간 중 연평균 7.0%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3.2%로 하락하면서 세계교역신장률이 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6] 세계교역량 신장률 추이



자료: IMF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보다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국가 간 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는 점에서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무역장벽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은 1997년 10.8%에서 2010년 6.2% 수준까지 낮아진 반면 대표적 비관세장벽 중의 하나인 무역기술장벽(TBT⁷⁾의 경우, WTO에 전달된 통보문이 2015년 현재 총 1,989건 발행되어 15년 전인 2000년(632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7) TBT: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WTO TBT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기술규정, 인증 등을 제·개정할 때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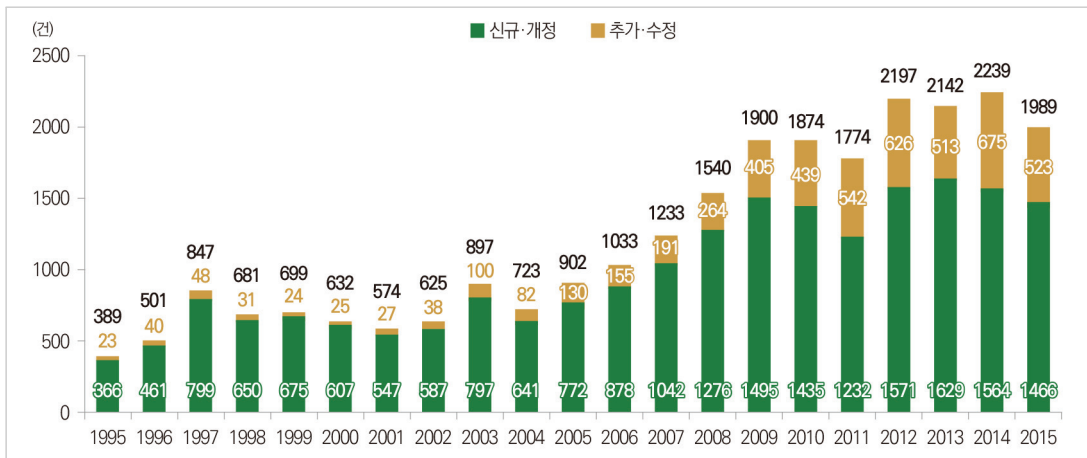
[표 II-1]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 추이

(단위: %)

1997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10.8	10.1	9.4	8.3	7.3	7.1	6.2	6.8

자료: World 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

[그림 II-7] 연도별 무역기술장벽의 통보문 발행 건수



자료: WTO

이와 같은 무역기술장벽 외에도 반덤핑⁸⁾, 세이프가드⁹⁾, 상계관세¹⁰⁾ 등이 보호무역의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2016)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각국이 취한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비중은 WTO체제 출범 당시에는 세계 교역상품의 1%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2.5%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으로 볼 때, 향후에도 보호무역 조치를 받는 교역품목의 비중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8) 덤핑으로 판매되고 수입국가 경쟁상품 생산자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할증관세

9)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10)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

전 세계 대한민국 수입규제 현황(2020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국가의 수입규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월 3일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반덤핑이 157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세이프가드(45건), 상계관세(9건) 순이다.

[대한 수입규제 현황]

분류	건수	반덤핑 (Anti-Dumping)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세이프가드 (Safeguard)
조사중	36	21	1	14
규제중	175	136	8	31
합계	211	157	9	45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전 세계 대한민국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29개국이며 건수로는 211건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3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순이다.

[국가별 대한 수입규제 현황]

분류	건수	미국	인도	터키	중국	캐나다	브라질	태국	호주	인니	말련	기타
조사중	36	6	11	1	3	-	-	1	-	3	1	10
규제중	175	37	21	14	14	13	10	6	5	8	4	43
합계	211	43	32	15	17	13	10	7	5	11	5	53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품목별 규제건수를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가장 많은 98건이며 화학(43건), 플라스틱·고무(25건), 섬유(18건), 전기전자(8건), 기계(3건) 등으로 순위를 형성하고 있다.

[품목별 대한 수입규제 현황]

분류	건수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고무	섬유	전기전자	기계	기타
조사중	36	11	7	5	2	1	1	9
규제중	175	87	36	20	11	7	2	12
합계	211	98	43	25	13	8	3	21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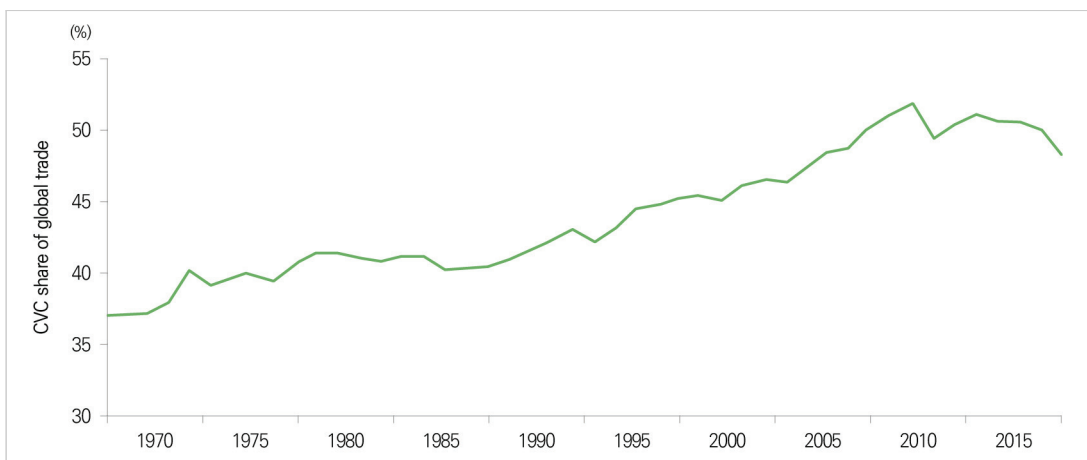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이란 제품의 설계와 부품,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각 국가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제라고 정의된다.

2000년대 들어 다국적기업들이 비용절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아웃소싱 등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분업화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GVC는 상품·서비스 생산의 각 단계가 세계 여러 최적입지국가에서 수행되면서 각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사슬처럼 국제적으로 얹혀 있는 현상이며 일반적으로 글로벌 생산시스템이 기술선도국가의 핵심부품을 개발도상국에서 조립 및 가공하는 수직분업(vertical specialization)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GVC의 확산은 교역, 생산성, 고용 측면에서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즉 GVC와 연계된 교역신장은 세계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즉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은 국가간 생산분업을 통해 교역규모를 확대시키고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과정에서 완제품 및 중간재 교역이 활성화되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으로 국가간 기술전파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시장선도적인 다국적 기업이 GVC 확산을 주도하면서 생산분업 네트워크를 통해 신기술, 경영기법, 생산의 전문화·효율화 등의 노하우를 전파하였다. World Bank(2017)는 GVC 참여도가 10% 상승할 때 생산성이 1.7% 증가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고용측면에서 GVC 확산이 GVC 참여국의 고용구조를 변화시켰다. GVC 확산은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반면 이로 인해 대외경쟁력이 하락한 산업의 고용은 감소하였다.

세계교역확대와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세계경제성장을 촉진하였던 글로벌 GVC의 확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산세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GDP에서 GVC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로 정의된 GVC 참여도(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GVC참여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상승하면서 2008년 14.1%까지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VC참여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13.2%까지 내려왔다.

[그림 II-8] 세계교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이와 같은 GVC의 약화 배경으로는 크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변화, 선진국과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 축소 등이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GVC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보호무역 기조 강화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2012년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각국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최우선주의’에 토대를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로 인해 1995년 이후 WTO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제무역체제의 기초와 자유무역기조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 교역품 중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조치의 적용을 받은 품목의 비중이 2014년 2%에서 2015년에는 2.5%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국가 간 GVC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GVC분업의 확산을 제약하였다. 일례로 국경 통과 때마다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무역제재가 적용되면 그 부정적 효과는 증폭되게 된다. 실제로 2012~2017년 중 교역상대국의 무역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에서 GVC참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 변화도 GVC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신흥국에서 수입품 국내대체가 가능해지면서 기술선도국의 핵심부품을 신흥국에서 조립하는 수직분업 체제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중국 및 아시아 주요국의 대외의존도(수출입/GDP)는 각각 2008년의 66%, 89%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중국 등에서 수입품의 국내대체가 확대됨에 따라 수직적 분업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제조업의 후방 GVC 참여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기술선도국가의 핵심부품을 신흥국, 즉 중국 등에서 조립·가공했지만 현재는 중국 등에서 수입품의 국내대체가 확대됨에 따라 수직분업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제조업의 GVC참여도 하락을 불러왔다.(최기산·장태운, 2018). 중국의 경우 저부가가치 조립가공 중심의 무역에서 고부가가치 중간재 국내생산·수출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지정하여 확대해 왔으며 2011.3월 단순조립 가공무역 탈피 계획, 2011.11월 국내조달 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신흥국의 가계 구매력 증대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생산 제품을 재수출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한 것도 생산분업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선진국과 신흥국간 생산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GVC네트워크에 참여할 유인이 축소되었다. 중국, 인도 등의 임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한 반면 선진국의 인건비 부담은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 발전, 생산공정 자동화 등으로 축소되었다(최기산·장태운, 2018). 다국적 기업들이 비용여건 변화에 맞추어 GVC 분업정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조공정, 비즈니스 모델 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등 비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신흥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선진국의 해외진출기업 회귀(리쇼어링) 사례는 증가했다.

라.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다보스포럼)에서도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올랐다.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한 '2020 세계 위험 보고서'에서는 '발생 가능한 세계 위험 요인' 1~5위를 모두 환경문제로 선정했다.¹¹⁾

환경규제는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고 복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이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을 방지·개선하는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growth)을 위해 투자하는 측면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국제환경규제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온실가스 감축 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고, 2011년 POST-2020 신기후협상을 개시하여 2015년 파리 협정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약을 맺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여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여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감축목표를 유연하게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억 톤(7.09억 톤CO₂eq.; 이산화탄소 환산톤) 수준인데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¹²⁾

[표 II-2] 국제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	시기	주요 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채택	1992.6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노력 - 모든 당사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 * 우리나라는 1993.12에 가입

11) World Economic Forum("The Global Risks Report 2020," 2020)은 발생 가능한 세계 위험 요인(top 5 global risks in terms of likelihood) 1~5위를 이상기후, 기후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태계다양성 감소, 인간에 의한 환경 재해로 선정했다.

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협약	시기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	1997.12	-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들(중국과 미국 제외 선진국)이 1990년 대비 평균 5.2% 의무 감축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자발적으로 의무 부담
파리협정 (POST-2020 신기후체제)	2015.12	-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나 자발적 감축 촉구 - 감축을 포함한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포괄 - 2020년부터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에 대해 최소 1,000억 달러 지원 예정 *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홍보포털,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협상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대기오염 총량제(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경제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고 있다. 대기오염총량제는 2008년 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2020년 4월부터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이다. 사업장별 5년 단위로 연간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할당하여 매년 이행 평가를 통해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한다.¹³⁾ 질소산화물 총 할당량은 대기오염총량제를 시행한 후 2008년 65,308톤에서 2018년 37,178톤으로 감소했으며, 황산화물 총 할당량은 2008년 28,090톤에서 2018년 25,670톤으로 감소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감축체제로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¹⁴⁾ 지난 2008~2018년 배출권 거래는 대체로 증가해왔으며 거래단가도 2018년 이후 상승중이다.

사업장 대기환경규제 중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 이외에도 배출 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화학, 철강 공장의 경우 각 사업장의 공정 특성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다르므로 효과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Associated Emission Levels, BAT-AEL)을 적용하여 규제한다. 예를 들어, 철강제조업의 경우 소결로, 전기로, 연마시설 등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각 공정별로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은 일괄적인 농도 규제 방식에 비해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13)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주요 내용,” 2019.

14)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최근 포장재 폐기물 문제도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등 선진국에서는 포장재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를 ‘자원순환’의 범주에서 관리하여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젤협약¹⁵⁾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바젤협약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¹⁶⁾ 포장재 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을 통제하여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데 각국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

플라스틱의 생산·사용·처리·분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화폐적 가치로 나타낸 것을 ‘플라스틱의 자연자본 비용(natural capital cost of plastic)’이라고 한다. 유엔환경계획에서 2014년 추산한 전 세계 소비재 산업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자연자본 비용은 76.9조 원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플라스틱 자연자본 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⁷⁾

유럽연합은 포장재 폐기물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 회원국이 보증금 환불 제도, 포장재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수거 제도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하여 소재별로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¹⁸⁾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 포장재 지침을 반영하여 포장재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의 유통과 처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 ‘신포장재법(VerpackG)’을 발효하였다.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과 각 사업장의 준수 여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포장재 등재재단(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이라는 중앙 관할 기관을 신설하였다. 게다가 독일 내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재활용업체를 지정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포장재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폐기물 감축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으나 국내 수출기업이나 현지 진출 제조사에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녹색경제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녹색경제의 달성을 위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금융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탄소 저감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2012년에는 녹색투자은행을 설립하고 2019년 7월 녹색금융전략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 이후 탄소 배출을 40% 이상 저감했으며 저탄소 사업 관련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는 등 영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녹색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5)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6) 유엔환경계획(UNEP) 홈페이지

17) 유엔환경계획(UNEP), “Valuing Plastics: The Business Case for Measuring, Managing and Disclosing Plastic Use in the Consumer Goods Industry,” 2014.

18) 유럽연합 홈페이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여 세계적인 지구환경개선의 노력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환경 및 기후재난은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는 장기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2. 불확실성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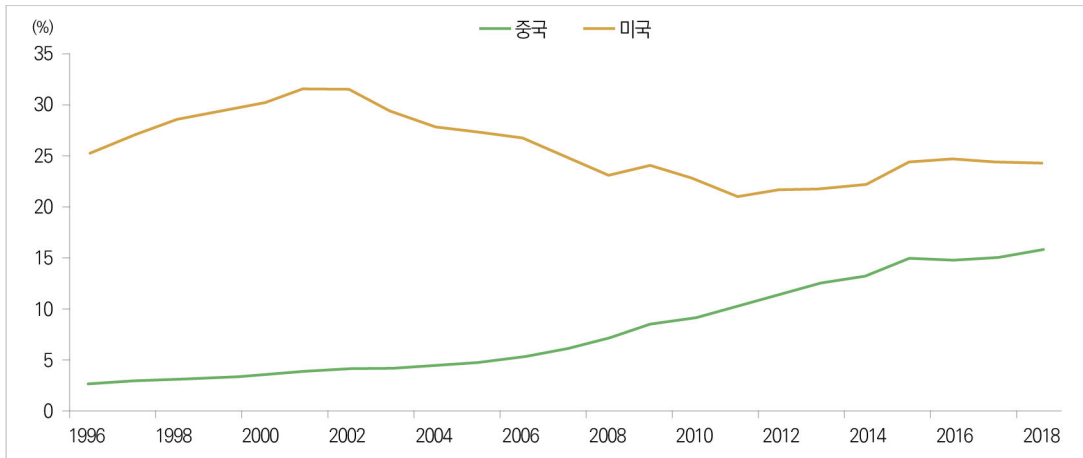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재확산 여부, 치료제·백신 개발 시점,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세계 경제는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 무역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둔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코로나19와 결합한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본 항목에서는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미·중 갈등, 글로벌 부채, 기타 지정학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경제 규모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세계 경제의 가장 주요한 불확실성 확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주요한 하방 위협 요인으로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 심화’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완곡한 표현을 통해 미·중 갈등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부상과 그 동안 미국에 의해 제기되어 온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과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농업개혁, 국유기업에 대한 경영자율권 확대,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인프라구축, 금융 및 외환 부문의 시장경제 도입 등의 경제정책을 통해 연평균 9.5%의 고도성장을 실현하였다. 2018년 기준 중국의 명목GDP는 13.3조 달러로 미국의 20.5조 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림 II-9] 미국과 중국 GDP의 세계GDP대비 비중 추이



자료: CEIC

트럼프 행정부 이전 미국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교역 증가를 통한 상호 이익 증대라는 전략 아래 중국의 성장을 용인하였다. 중국의 GDP 규모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속하게 확대되어 2018년 세계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7%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1년 830억 달러에서 2018년 4,19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환율조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양국의 이익이 상충되는 긴장관계가 깊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7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 누적되어왔던 미·중 간의 구조적 긴장관계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보고서¹⁹⁾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함과 동시에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여 세계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최근 중국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실물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경제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몽(中國夢)'을 표방한 시진핑 주석이 경제개혁정책의 주요 축으로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등을 추진하자 미·중 간 전략적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제조 2025'는 리커창 총리가 2015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 발표한 것으로 정보통신, 전자부품 및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기반을 건설하여 204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조업

19)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

1위가 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35년 간(2014~2049년)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하여,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와 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²⁰⁾

미·중 무역 분쟁은 2018년 7월 미·중의 상호 추가관세부과를 계기로 본격화되어 지난 2020년 1월 양국이 ‘미·중 1단계 경제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때까지 1년 6개월 간 지속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7월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여 대중 수입품 34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개시하였고, 중국은 이에 상응하여 대미 수입품 340억 달러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촉발되었다. 2019년 10월 양국 간 1단계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미국은 중국에 5차례에 걸쳐 추가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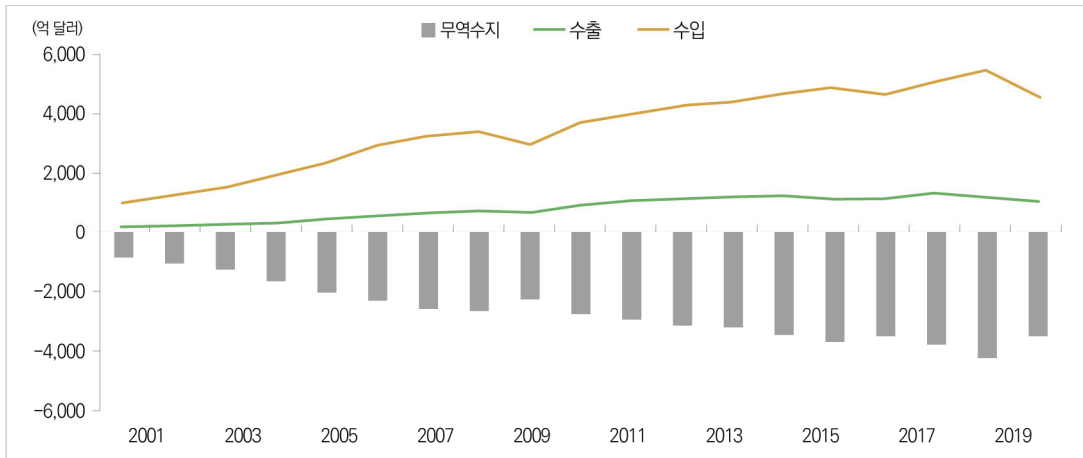
[표 II-3] 미·중 무역 분쟁 주요 일지

시 기	美 → 中 관세부과 및 주요 조치	中 → 美 관세부과 및 주요 조치
2018. 7	340억 달러 추가관세(818개 품목, 25%)	340억 달러 추가관세(545개 품목, 25%)
2018. 8	160억 달러 추가관세(279개 품목, 25%)	160억 달러 추가관세(333개 품목, 25%)
2018. 9	2,000억 달러 추가관세(5,745개 품목, 10%)	600억 달러 추가관세(5,207개 품목, 5~10%)
2018. 12	향후 90일간(‘19.3.1까지) 추가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2019. 5	2,000억 달러 추가관세 (5,745개 품목, 10% → 25%)	600억 달러 추가관세 (5,140개 품목, 5~10% → 5~25%)
2019. 5	미국기업의 화웨이와 거래금지 행정 명령	-
2019. 6	추가관세부과 보류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오사카 G20)	
2019. 8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2019. 9	1,120억 달러(15%) 추가관세부과	750억 달러(5~10%) 추가관세부과
2019. 10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제한된 합의) 도달 발표(워싱턴)	
2019. 12.	트럼프 1단계 무역합의안 승인	미국산 농산물 구매 및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등 약속
2020. 1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	-
2020. 1	미·중 1단계 합의안 서명(1.15) 및 발효(2. 14)	
2020. 2	1,120억 달러 추가관세를 인하(15% → 7.5%)	750억 달러 추가관세를 인하(5~10% → 2.5~5%)

자료: 산업통상부, 무역협회

20) 2049년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림 II-10] 미국의 대중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무역협회 DB

최근에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친원자 공방을 벌이는 등 미·중 분쟁의 전선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내적으로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대중 추가관세 부과 중지 및 국제공조 강화 등 요구에 직면하고 있지만 강경한 기조를 고수하며 미·중 관계를 긴장 완화보다는 갈등 재격화의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1,2위 교역상대국인 미·중 갈등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두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무역, 첨단기술, 자본시장, 외교 등의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하며 안정적인 무역환경과 금융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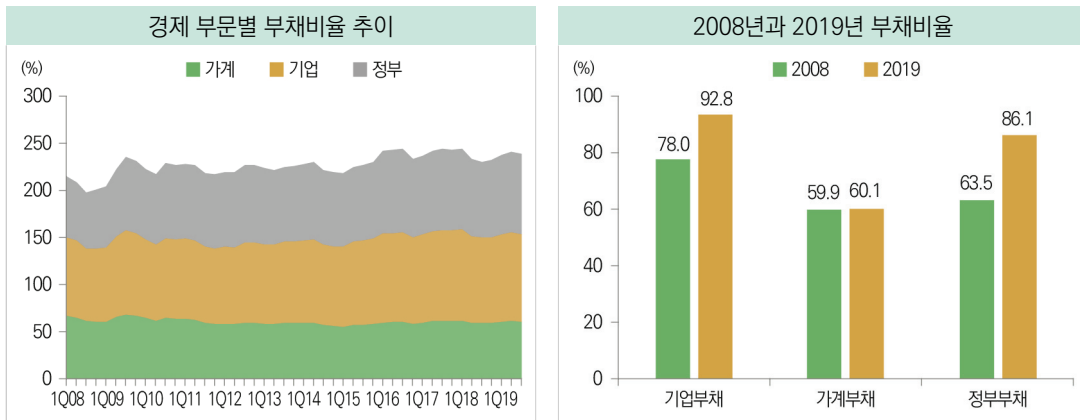
나. 글로벌 부채확대 리스크

세계 주요국의 부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재정위기 충격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한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총수요진작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팽창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신용확대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를 진작시키고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주요국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총부채/GDP 비율은 2008년 말 201.5%에서 2019년 3/4분기 239.0%로 37.5%p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과 정부부문이 부채증가를 주도하였으며,

동기간 가계부채 0.2%p, 기업부채 14.8%p, 정부부채 22.6%p 증가폭을 보였다. 이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진국의 총부채는 국채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정부부채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 등 신흥국의 총부채는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II-11] 세계 경제의 부문별 GDP대비 부채 비율



주: 1. 가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은 비금융기업, 정부는 일반정부 기준

2. 2008년은 4/4분기 말과 2019년은 3/4분 말 기준임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Total Credit DB

[그림 II-12]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의 금융위기 전후(2008년과 2019년) 부문별 GDP대비 부채 비율



주: 1. 가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은 비금융기업, 정부는 일반정부 기준

2. 2008년은 4/4분기 말과 2019년은 3/4분 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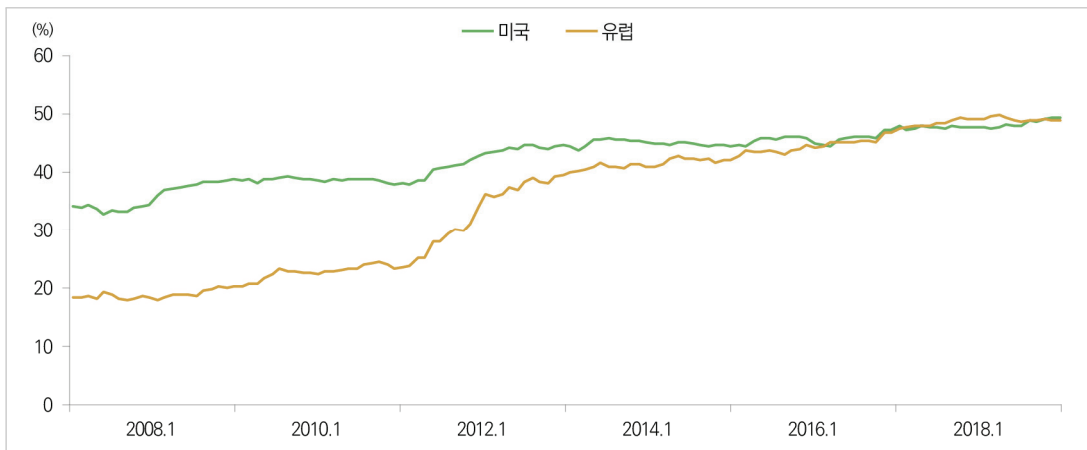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Total Credit DB

최근 세계 경제는 2017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통화당국이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 자금시장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금융여건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중국 등 일부 신흥개도국에서 정부부문, 기업부문,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 취약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팽창적인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완화적인 금융여건은 과도한 금융위험 선호를 통해 가계나 기업의 금융 취약성을 축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당국은 경제활동 둔화와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장기간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은 일정한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위험하고 비유동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었다. 그 결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부채 증가와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기업 부문의 금융 취약성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보험사, 투자펀드, 연기금 등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위험자산 및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는 향후 경기 하향 충격의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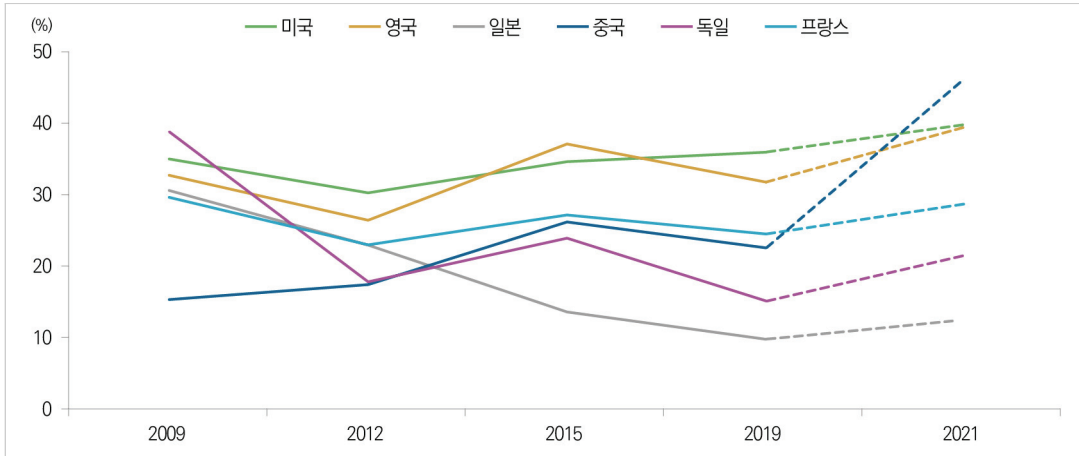
[그림 II-13] 투자등급채권에서 BBB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IMF, GFSR(2019. 4), Chap. 1 [Figure 1.8] 자료 재구성

IMF는 지난 2019년 10월 발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시에 경험한 경기침체의 절반 수준(금융위기시 GDP 감소의 절반 수준)의 경기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채 위험에 처한(debt-at-risk)' 기업 부채(기업이 수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부채 혹은 이자보상비율 ICR이 1보다 작은 기업의 부채)가 1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 주요국 전체 기업부채의 약 40%에 달하는 수준으로 세계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림 II-14] 경기침체 충격 시 부채위험 기업(ICR<1)의 부채 비중 전망



주: 점선은 금융위기 시 GDP감소의 절반 수준의 경기충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IMF가 기업채권 평가모형을 이용해 추정 전망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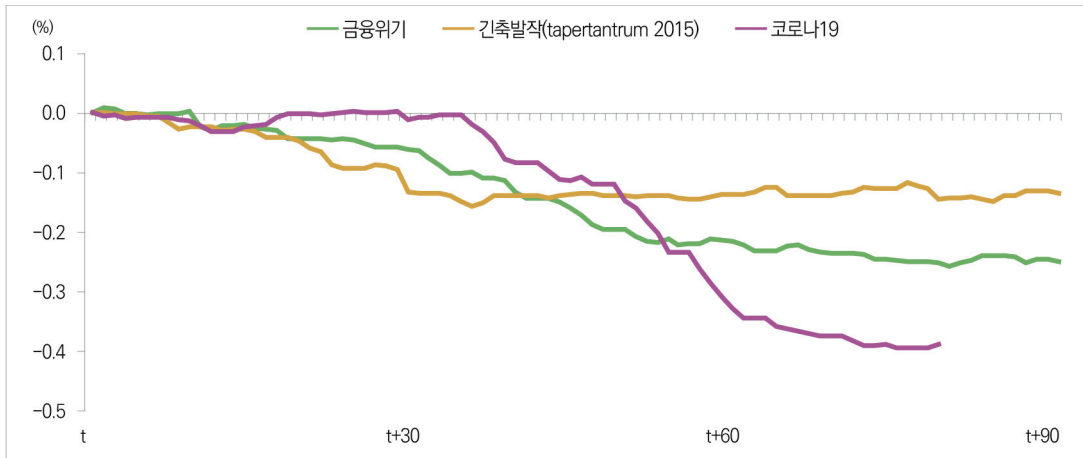
자료: IMF, GFSR(2019. 10), Chap. 2 [Figure 2.8] 자료 재구성

또한 선진국 경제의 낮은 이자율은 투자자본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흥국의 대외부채가 2008년 신흥국 수출의 100%에서 2019년 16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외부채/수출 비율이 300%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세계 금융시장 여건이 급속히 경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 국가의 부채상환 연장(rollover) 위험과 부채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도한 부채를 가진 국영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금융시장에 접근하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은 세계금융시장에 전례 없는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발전하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위험채권, 레버리지 론, 사채 등에 대한 신용위험이 폭등하였다. 석유가격은 수요둔화와 OPEC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합의 실패 등의 영향으로 폭락하면서 시장의 위험기피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심화시켰다.

세계 금융시장은 전례 없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세계 미달러 시장을 중심으로 단기 자금조달 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러나 미 연준과 행정부, 각국 정책 당국의 코로나19 위험에 대응한 과감한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투자심리는 안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및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은 기존에 축적되어왔던 금융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신흥국은 급속한 자본유출로 인해 최악의 상황(perfect storm)에 직면해 있다. 빠르게 유입되던 외국자본이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더 이상 대외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신흥개도국의 대외 부채 조달 능력의 상실은 채무부담이 크거나, 신용이 낮은 채무자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결국 채무 구조조정 증가로 이어지고 현재 존재하는 부채 해결 체계에 커다란 시험이 될 것이다.

[그림 II-1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흥국에서의 외국 자본 유출 추이(GDP대비 비율)



주: 코로나18로 인한 자본유출은 2020. 1. 21일을 기점으로 추정된 것임

자료: IMF, GFSR(2020. 4), Chap. 1 [Figure 1.8, panel 1] 자료 재구성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자본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주식 가격 하락이 재현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간의 경제활동 중단은 부채 수준이 높은 기업이나 가계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하면 주요국 은행들은 현재 보다 나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직전보다 많은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과감한 정책수단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신흥국에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신용대출 손실이 커질 경우 은행 복원력은 사리지고 경제에 신용을 조달하는 능력이 소진되어 경제 둔화가 가속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다. 국제유가 및 브렉시트

(1)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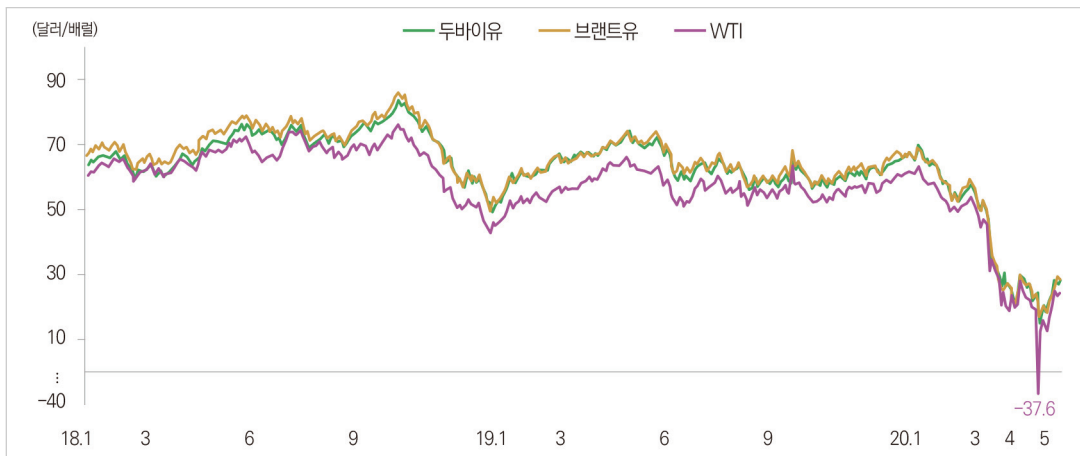
국제유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0년 3월 OPEC+²¹⁾의 감산합의가 결렬되면서 원유의 초과공급이 나타나면서 배럴당 20달러대 까지 하락하였다. 2020년 3월말 기준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가격은 각각 배럴당 23.3달러, 21.5달러, 20.5달러를 기록하면서 2015~2016년 저유가 기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4월 13일 OPEC+가 2022년까지 하루 6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둔화와 원유 저장공간 부족문제 등으로 4월말 배럴당

21) OPEC+는 OPEC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회원 산유국 10개 나라로 구성(비회원 산유국에 포함된 국가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 수단, 남수단) 되었다.

20달러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WTI 가격은 원유 소비 감소와 원유 저장탱크 부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5월 중 인도될 물량의 인수를 꺼리면서 4월 20일 기준 배럴당 -37.6달러로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당초 국제유가 전망기관들은 2020년 중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낮은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요 둔화 및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기존 전망수준을 상당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IA(미국 에너지정보청)는 5월 중 단기전망 보고서에서 WTI와 브렌트유 가격을 각각 배럴당 30.1달러와 34.1달러로 전망하여 지난 1월 전망보다 배럴당 29.2달러, 30.7달러씩 하향조정하였다. IMF는 4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의 2020년 평균 가격을 배럴당 35.61달러로 전제하였으며, 이는 2019년 대비 42.0% 하락한 수준이다.

[그림 II-16]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원유수요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중국의 수송부문 원유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²²⁾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20년 원유 수요 감소분의 상당부분이 수송연료 감소로 나타날 전망이다. EIA와 OPEC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성장 둔화로 원유수요 전망을 하향조정²³⁾ 하였으며, IEA

22) 전세계 수송부문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2003년 → 2019년): 제트연료(4% → 10%), 가솔린(5% → 12%), 디젤(6% → 13%)

23) EIA는 6월 단기에너지전망(STEO)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온화한 날씨 등으로 인해 올해 세계 석유수요를 전년 동기대비 810만 배럴 감소한 9,260만 배럴로 전망하였다. OPEC은 4월 발표한 월간석유시장보고서(MOMR)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 등으로 올해 세계 원유수요 증가분을 전월 전망대비 일평균 680만 배럴 감소한 9,282만 배럴로 예상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는 4월 전망에서 올해 세계 석유수요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전년대비 930만 배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IEA에 따르면 1/4분기 중 원유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및 국내 운송이 감소하면서 일평균 250만 배럴 감소하였으며 공장폐쇄와 대규모 격리 조치 등으로 중국이 전체 감소분 중 70% 이상(일평균 180만 배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EA에 따르면 2/4분기 중에는 중국의 상황이 개선되나, 유럽과 미국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유 수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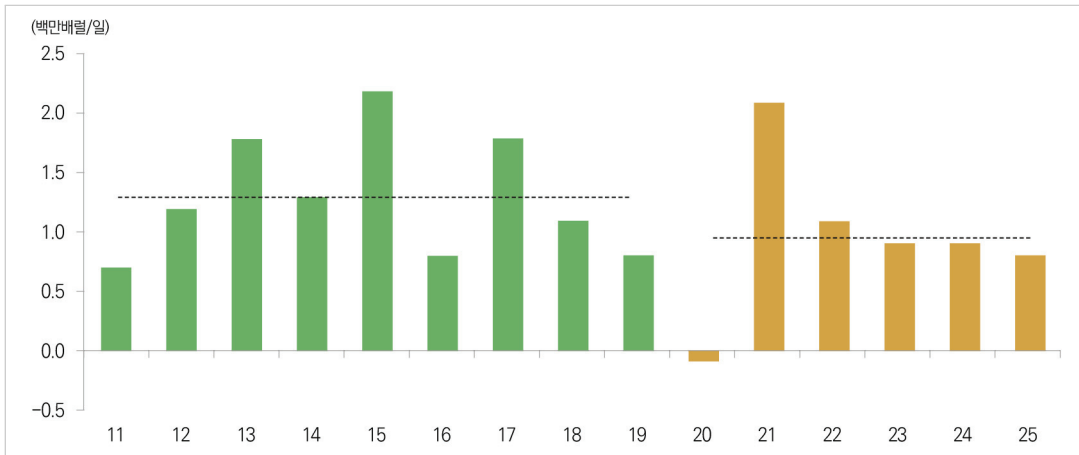
2020년 원유 공급은 OPEC+의 감산 재개 여부, 미국 셰일오일 생산, 베네수엘라와 리비아의 생산차질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OPEC+는 2020년 3월까지 2018년 10월 생산량 대비 일평균 170만 배럴 감산하는 합의를 이행 중이었으며 3월 회의에서 이를 연장하고 추가 감산에 대해 합의하려 하였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되었다. OPEC+의 감산합의 실패 이후 사우디와 러시아의 생산량 증대 발표로 국제유가는 걸프전 이후 최대 폭락(3개 유종²⁴⁾ 평균 전일대비 27.8%)을 기록하며 배럴당 30달러대 까지 하락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증대되었다. OPEC+는 결국 4월 14일 하루 97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요 위축과 이로 인해 과잉 공급된 원유의 저장고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미국 셰일오일은 최근 들어 증가속도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지난해 파이프라인 반출용량 부족에 따른 미국 Permian 지역의 병목현상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었으며 미완성 유전(DUC, Drilled but Uncompleted wells)의 완결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세를 지속하며 2020년 세계 원유시장 공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3월 중 유가의 큰 폭 하락으로 채산성 하락이 하락한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의 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유가하락으로 Capex(투자 및 개발 비용, capital expenditure)와 운영 리그(rig) 수를 축소하는 등 생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개월내 셰일오일 생산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2020년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 OPEC+의 감산합의 결렬 등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들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도 국제유가는 에너지시장 구조 변화로 원유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시장 다변화로 공급탄력성이 높아지면서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IEA는 내연기관 차량 및 전기 자동차에 효율표준이 새롭게 적용되고 디젤 및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면서 승용차 부문 원유 수요가 2020년대 말부터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디젤게이트 등의 문제를 겪은 EU 지역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점차 재편될 것이라는 점도 원유수요 둔화요인이다. 유럽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24)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개선, 재생에너지발전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원유수요가 증가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림 II-17] 2020~2025년 전세계 원유수요 전망



주: 점선은 각각 2011~2019년 평균, 2020~2025년 평균
자료: Oil 2020, IEA, 2020.3

원유의 공급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셰일오일과 비OPEC 국가의 공급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OPEC 공조의 불확실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업스트림 부문(원유의 탐사와 생산 부문) 투자 감소와 셰일오일 업체들의 파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유 업스트림 부문의 투자가 2015년과 2016년 각각 25%, 26% 감소하는 등 신규 유전 발굴 및 생산 등이 지연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2017년~2019년 유가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업스트림 투자는 4~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2014년 투자금액보다 여전히 3,000억 달러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²⁵⁾.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비용에 민감한 E&P(Exploration&Production) 기업들이 투자계획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공급차질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변화에 민감한 미국 셰일오일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공급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셰일오일은 중동지역의 전통적 원유에 비해 채굴과정에서의 생산비용이 높아²⁶⁾ 저유가가 오래 지속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자금난과 도산위험이 증대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25)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IEA, 2019.

26) 기존의 전통자원 개발과 달리 생산을 위해 많은 시추공이 필요하며, 저류층에 스팀이나 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중동지역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원유공급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인 리비아의 정정불안이 지속되면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동맹국들의 체제와 안보를 보장해주던 관계가 차츰 악화되면서 중동지역의 정세가 변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높아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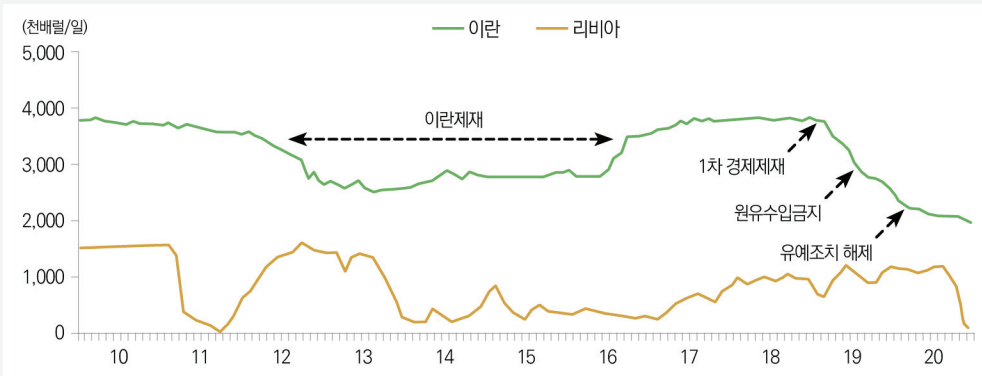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2020년 시작과 함께 이란에 대한 미군 공습으로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월 3일 미국의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공습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란은 이에 대해 보복대응으로 이라크 내 미군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보복을 자제하고 경제제재로 대응한다고 발표하면서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간 갈등은 오랜 역사가 자리 잡고 있으나 최근의 갈등은 핵협상과 파기, 경제제재 등이 중심에 있다. 2011년 이란의 핵개발 위협이 가중되면서 오바마 정부가 이란 경제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안보리 상임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은 이란과 핵협상(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체결하여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란 제재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란 핵협상을 비판하였고 결국 2018년 5월 이란 핵협상을 탈퇴하면서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상탈퇴와 이란 제재 복구는 이란과의 재협상을 통한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확인, 미국 셰일오일 수출 확대 전략, 이란의 중동내 영향력 확장 견제 등 다양한 이유가 제기되어 왔다. 2018년 6월부터 미국은 이란에 대한 1차 경제제재를 시작하여 이란 정부의 미 달러 구매 및 취득 제한, 금 또는 귀금속 교역 제재, 이란 리알화 거래 및 이란외 이란 리알화 사용 금지, 이란 자동차와 항공기 등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하였다. 11월부터는 이란 항만·해운·조선 관련 제재, 원유 관련 제재, 이란 중앙은행과 외국 금융기관간 거래 제재, 이란 에너지 부문 등을 제재하였다.¹⁾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원유생산은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이에 미국은 2019년 4월까지 8개 국가(한국, 중국, 인도, 일본,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에 대해 일시적으로 원유수출 금지를 면제하는 예외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19년 4월 예외 종료가 결정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란과 리비아 원유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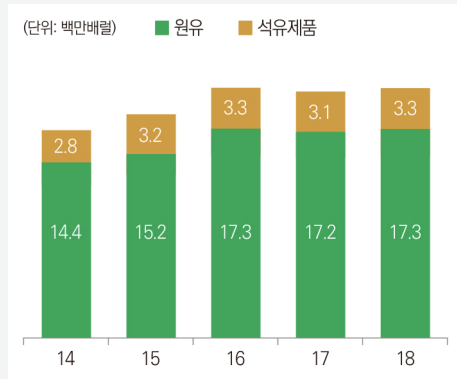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 “美 재무부 JCPOA FAQ 안내”,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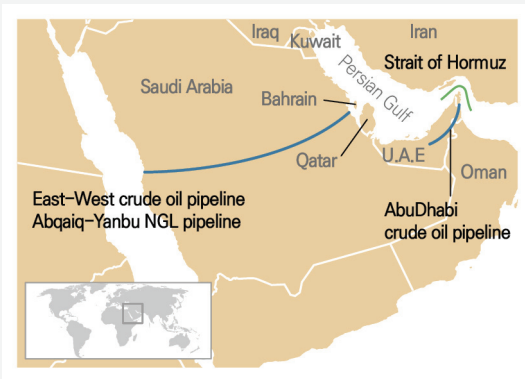
이후 사우디 유조선 피격사건, 이란의 미국 무인 정찰기 격추, 이란의 영국 유조선 억류 등 호르무즈 해협²⁾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었으며 2020년 1월 3일 이란의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미군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높아졌다.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와 미 군함간 군사적 긴장, 이란의 첫 군사위성 발사 발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과 미국간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재정난에 직면할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이 어려워질 가능성 등 양국간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송량 】



자료: IEA

【 호르무즈 해협 】



이란과 미국간 갈등 이외에도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인 리비아의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리비아는 장기화된 내전이 정치세력 간 무력충돌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인근 국가들까지 내전에 개입되면서 중동지역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 리비아 내전은 2011년 리비아를 42년 동안 통치해 온 카다피 정권의 지지 세력과 반정부 세력간 무장 충돌에서 시작되었으며, 카다피 정권이 붕괴되면서 무장세력들이 리비아의 패권을 놓고 본격적으로 대립하면서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유엔 중재로 통합정부(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GNA)가 수립되었으나, 리비아 국민군을 이끄는 칼리파 하프트르 장군 주도의 리비아국민군(Libyan National Army, LNA)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무력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러시아 등은 리비아국민군(LNA)을 지원하고 있으며, 터키와 카타르는 통합정부(GNA)를 지지³⁾하면서 주변국간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2020년 1월 터키가 리비아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터키와 러시아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 2) 오만과 이란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고 있어 원유 운송에 중요한 포인트로 2018년 기준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은 전세계 원유 소비의 약 21%에 해당하는 일평균 2,100만 배럴 규모이다.
- 3) 터키는 경쟁국가인 사우디 등 수니파 왕정 국가들의 영향력 봉쇄 목적과 동지중해에 영향력을 확대하여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리비아를 둘러싼 사우디/UAE, 터키/카타르 간 상황 】



자료: News of Asia, 202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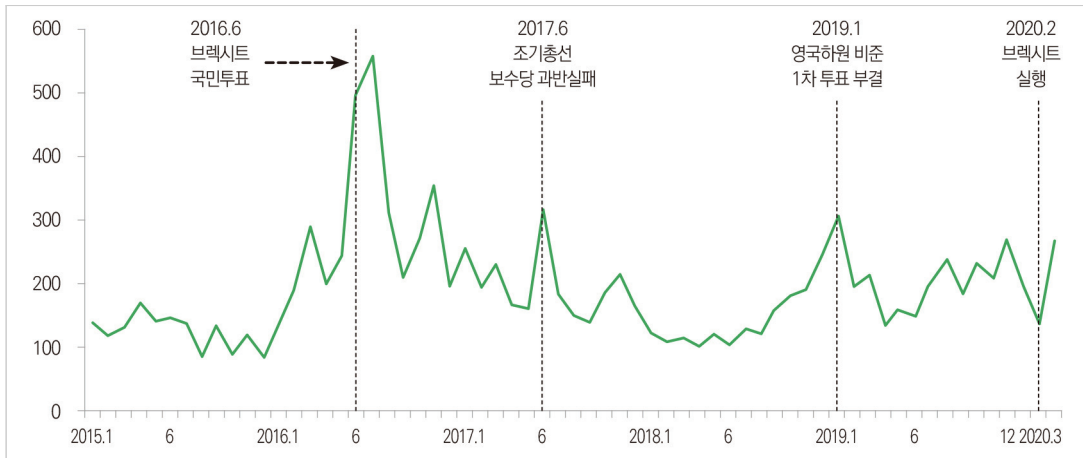
(2) 브렉시트

2020년 1월 31일 23시²⁷⁾에 공식적으로 영국의 EU 탈퇴가 비준되었다. 영국은 EU 탈퇴 선언과 동시에 EU 집행부와 산하기구에서도 탈퇴하게 되며 유럽의회의 영국의원 73명도 의원직 수행이 즉시 중단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준비기간을 설정하여 관세를 비롯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세동맹 등 무역관계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영국의 EU 탈퇴는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로 결정된 지 3년 7개월 만에 시행되었다. 국민 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가결되면서 영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고조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2017년 6월 조기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고, 2019년 1월 영국하원의 비준 투표가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합의까지가 여러 차례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19년 12월 조기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게 되면서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2020년 2월 영국은 EU를 탈퇴하게 되었다.

27) EU 브뤼셀 기준 2020년 2월 1일 0시, 한국 기준 2020년 2월 1일 08시

[그림 II-18] 영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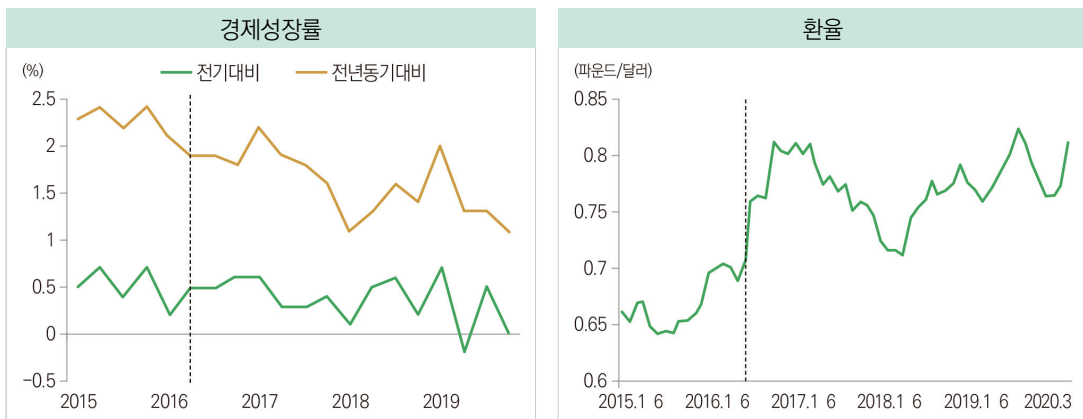


주: 베이커, 블룸, 데이비스의 불확실성 지수(Baker Bloom Davis Index of EPU)

자료: 베이커, 블룸, 데이비스의 Economic Policy Uncertainty 홈페이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7년 1.9%, 2018년 1.3%, 2019년 1.4%로 2017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환율 가치 또한 국민투표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 전반에 가져올 파장이 반영되고 있다.

[그림 II-19] 영국 경제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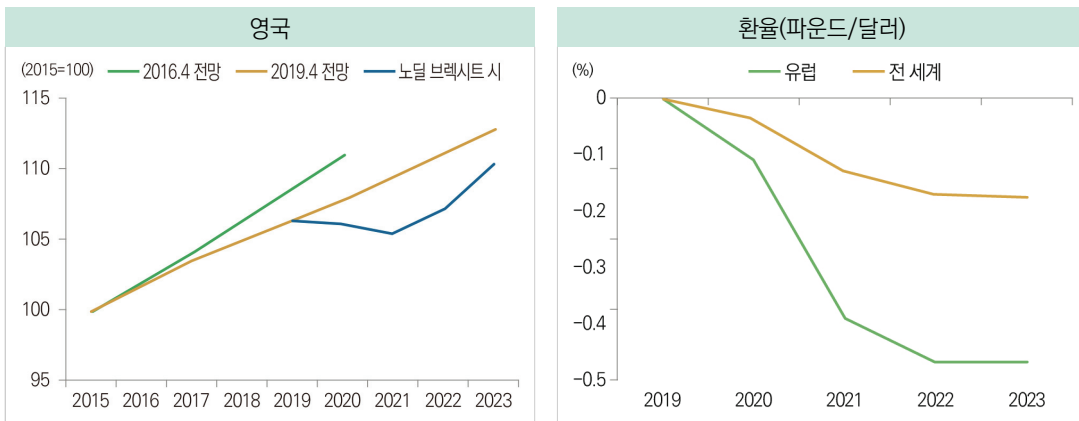
주: 각 그래프의 세로 선은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나타낸 것임

자료: Bloomberg

브렉시트 시행 이후 이행준비기간 동안 EU와의 세부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이행기 동안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 회원국)²⁸⁾는 관세 및 통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영국은 EU의 단일시장 접근과 관련하여 무관세 자유무역협정(FTA)을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영국이 EU의 높은 규제를 따를 것을 요구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행기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협상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영국의 존슨 총리는 낮은 수준의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2020년 12월말에 EU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FTA 체결이 없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실현되면 영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브렉시트 이후 2년에 걸쳐 영국 경제에 불황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EU, 전 세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EU와의 무역 관세율을 4%로 체결하고 여타 국가와는 2021년 이후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상황 하에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나리오(소프트 브렉시트)를 가정하였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느슨한 관세장벽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2021년까지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3.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U와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까지 각각 0.5%, 0.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재무부에서는 영국과 EU 사이에 소프트 브렉시트가 합의되면 장기적으로 GDP가 1.4%p 감소하는 효과, '노딜 브렉시트(하드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15년간 GDP가 9.3%p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II-20]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전 세계 실질GDP 변화(IMF 전망)



주: 브렉시트가 2020년 2월에 시행되었으므로 경제성장률 변화치를 재계산하였음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4."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8)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에는 현재 국경이 없으나 브렉시트 이행기 동안 물리적 국경 설치, 관세·통관 및 이동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2019), 정재원(2019), 강내영·안소영(2019) 등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수출 등 대내외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2019)와 강내영·안소영(2019)은 브렉시트 이후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04~4.97%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정재원(2019)은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의 발생으로 0.1%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2033년까지 약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책당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FTA를 2019년 8월 23일 타결하였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 이행기 동안에는 한-EU FTA가 적용되고 이행기 이후에 발효되어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기업의 교역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EU FTA의 양허를 한-영 FTA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무관세로 영국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I

제21대 국회 기간 중 한국경제 전망

1. 국내경제 여건
2.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3.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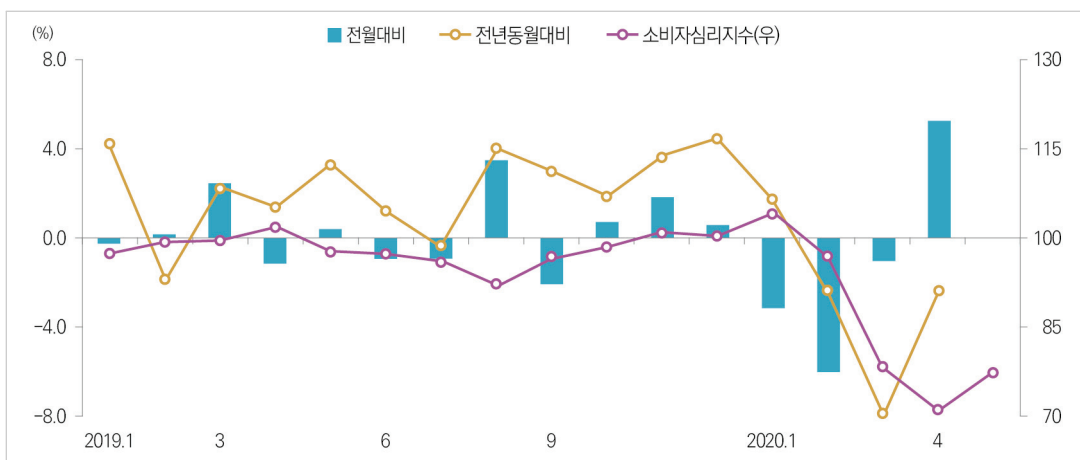
제21대 국회 기간 중 한국경제 전망

1. 국내경제 여건

가. 소비동향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관련 서비스업과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협상 우려 완화,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 경기관련 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제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및 수출부진 등으로 8월 중 92.4까지 하락하였던 소비자심리지수는 2020년 1월 중 104.2까지 반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월말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악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 하락하였다. 2월과 3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2월 -7.3p, 3월 -18.5p)으로 하락하였고 4월 중 7.6p 하락한 70.7을 기록하여 금융위기 보다 악화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III-1] 소매판매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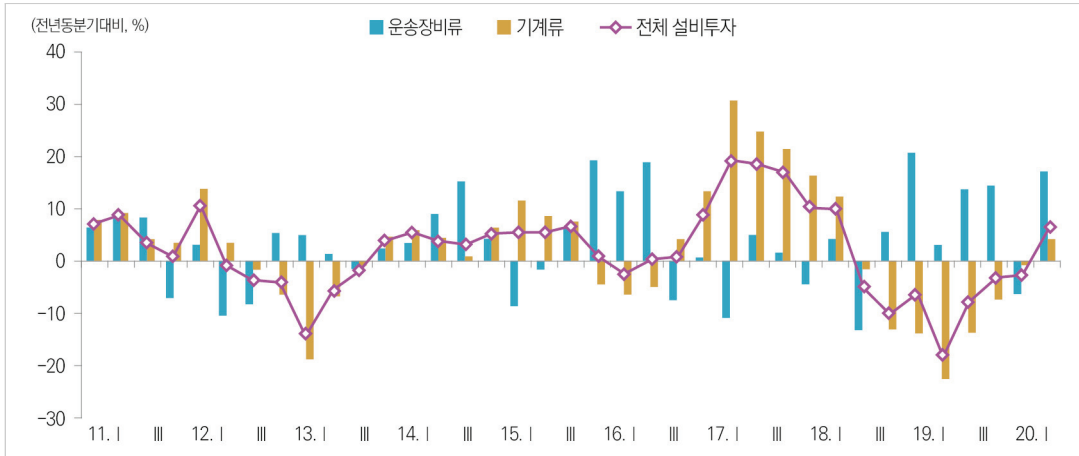
국내 소매업체에서 거래된 판매액인 소매판매지수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1/4분기 중 국내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9%, 전기대비 -6.4%를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소매판매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3월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비주체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전년동월대비 8.0% 감소하여 외환위기 당시 1998년 11월(-12.1%) 이후 가장 큰 감소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당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복 등의 구매를 지연하면서 1/4분기 중 신발 및 가방, 의복 판매 등 준내구재 판매는 관련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전년동기대비 -19.0%)을 나타냈다. 비내구재판매의 경우 방한 관광객 감소¹⁾ 등으로 화장품 판매가 큰 폭 감소(전년동월대비 -10.7%)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4월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5.3%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2.2%를 기록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설비투자 동향

설비투자는 2019년 하반기 들어 상반기에 비해 감소폭이 완화되었으나 반도체 등 IT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었다. 자본재 형태별로 보면 기계류는 반도체 등 IT경기 회복 지연, 비IT 제조업 업황 개선 미흡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감소세 지속되었고, 운송장비 투자는 하반기 들어 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에서 호조세를 보였으나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20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4분기에는 기저효과와 반도체 가격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7.3%(전기대비 0.2%) 증가하였다.

1) 방한관광객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20.1월)15.2 → (2월)-43.0 → (3월)-94.6 → (4월)-98.2
중국관광객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20.1월)22.6 → (2월)-77.0 → (3월)-96.6 → (4월)-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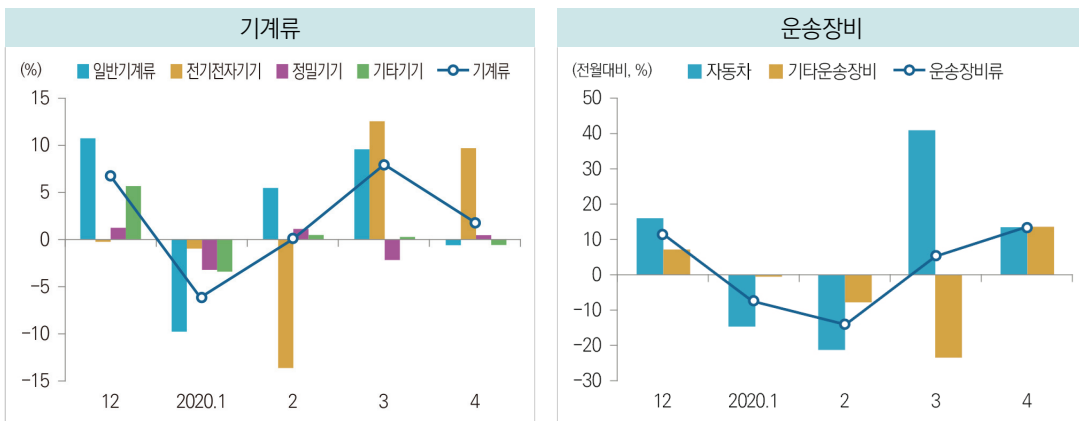
[그림 III-2] 자본재형태별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월간 지표인 설비투자추계지수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는 전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3월과 4월 중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감소에서 벗어나 2개월 연속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4월 중 기계류 투자는 가정용 전기기기(19.2%)와 컴퓨터사무용기계(18.4%) 등 전기전자기기(9.5%)에서 전월(12.3%)에 이어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반기계류(-0.5%), 정밀기기(0.3%), 기타기기(-0.5%) 등에서는 부진하였다. 운송장비 투자는 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에서 전월(-23.5%)의 감소에서 벗어나 13.3% 증가하였고, 자동차(13.6%)에서도 늘며 전월대비 13.6% 증가하였다.

[그림 III-3] 기계류 및 운송장비 형태별 투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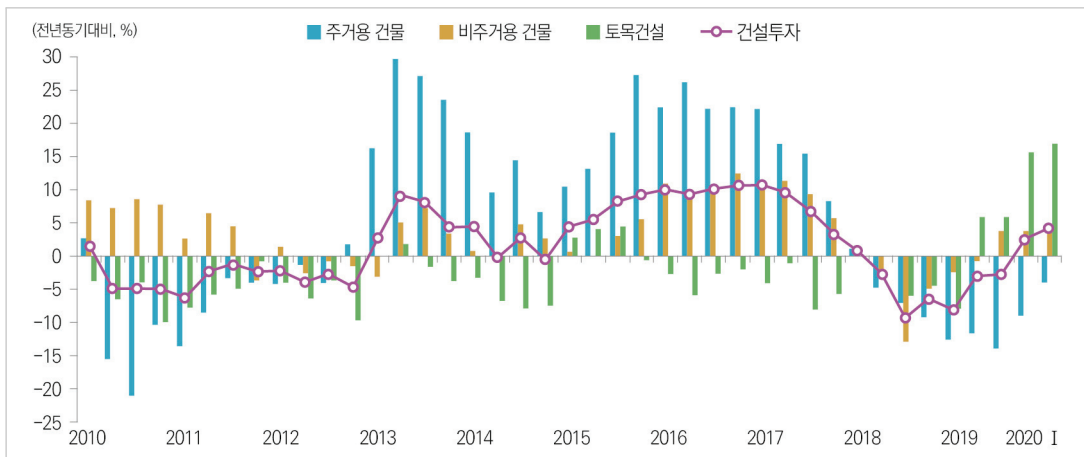
다. 건설투자 동향

최근 건설투자는 주택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토목투자 확대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주택시장안정화정책의 영향으로 주택투자가 위축되며 건설투자의 둔화를 야기했다. 2019년 4분기부터 토목투자가 확대되며 건설투자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내에서도 확진자 발생으로 건설공사 현장이 폐쇄되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중 SOC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1/4분기 건설투자는 주택투자의 지속된 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비롯한 토목투자에 힘입어 전기대비 0.5%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다.

건설기성액(불변, 전월대비)은 2020년 4월에 토목부문(0.4%)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3.6%)이 감소하여 2.4% 감소하였다. 주거용 건축은 주택시장안정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18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토목부문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토목투자를 확대하려는 정책당국의 목표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경상)은 프로젝트 발주 연기·취소 등 수주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파급되며 2020년 4월 전년동월대비 44.9% 감소하였다.

[그림 III-4] 최근 건설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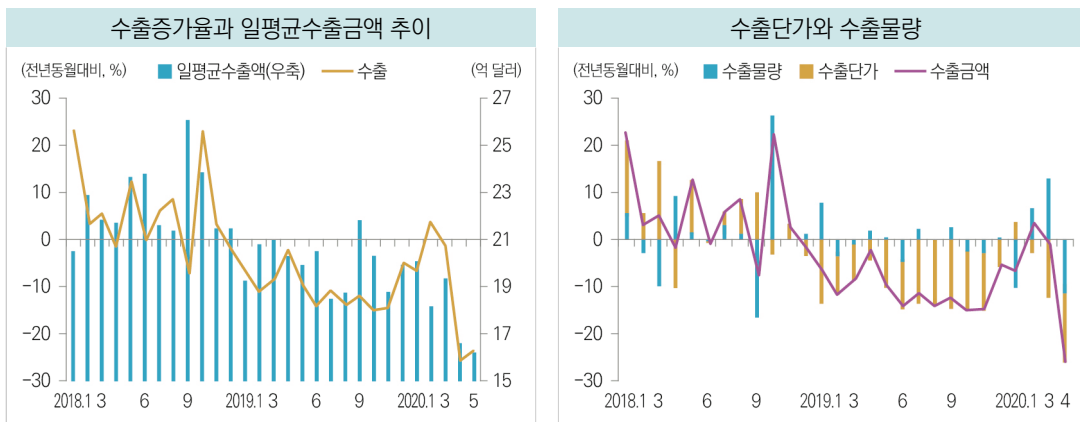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라. 수출 동향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였던 지난해 연말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세계경제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우리의 대외 수출에도 부정적 파급영향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취한 세계 각국의 이동제한과 생산 차질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량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외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대외경제 환경변화에 민감한 우리 수출은 올해 1~3월 중 전년대비 1.7% 감소한 데 이어 코로나19의 충격 영향이 본격 반영된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5.1%와 23.7%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관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의 경우 지난해 연평균 19.9억 달러 수준에서 올해 1/4분기 중 평균 19.2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4~5월 중에는 16.4억 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수출금액을 단가와 물량 요인으로 분해해보면 수출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3월 중 일시 개선되었던 수출물량이 4~5월 중 큰 폭 감소로 전환되는 등 해외수입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주력 수출 품목별·지역별 분류에서도 대부분 품목과 지역에서 현저한 수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중 수출금액 상위 품목인 일반기계(-27.8%), 석유화학(-34.3%), 자동차(-54.1%), 철강(-34.8%) 등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도 우리나라의 최대교역 상대국인 대중국 수출이 2.8% 감소한 것을 비롯해 미국(-29.3%), EU(-25.0%), 일본(-28.8%) 등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그림 III-5] 최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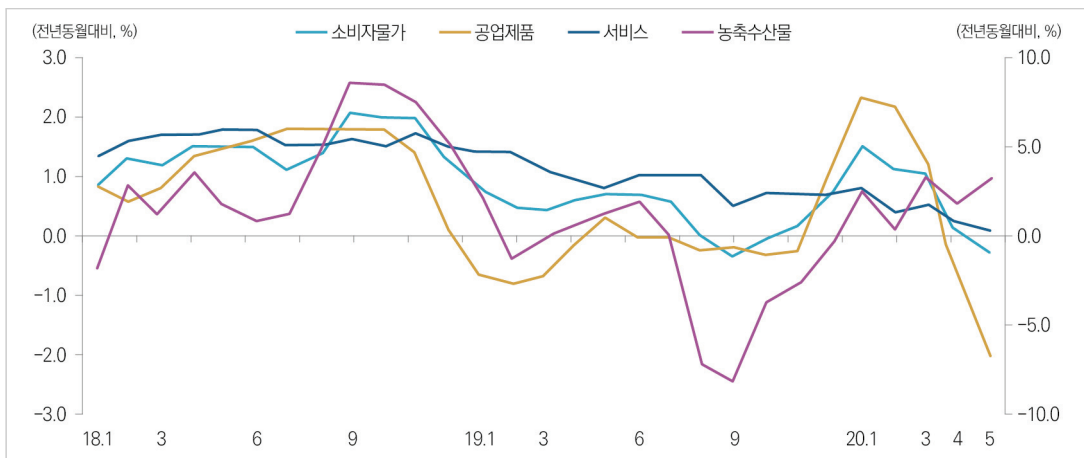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마.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1/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공업제품가격의 오름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2% 상승하면서 2018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3분기 만에 전년동기대비 2.0%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공업제품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OPEC+의 감산합의 불발 등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종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시차 등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에 국제유가 하락분의 반영이 늦어지면서 1/4분기 중 2.0% 상승하였다. 반면 서비스물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큰 폭 둔화되어 2014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3%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하락한 개인서비스 업종으로는 해외단체여행비(-6.0%), 호텔숙박료(-3.2%), 콘도이용료(-1.5%), 승용차 임차료(-8.1%), PC방 이용료(-0.9%) 등이 있다.

[그림 III-6]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4월 중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정책과 공급측 요인이 물가를 끌어내리며 6개월만에 최저수준인 전년동월대비 0.1%를 기록하였다. 4월 중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의 소비가 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공업제품 물가는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하락 전환,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가격 하락세²⁾ 지속 등으로 0.7% 하락하였다. 특히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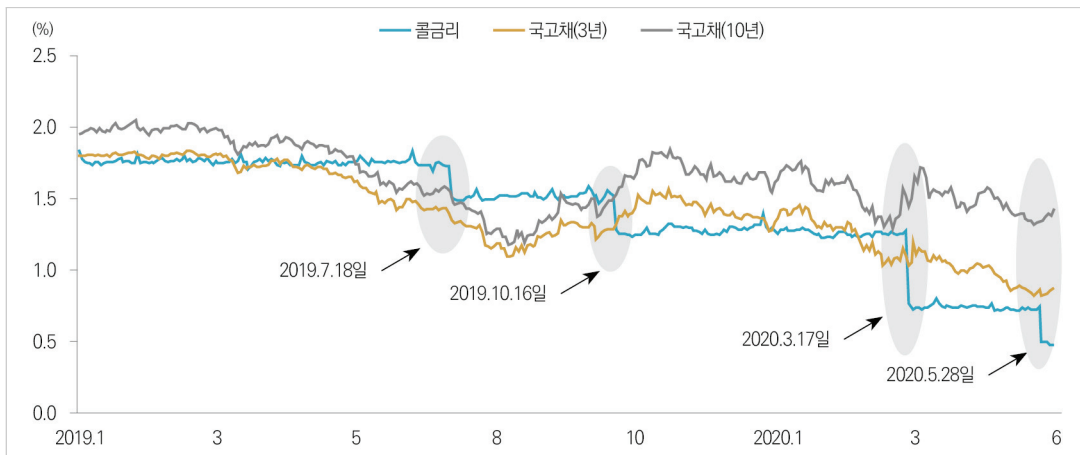
2) 3월부터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서 소형승용차(-3.0%), 대형승용차(-1.9%), 다목적승용차(-2.2%) 등 승용차 가격이 하락하였다.

중에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올해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전년동월대비 64.0% 하락하면서 서비스물가가 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5월 들어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물가의 하락폭이 커지고 서비스물가가 더욱 둔화되면서 0.3% 하락하여 지난해 9월(-0.4%)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국내 석유류제품 가격이 반영(-18.7%)되면서 공업제품 물가가 2.0% 하락하고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으로 유치원납입금이 하락(-6.4%)하면서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된데 기인한다.

바. 금리·환율 동향

국고채금리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충격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면서 2019년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3년 만기 국고채와 10년 만기 국고채가 올해 초 각각 1.28%, 1.54%였으나 6월 5일에는 각각 0.89%와 1.45%로 하락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1/4분기 국내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4%를 나타내는 등 국내경제가 역성장한 것이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3월 17일 기준금리를 0.5%p(1.25% → 0.75%) 인하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림 III-7]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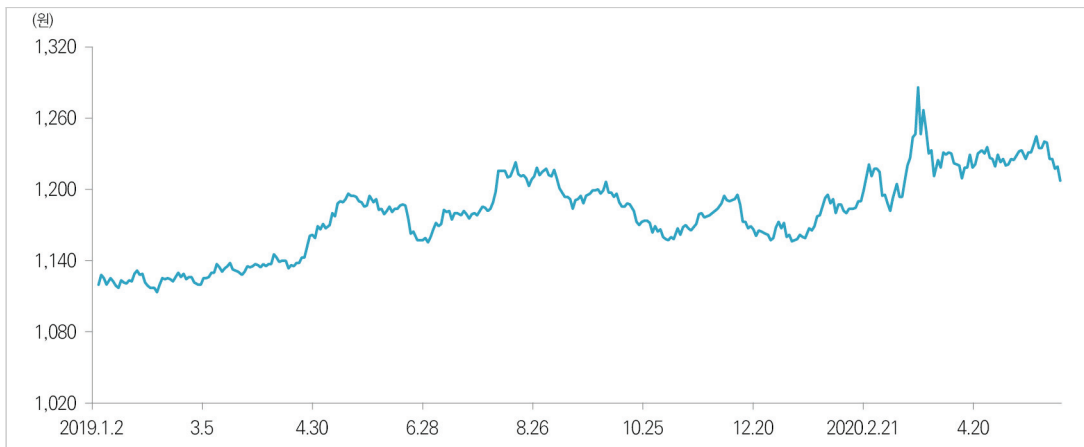


주: 타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자료: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은 2019년부터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초기에 국내에서 확산되자 급등세를 보여 3월 19일에는 달러 당 1,286원을 나타 내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선진국을 비롯하여 팬데믹 단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국경 및 지역봉쇄, 유가 급락 등이 더해지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 하순부터는 국내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한국은행과 미연준 간 통화 스왑(3월 19일, 600억 달러) 등 안정화조치가 구체화 되자 환율의 상승폭이 축소되고 변동성도 완화되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상회 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8]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한 경제의 잠재GDP는 주어진 기술여건과 생산요소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여 달성 할 수 있는 산출량 수준이다. 최근에는 경기안정화 측면에서 생산요소시장이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생산수준으로 정의된다.³⁾ 추정방법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잠재성장률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안정화정책,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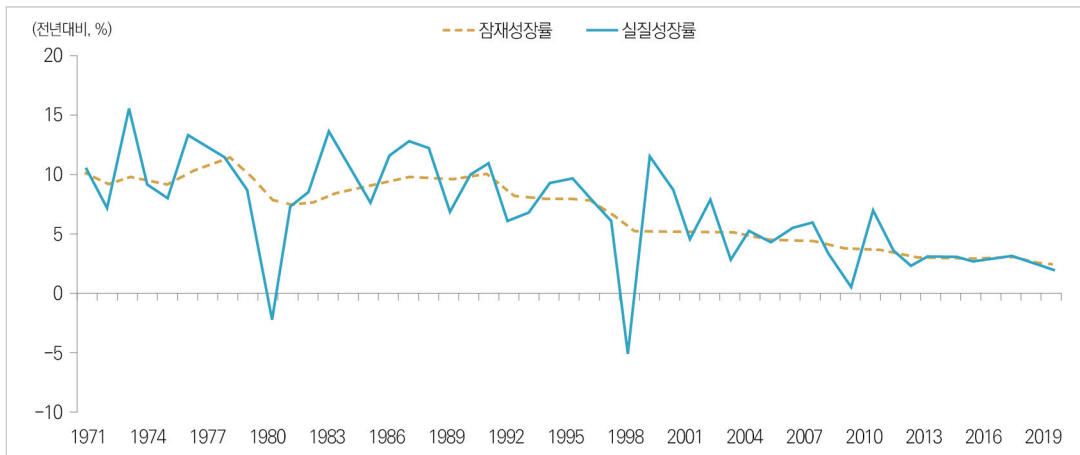
3) 이는 경제 전체에 인플레이션 유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생산 수준으로 해석하는 개념이다. 잠재성장률의 개념 및 추정방법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 주요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 NABO 경제동향&이슈 제 72호(2018) 참조.

자본스톡과 노동투입, 실질GDP성장률에 대한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잠재GDP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실질성장률 추세를 반영하며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추이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부터 1978년 4/4분기까지 고도성장기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과 10.26, 5.17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촉발된 1979년 1/4~1980년 3/4분기 기간 중의 경기침체기 중에는 7% 초반까지 하락하였다. 1980년대 들어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황과 3저현상(저유가, 저금리, 약달러) 등과 같은 양호한 대외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80년대 중후반에는 연평균 9.6%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1990년대 들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는 6% 후반대로 진입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충격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09~2019년 중에는 노동의 기여도가 정체된 가운데 투자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도 연평균 3.1%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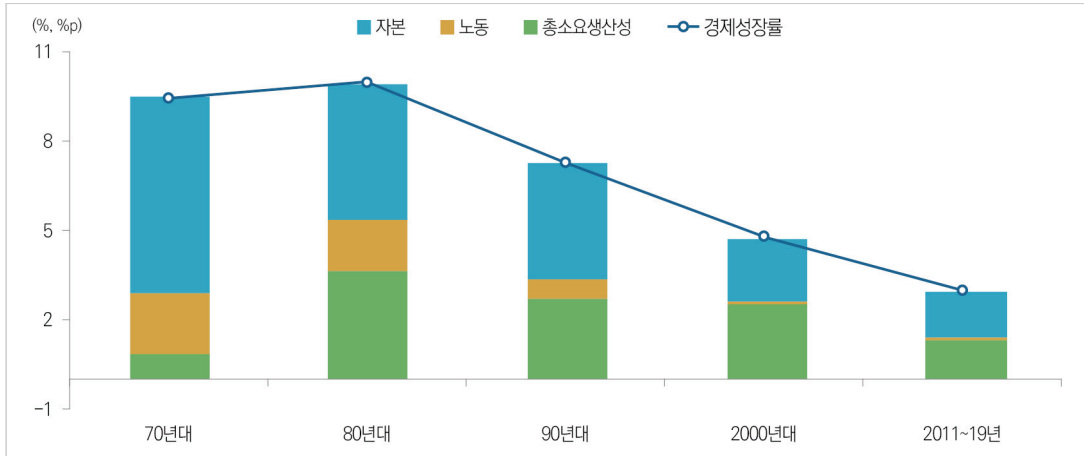
특히, 우리 경제는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을 받을 경우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첫째, 경기불황으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축적이 감소하고, 둘째, 자연실업률이 증가해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셋째, 위기사 노출된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저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III-9] 우리나라의 실질GDP성장률과 잠재GDP성장률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II-10] 생산투입 요소별 경제성장기여도 추이



주: 기간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최근 5년(2015~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8% 수준이며,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가 각각 0.1%p, 1.5%p, 1.2%p로 추정되고 있다. 연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2017년 중에는 건설경기 및 반도체경기 호황 등에 기인하여 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동기간 15세 이상 인구증가 둔화로 노동투입이 둔화되며 노동의 기여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중에는 노동과 자본 투입 동시 감소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도 연평균 2.6%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투입은 생산가능인구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실업률도 상승하면서 연평균 1.8% 감소하였다. 동기간 총고정자본투자는 건설투자(-3.7%)와 설비투자(-5.1%)가 모두 감소하여 연평균 -2.9%로 부진하였다.

[표 III-1] 2000년대 이후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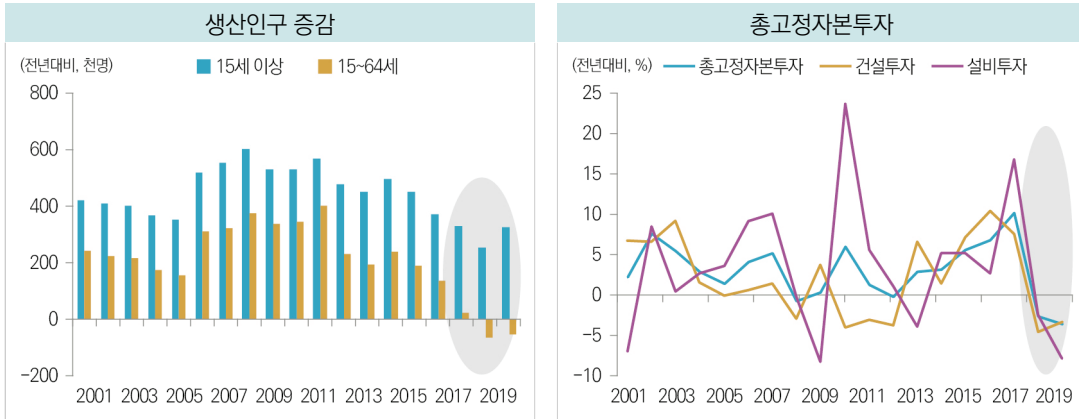
(단위: 기간평균, %, %p)

기간	잠재실질GDP 성장률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2001~2005	5.0	0.1	2.2	2.7
2006~2010	4.2	0.2	1.9	2.1
2011~2015	3.2	0.2	1.5	1.5
2015~2019	2.8	0.1	1.5	1.2
2020~2024	2.3	0.0	1.1	1.2

주: 해당 기간 평균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I-11] 생산인구 및 총고정자본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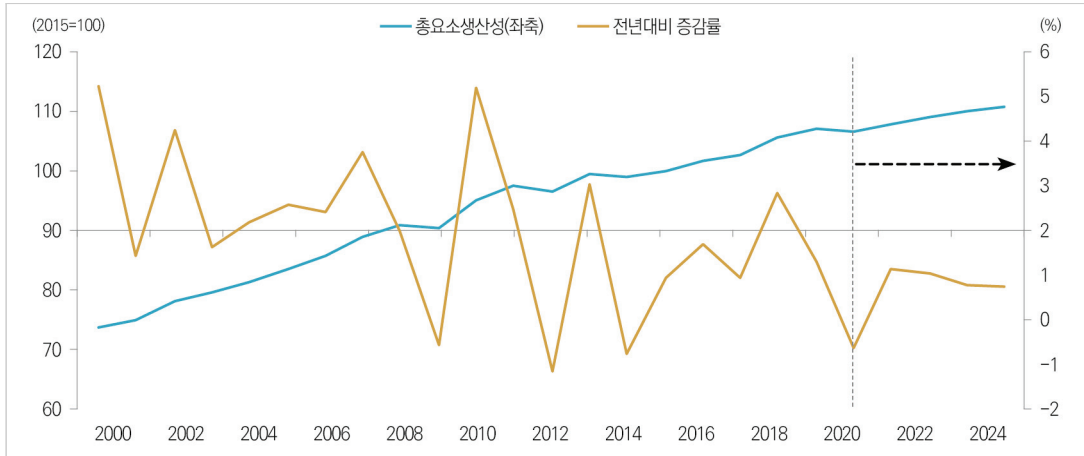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한국은행

향후 5년(2020~2024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이전 5년(2015~2019년) 기간에 비해 0.5%p 하락하여 연평균 2.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는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가 정체된 가운데 자본과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들어 지속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이전 5년 기간(1.2%p)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생산인구증가세 둔화와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이전 5년 기간(0.1%p)에 비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건설투자 감소, 설비투자 증가폭 등의 영향으로 총고정투자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전 5년 기간(1.5%p)에 비해 0.4%p 하락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입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 추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투입요소별 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요소생산성은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0.7% 증가하여 이전 5년 기간(연평균 1.6%)이 비해 큰 폭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별로 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년대비 0.5% 감소하며 부진하였다가 이후 4년간에는 연평균 1.0%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동기간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도 연평균 1.2%p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Ⅲ-12] 총요소생산성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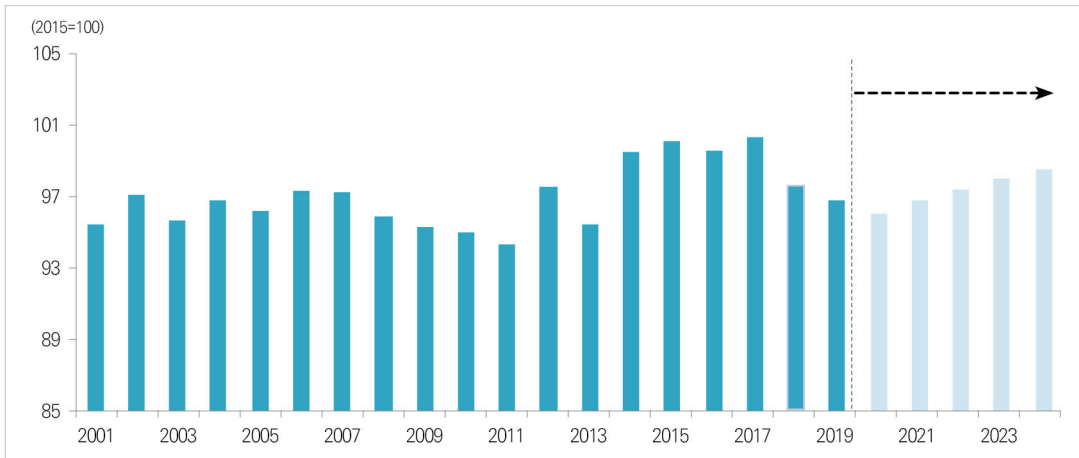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2020~2024년 기간 중 총노동투입은 연평균 0.3% 증가하며 이전 5년 기간의 감소추세(연평균 -0.5%)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투입량 수준을 보면 2024년에도 2017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0.0%p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추정된다. 총노동투입은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 등의 변수들을 이용해 투입된 총근로시간⁴⁾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지난 2년 기간(2018~2019년) 중 총노동투입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세 둔화, 근로시간단축, 실업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8% 감소하였고,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 기간 중에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세 둔화 지속, 실업률 상승, 주당근로시간 감소 등이 총노동투입 증가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총노동투입 둔화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4) 총노동투입시간 = 취업자수 × 주당근로시간 × (365/7)이고,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1-실업률)로 계산된다.

[그림 III-13] 총노동투입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표 III-2] 노동투입 주요 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시간, 기간평균 %, 전년대비%)

기간	총노동투입 증가율	결정요인 추이 및 전망				
		취업자수 (%)	주당근로 시간	생산인구 (%)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
2001~2005	0.5	1.5	49.2	1.0	61.9	3.7
2006~2010	-0.2	1.0	46.4	1.4	61.6	3.4
2011~2015	1.1	1.7	43.8	1.2	62.0	3.4
2015~2019	-0.5	0.9	42.3	0.7	63.1	3.7
2020~2024	0.3	0.7	40.2	0.5	63.6	3.9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2019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치
 3. 주당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2020~2024년 기간 중 생산자본스톡은 건설투자 부진, 설비투자 증가세 정체 등으로 인한 고정자본투자 부진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생산자본스톡은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건설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 대한 전망과 자본효율함수상의 감가상각률(생산효율저하율)에 의해 결정된다. 감가상각률은 2001년 4.0% 수준에서 2018년 4.3%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왔다. 향후 5년간 감가상각률은 연평균 4.4%에 달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동기간 생산자본스톡은 연평균 2.7% 증가하여 지난 5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3.7%에 비해 1.0%p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설비투자가 최근 2년 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증가세에 머물고 건설투자도 주택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며 향후 5년간 연평균 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소프트웨어 지출이 늘어 연평균 3.4%로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표 III-3] 자본투입 추이 및 전망

(단위: 연평균, 전년대비 %)

기간	생산자본스톡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 자본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2001~2005	5.7	3.8	1.6	4.6	7.6
2006~2010	4.7	2.9	6.8	-0.1	6.2
2011~2015	3.6	2.5	2.6	1.7	4.8
2015~2019	3.7	3.2	2.8	3.4	3.5
2020~2024	2.7	2.0	2.9	0.9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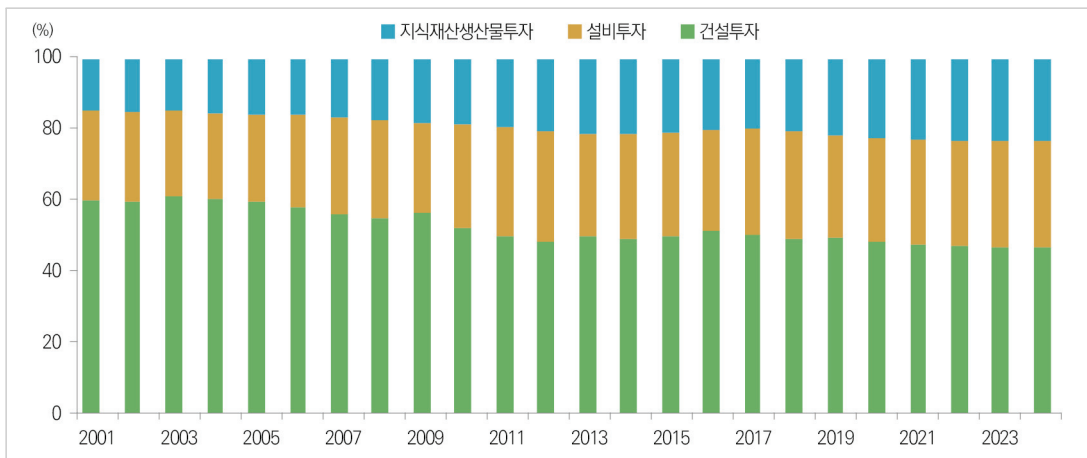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2019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자본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지식재산 생산물투자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T 및 생명과학 연구개발 투자와 비대면 관련 IT소프트웨어 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고정자본투자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60.1%에서 2019년 49.4%로 줄었고, 2024년에는 46.7%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은 2001년 14.4%에서 2019년 21.6%까지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23.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14] 자본재 형태별 고정자본투자 비중 추이 및 전망



주: 2020년 이후는 자체 전망치를 기초로 한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잠재성장률 추정 방법론 개관

잠재성장률은 추정방법에는 ① 단일시계열 접근법 ② 다변수 시계열 접근법 ③ 생산함수 접근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관측되지 않는 변수로서 경제이론이나 통계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추정해야 하므로 관련된 가정이나 정의, 설정된 모형이나 추정 방법론의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일시계열 접근법은 선형추세나 HP(Hodrick-Prescott) 필터 등을 이용한 추세추출법과 단일변수 비관측인자모형 등이 있다. 선형추세는 간단한 단일변수 기법으로 실질GDP를 상수항이나 시간 등에 회귀분석하여 얻는 비확률적인 추세를 잠재GDP로 계산한다. HP필터는 평활한(smooth) 시계열 추세를 추출하는 데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며, 단일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은 실질GDP(y_t)를 비정상적인 확률추세를 갖는 잠재GDP(y_t^p)과 정상적인 경기순환요인(y_t^c)로 분해하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다.

대표적으로 Watson(1986)과 Clark(1987)는 단일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잠재GDP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단순함과 편리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추정된 잠재GDP와 자연실업률이 경제이론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 통계기법의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즉, 잠재GDP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과의 이론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변수시계열 접근법은 주요 변수간의 구조적 관계를 결합한 모형으로 잠재GDP를 추정하며,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등이 있다.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산출량 등의 시계열에 필립스관계식이나 오쿤의 법칙 등과 같은 구조적 관계를 결합하여 확률적 추세 부분과 순환변동부분으로 분해한다. 예를 들어 실질GDP(y_t)와 인플레이션(π_t)을 이용한 2변수 모형에서는 실질GDP(y_t)의 경기변동적 요인(y_t^c)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존재하는 필립스관계식¹⁾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확률추세를 갖는 잠재GDP(y_t^p)를 추정모형으로 잠재GDP를 추정하였으며, Kuttner(1994)는 인플레이션율과 GDP로 구성된 2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을 이용해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는 잠재GDP를 추정하였다.

Clark(1989)는 오쿤의 법칙에 근거하여 실업률을 포함한 이변수 비관측인자 실질GDP(y_t), 인플레이션(π_t), 실업률(u_t) 간의 3변수모형에서는 필립스관계식에 아래와 같이 실업률갭과 GDP갭간에 존재하는 오쿤의 관계식(Okun's law)²⁾을 결합하여 잠재GDP(y_t^p)를 추정한다.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 모형은 잠재GDP 예측을 위해 설정된 축약형 VAR(Reduced form VAR) 모형에 구조제약을 부여하여 잠재GDP를 추정한다. Blanchard and Quah(1989)는 실질GDP와 실업률의 2변수 VAR 모형에서 잠재GDP 변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제약을 부여하여 잠재GDP를 추정하였다. 즉, 실질GDP변동에서 통화량 변동과 같은 수요충격에 기인한 단기변동과 기술변화 등과 같은 공급충격으로 인한 장기변동으로 분해하여 장기적 추세변동을 추정하였다.

1) 필립스관계식은 원래는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1958)가 발견하여 발표한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간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말하며, 이후 케인즈학파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혹은 GDP갭)간에 존재하는 안정적인 관계가 성립함을 밝히면서, 재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당위성에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2) 오쿤의 법칙(Okun's Law)은 실증적으로 관찰되는 실업률과 경제의 산출량간의 경험적인 관계이며, 실질GDP가 증가(감소)하면 실업률은 하락(상승)하는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공급 곡선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변동 등에 의해서만 움직이며, 단기적으로는 수직이어서 실질GDP의 단기적 충격에 의한 변동은 총수요 곡선의 변동의 결과로 해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변수시계열 접근법은 경제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단일변수 접근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변수를 추가하거나 구조적 제약을 가한다.

생산함수 접근법은 실제생산량과 이를 위해 투입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사이의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 형태를 추정하고, 자연실업률과 자연자본가동률 수준에 상응하는 노동 및 자본투입량을 추정된 생산함수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와 인구구조변화 등과 같은 요인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잠재GDP를 추정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콥-더글라스 형태의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실질GDP(Y_t)는 총요소생산성(A_t), 노동투입량(L_t), 자본투입량(K_t)의 함수로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고,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가정 하에서 α 는 노동소득분배율, $(1 - \alpha)$ 는 자본소득분배율을 나타낸다.

$$Y_t = A_t L_t^\alpha K_t^{1-\alpha}$$

위 식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소문자로 나타내고 다시 정리하면

$$y_t = a_t + \alpha l_t + (1 - \alpha)k_t$$

노동소득분배율 α 는 총요소생산성이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일치된(consistent) 추정치를 얻을 수 없고,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소득 가운데 일정비율을 합하여 매년 측정 한 값을 외삽하며, 보통 0.6으로 가정³⁾하고 있다. 잠재GDP(y_t^p)는 잠재수준의 노동(l_t^p), 자본(k_t^p), 총요소생산성(a_t^p)를 측정한 후 대입하면 추정 가능하다. 잠재수준의 투입요소는 각 투입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에 대한 가정과 추세를 추출하기 위해 이용된 통계기법에 따라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 또한 노동투입량은 총노동시간 혹은 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취업자의 평균근로시간 등에 의해 결정), 자본은 이용 가능한 생산자본소득과 가동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요구되는 자료가 많으며, 가정된 생산함수나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생산투입요소별로 잠재수준을 추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계기법을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3) OECD는 자영업자의 시간당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이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족단위 자영업자의 소득이 영업잉여로 계상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히고 있다.

3. 경제전망

가. 경제성장률

(1)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과 경기국면

통계청의 기준순환일 상 2020년 현재 우리경제는 제11순환기의 수축국면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인 제11순환기는 2013년 3월 저점을 시작으로 54개월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며 2017년 9월에 정점(잠정)을 형성한 뒤 이후 수축기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약화되었다. 특히 2019년 4/4분기 중 일시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던 세계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경기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I-4] 우리나라 기준순환일 및 국면지속기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72.3	74.2	75.6	23	16	39
제2순환기	75.6	79.2	80.9	44	19	63
제3순환기	80.9	84.2	85.9	41	19	60
제4순환기	85.9	88.1	89.7	28	18	46
제5순환기	89.7	92.1	93.1	30	12	42
제6순환기	93.1	96.3	98.8	38	29	67
제7순환기	98.8	00.8	01.7	24	11	35
제8순환기	01.7	02.12	05.4	17	28	45
제9순환기	05.4	08.1	09.2	33	13	46
제10순환기	09.2	11.8	13.3	30	19	49
제11순환기	13.3	17.9 ¹⁾	-	54	-	-
평균	-	-	-	33	18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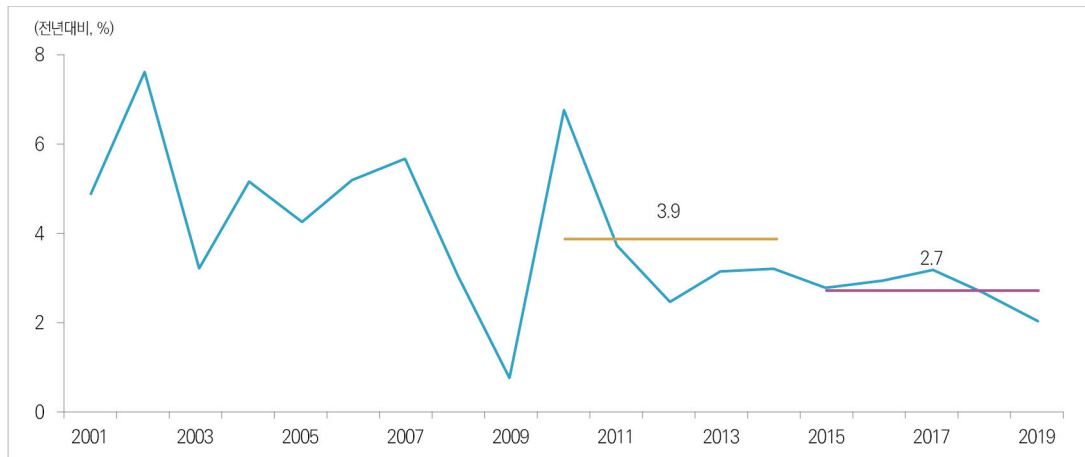
주: 1) 잠정
자료: 통계청

(2) 경제성장률 추이

2000년대 들어 우리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기변동성과 진폭이 축소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실질GDP성장률이 연평균 5.0%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4년 기간 중 연평균 3.9%로 하락하고 2015~2019년 기간 중에는

2.7%로 1.2%p 추가적으로 낮아졌다.

[그림 III-15] 실질GDP성장률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등 경기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분기 중 실질GDP성장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 등 경기전반이 위축되며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1.3%의 큰 폭 감소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 지출항목별로는 내수부문 중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으나,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6.5% 급락해 코로나19의 직접적 충격이 전해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세계 각국의 국경봉쇄, 이동제한, 생산차질 등이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량을 위축시킴에 따라 대외 수출은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외국인 방한객 급감으로 서비스수출이 3.2% 감소하는 등 총수출은 1.4% 감소하였다.

[표 III-5] 국내총생산(GDP) 지출부문별 성장 추이

(단위: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

	2019				2020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GDP)	-0.3	1.0	0.4	1.3	-1.3
민간소비	0.1	0.7	0.4	0.7	-6.5
건설투자	-0.7	2.9	-6.4	8.0	0.5
설비투자	-8.5	2.6	1.7	2.6	0.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5	0.7	0.4	0.4	0.8
총수출	-3.1	1.9	4.5	0.6	-1.4
재화	-3.7	1.1	5.2	1.0	-1.0
서비스	1.0	7.5	-0.2	-2.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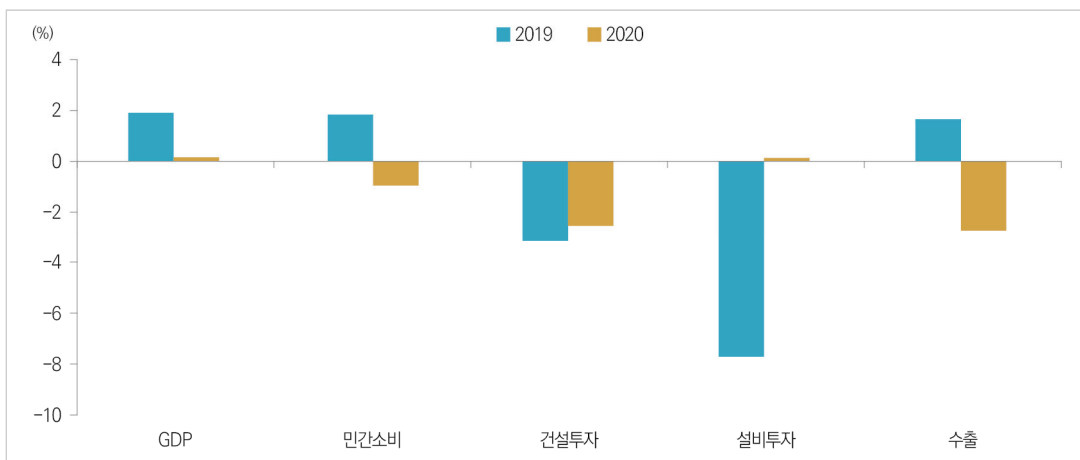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 2020년 전망

2020년 우리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상반기 중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하반기 중 완만한 개선을 보이며 연간 0%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내수를 대표하고 GDP지출 항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의 위축과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극심한 수출 부진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질국내총생산(GDP)의 구성항목별로는 실질GDP의 48.2%(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년대비 1%내외 감소할 전망이다. 소비활동의 위축은 경제 전반의 경기부진으로 가계소비의 기반이 되는 고용과 임금 등 소득창출 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악화되는 데 기인한다. 특히 올해 민간소비 위축은 경제성장률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감소를 기록한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11.9%)와 2003년(-0.4%) 단 두 차례의 경험 밖에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당시에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0.2% 소폭 증가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민간소비 위축의 정도는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역대 최악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림 III-16] 2020년 실질GDP 지출항목별 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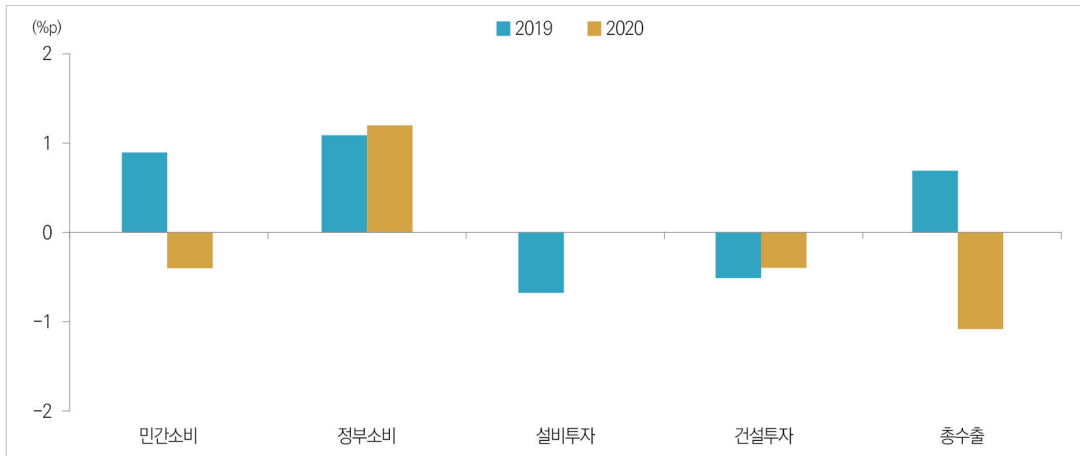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금년 반도체가격이 완만하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극심한 위축을 벗어나 증가 전환하겠으나, 건설투자는 2018년 이후의 수축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비투자는 지난해 경기부진으로 전년대비 7.5%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글로벌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반도체 등 IT부문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0.2% 증가 전환할 전망이다. 다만 석유화학 등 비IT부문의 투자는 글로벌 수요 부족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대부분 산업의 공장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2018년부터 수축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도 2%대 중반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투자 전망에 활용도가 높은 주택인허가, 주택착공 및 수주 등 건설투자 선행지표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건설투자 회복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주택경기 부진으로 민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설투자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SOC 투자확대 추진 등으로 토목 부문에서의 개선이 확대된다면 올해 건설투자 감소폭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식재산 생산물투자는 민간과 정부의 R&D 투자 증가, 신기술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2020년 2.1% 증가할 전망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은 2000년 4.45%에서 2010년 5.47%, 2015년 5.96%, 2019년 6.37%로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중요도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계정상 수출(물량)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수입수요가 약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되는 영향으로 2020년 전년대비 2.8%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 성장의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구조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동반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3%(2019년 기준)인 서비스수출은 지난해 외국인 방한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재화수출(0.2%p)을 상회(0.5%p) 하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를 나타낼 전망이다. 수입(물량) 또한 국내경기 부진 심화에 따른 수입량이 줄어들어 지난해(-0.6%)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2020년 전년대비 2.5% 감소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0년 실질GDP성장률은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소비와 수출 부진에 따른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0년 민간소비와 수출의 실질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0.4%p와 -1.1%p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민간소비 0.8%p, 수출 2.2%p)와 비교할 경우 민간소비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반면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3차재추경편성과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등 확장적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하락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1.1%p)보다 높은 1.2%p를 기록할 전망이다. 과거 2010~2018년 기간 중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4~0.9%p 범위에서 등락하였으며 평균적으로 0.7%p를 나타내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는 예년보다 0.5%p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상 경기가 부진할 때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따라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III-17] GDP성장률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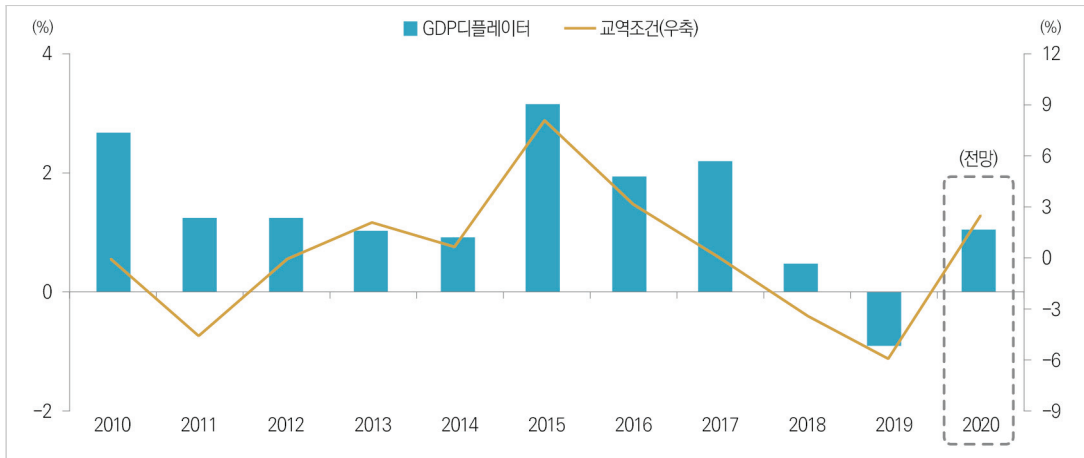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0년 명목GDP성장률은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질GDP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1.1%)보다 낮은 0.8%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명목GDP성장률은 실질GDP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앞서 실질GDP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언급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GDP디플레이터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디플레이터와 수출입 디플레이터 등으로 구성되며 내수디플레이터에 비해 대외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는 수출입디플레이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2000~2019년 기간 중 소비디플레이터상승률과 투자디플레이터상승률의 분산은 각각 1.88 및 5.99인 데 비해 수출입디플레이터상승률의 차로 표현한 교역조건의 분산은 16.17로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내수 디플레이터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민소득통계상의 교역조건을 수출디플레이터상승률과 수입디플레이터상승률의 차로 정의할 때 교역조건의 개선은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최근 교역조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2017년 기간 중 교역조건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2018~2019년 2년간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에는 수출입디플레이터상승률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수입디플레이터상승률이 수출디플레이터상승률을 상회함에 따라 교역조건은 악화되었다. 2019년에는 반도체가격이 급락한 영향으로 수출디플레이터상승률이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함에 따라 교역조건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반도체가격이 올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수출디플레이터의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 수입 디플레이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전년대비 큰 폭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역조건은 지난해 보다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18] 교역조건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내수디플레이터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설비투자디플레이터를 제외하고 민간소비디플레이터, 건설투자디플레이터 등이 경기부진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위에서 기술한 교역조건과 내수디플레이터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반적인 내수디플레이터상승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0.9%) 감소에서 0.7%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의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2020년 명목GDP성장률은 실질GDP성장률이 대폭 하락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면서 1998년(-0.9%)을 제외하고 최저치를 보였던 2019년(1.1%)보다도 낮아진 연간 0.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표 III-6] 명목GDP성장률 및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이와 전망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전망)
GDP디플레이터	3.2	2.0	2.2	0.5	-0.9	0.7
명목GDP	6.1	5.0	5.5	3.4	1.1	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4)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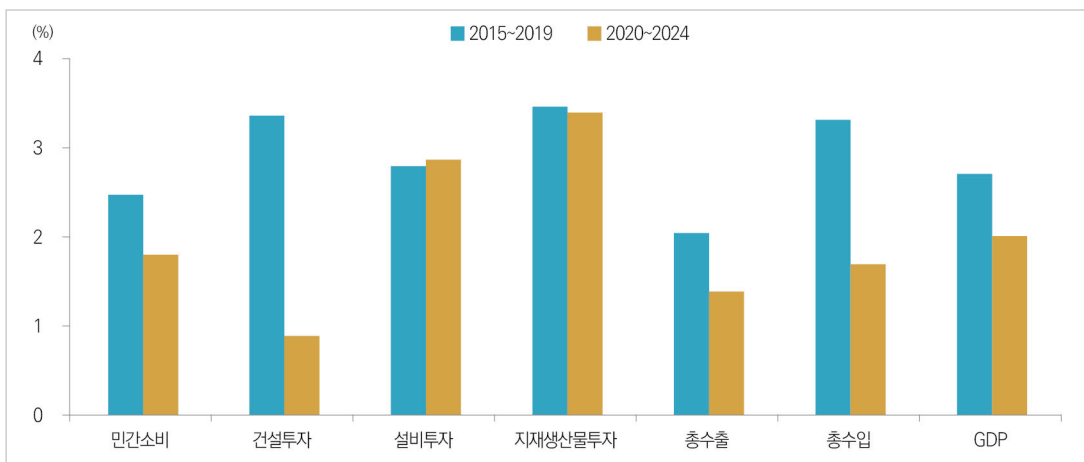
2020년 우리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성장경로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실질국내총생산(GDP)의 규모는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이 수년간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경로가 상당한 변화를 경험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향후 5년간 우리경제의

중기적 시계의 전망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양상과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하에서는 주요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치와 국내경제지표 등을 활용하여 2020~2024년 기간 중 중기 국내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세계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전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전망치를 인용하면,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쇼핑몰과 대중교통을 피하는 등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과 소비패턴의 변화, 유가 등 상품가격의 변동성 확대, 세계자본의 대이동 등과 같은 변화된 환경으로 세계경제가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은 경제성장의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2020 ~ 2024년까지 향후 5년간의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질GDP 성장률은 지난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2.8%에서 향후 5년기간(2020~2024년) 중에는 연평균 2.0% 성장이 예상되어 0.8%p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우리경제의 노동투입과 기업 투자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잠재성장률과 비교하여 실제경제성장률이 소폭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이기는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에 전망한 2019~2023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4% 수준이었다. 즉 향후 5년간 실제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노동 투입 정체와 기업투자 둔화를 감안한 잠재성장률에 비해서도 소폭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향후 5년간 실질GDP를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실질GDP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1.8%의 낮은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이는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약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약화되는 데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다. 즉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전반의 소비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래 소득과 고용 상황의 불안정 등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2018 ~ 2020년 수축기를 거쳐 2021년부터는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한 회복세와 과거 처럼 높은 건설투자 증가율과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축소 추세 등은 건설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거처럼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투자(GDP대비) 비중은 1990년 28.8%에서 2000년 19.8%, 2010년 15.6%로 지속적으로 낮아져왔으며 2019년에는 14.2%까지 하락한 상태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⁵⁾는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경제의 지식기반산업 비중확대와 이와 연관된 기업과 정부의 투자지출 증가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4% 증가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대GDP 비중 또한 건설투자와는 정반대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동 비중은 1990년 2.2%에서 2000년 4.4%로 10년 사이 두 배 수준이 되었으며 2010년 5.5%, 2019년 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동 비중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실질GDP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함에 따라 5년 후인 2024년경에는 6.8%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III-19] 2020~2024년 실질국내총생산과 지출부문별 성장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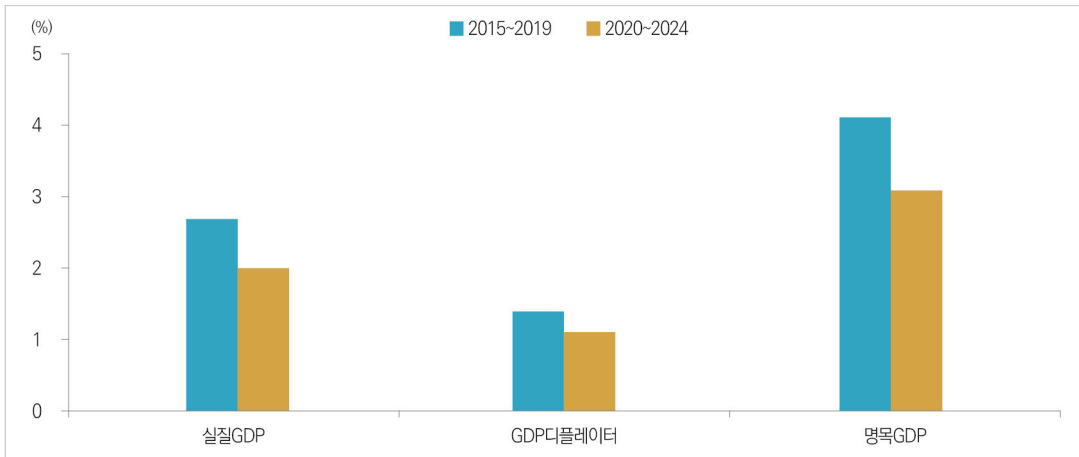
대외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및 세계교역신장률 둔화세,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 제조업 수출품 경쟁력 약화 현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후 5년간(2020~2024년) 총수출(물량 기준)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올해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연평균 1.4%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내년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더라도 세계교역신장률은 과거처럼 높은 수준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MF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한 세계교역신장률로 정의한 교역탄력성을 구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1.5배 수준에서 위기 이후(2010~2019)에는 1.1배 수준으로 하락한 나타난다. 향후 5년간에도 교역탄력성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약화 등을 감안할 때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의 최대교역상대국인 중국은 중간재 수입품의 자국산 대체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는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R&D),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광물탐사 등이 포함된다.

있으며 이는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품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명목국내총생산(GDP)은 이전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4.2%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향후 5년(2020~2024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3.1%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실질GDP성장률이 둔화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수요가 약화되면서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또한 이전 5년 기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의 경우 대외 여건 변화로 유가 및 환율이 급등락 할 경우 변화가 심하다는 점에서 명목GDP성장률은 실질GDP성장률보다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III-20] 2020~2024년 명목국내총생산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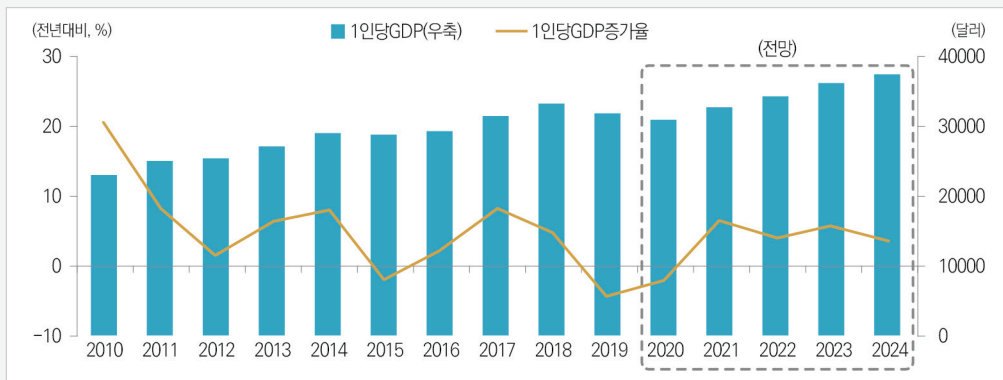
2020~2024년 기간 중 1인당 GDP 시산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시산한 결과 2024년경 37,634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6년 2만 달러대(21,727달러), 11년 뒤인 2017년에 3만 달러대(31,605달러)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33,429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2019년 1인당 GDP는 국내 경기부진과 교역조건의 악화로 명목GDP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1.1%)을 기록하고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급락한 영향으로 31,838달러로 하락하였다.

2020년에도 1인당 GDP는 역성장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도체가격과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질GDP성장률이 큰 폭 하락하고 달러대비 원화가치가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이용하여 시산한 2020년 1인당 GDP는 지난해보다 낮은 31,000달러로 예측된다.

하지만 2021년부터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상정 하에 2024년까지 1인당 GDP는 연평균 4.9% 증가하면서 2024년경 37,600달러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1인당 GDP 시산을 위한 명목GDP 성장률과 원화가치 상승률은 각각 연평균 3.7% 와 1.3%를 전제로 하였다. 다만 이러한 1인당 GDP의 시산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전망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전망 시계구간에서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치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인당 GDP 전망(202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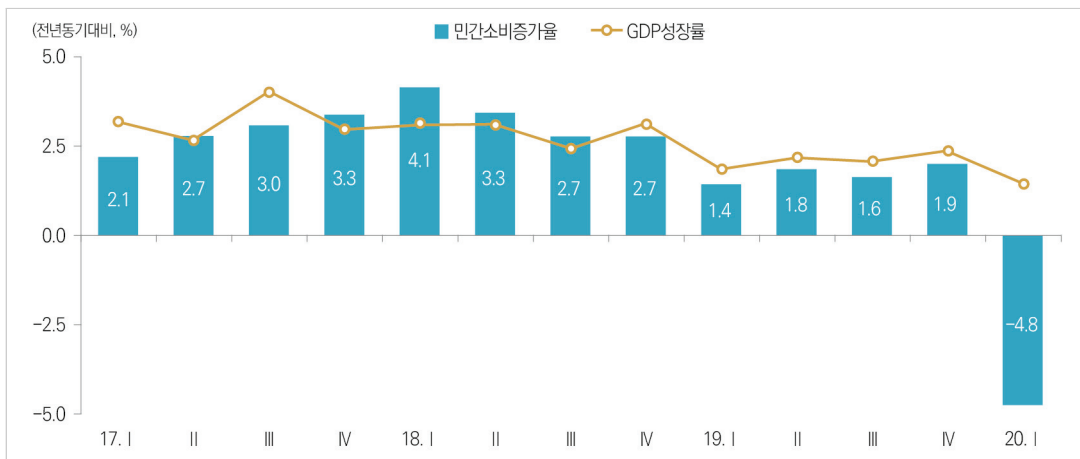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민간소비

(1) 2020년 전망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는 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GDP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2010~2019년 연평균 3.3%를 기록하였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 2.5%로 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18년 중 민간소비는 임금상승폭 확대, 자산시장 호조, 정부의 정책지원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대비 2.8% 증가하여 GDP성장률(2.7%)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2019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며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1.7% 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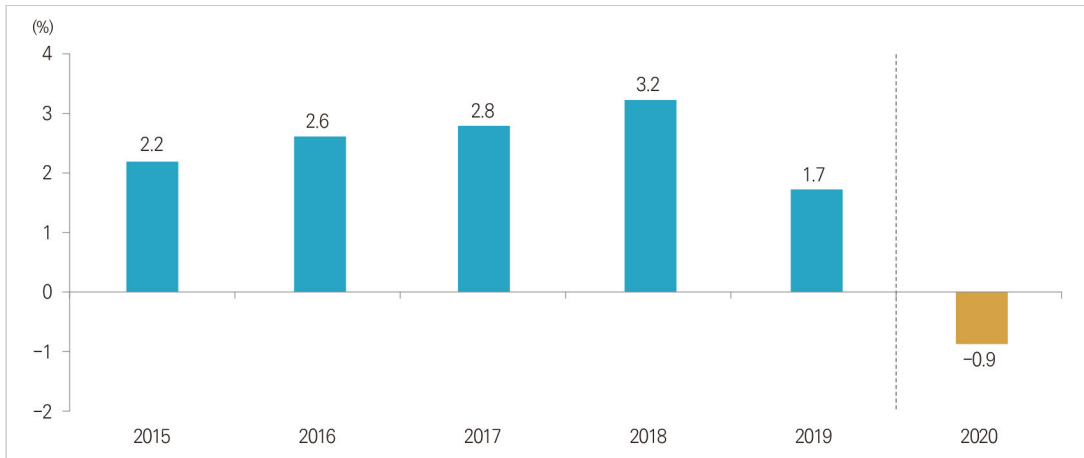
[그림 III-21] 분기별 민간소비 증가율 및 GDP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2020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소비여력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0.9% 감소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4.8%, 전기대비 -6.5%를 기록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도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2/4분기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5월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될 여지도 있다. 또한 4월부터 지역별로 주요 긴급생계지원자금이 지급되었으며, 5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가계의 소비여력이 증대되면서 1/4분기 보다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22] 2020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월(1차 11.7조 원), 5월(2차 12.2조 원), 6월(3차 35.3조 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였다. 1차 추경에서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 특별돌봄 쿠폰 지급, 양육수당 대상 확대 등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확대, 고용보험 지원 등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여 소비여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체크 및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고효율 가전기기 10% 구매 환급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에서는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고효율 가전 환급 품목 추가 및 예산확대 등 소비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집단감염 재발 우려 및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불안심리로 소비심리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속된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임금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주택 매매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증대하고 있어 향후 가계의 소비여력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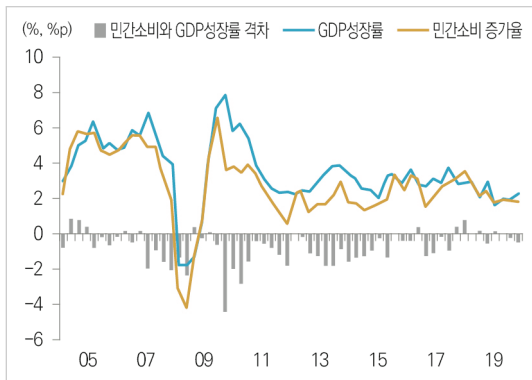
(2) 중기 전망

제21대 국회 임기 기간인 2020~2024년 중에도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여 가계의 소득 확대가 쉽지 않은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조세와 사회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후대비를 위한 예비적 저축 증가로 소비성향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해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완화할 전망이다. 2019년 발표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9~2023년 재정지출을 연평균 6.5% 증가시킬 계획이며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9.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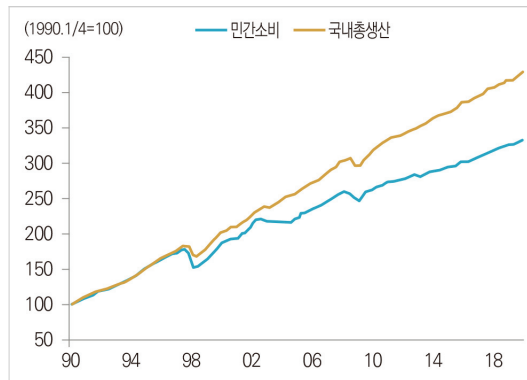
2020~2024년 민간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지난 5년(2015~2019년) 평균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면서 민간소비도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성장률에 비해 민간소비가 더욱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성장률 이외에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Ⅲ-23] GDP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 추이

[그림 Ⅲ-24]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Ⅲ-25] 민간소비 구조적 부진의 원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계는 성장을 둔화로 소득증가가 정체된 가운데 비소비지출과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가계의 임금,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본원소득 중 가계의 처분가능소득⁶⁾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94.9%에서 2018년 89.3%까지 낮아졌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임금상승 제한과 자영업 부진 등에 따라 가계의 소득증가세가 확대되지 못하는 가운데 비소비지출 증가,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임금 및 급여 증가세가 정체되고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낮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가계의 본원소득(GNI)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임금 및 급여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7.9%에서 금융위기 이후 2010~2018년 5.5%로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원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6.3%에서 5.1%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의 임금 증가세 정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0.8%⁷⁾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매출감소와 소득부진이 이어지는 점도 가계소득 증가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영업잉여⁸⁾는 1990~1999년 연평균 11.2%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며 2000~2018년 연평균 1.0%로 낮아졌다⁹⁾. 외환위기와 글로벌

6) 가계가 세금, 사회보험금, 이자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7) 2020년 3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의미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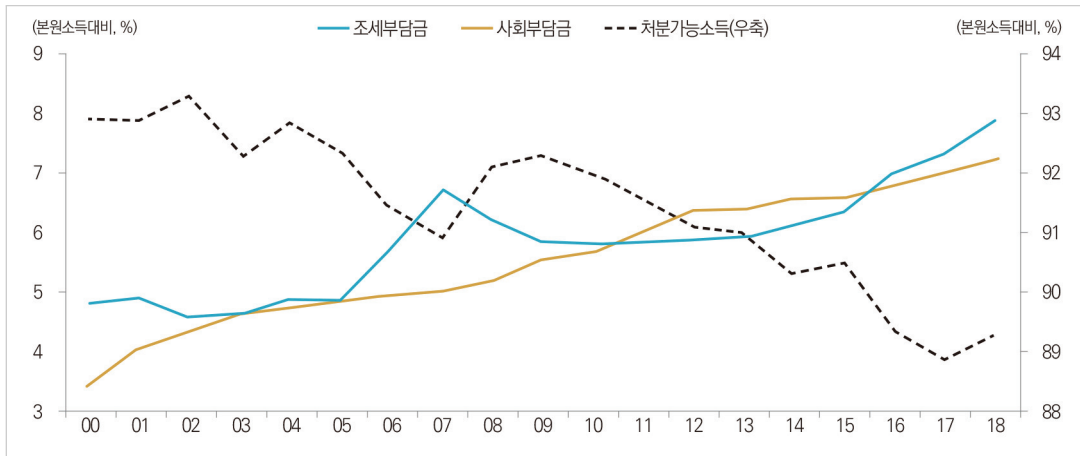
8) 국민계정상 가계 소유 비법인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영업잉여와 임금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소득을 의미한다. 혼합소득은 생산에서 발생한 영업잉여 뿐만 아니라 소유주 또는 다른 가계 구성원이 제공한 무급노동의 대가도 포함하고 있다.

9) 같은 기간 법인(비금융 기준)의 영업잉여가 12.9%에서 8.8%로 하락한데 비해 큰 폭의 둔화로 볼 수 있다.

금융위기를 거치며 자영업자가 증가하였으나, 낮은 생산성, 자영업자간 경쟁, 영세자영업자 증가,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하락하여 가계소득 증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득과 부 등에 대한 세금, 연금과 퇴직급여 등 사회 부담금 증가로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정체되고 있다. 가계의 본원소득 대비 조세부담은 2012년 이후 세율인상 및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증세요인¹⁰⁾으로 2000년 4.8%에서 2018년 7.9%로 상승하였다. 조세부담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연금 등 미래를 대비하는 지출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¹¹⁾ 상승에 따른 가계의 사회부담금도 증가하였다. 2020~2024년 국회 임기기간 중에도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비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처분가능소득의 확대를 제약할 전망이다.

[그림 III-26] 가계의 조세 및 사회부담금 비율



주: 조세부담금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소득과 부에 대한 경상세이며, 사회부담금은 가계의 사회부담금이며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은 제외
자료: 한국은행

가계의 가용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미래소득 불안과 노후대비용 예비저축 증가에 따라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구조적으로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GDP계정의 국민 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으로 산출한 평균소비성향은 2006년 64.5%에서 2017년 58.3%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0대에 교육비 증가로 인해 소비성향(60.5%)이 높으며,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면서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성향

10) 2012년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3억 원 초과, 38%), 2014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및 소득세 과표구간 하향조정, 2017년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5억 초과구간 40% 신설, 2018년 5억 초과구간 소득세율 42%로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11)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06년)4.48 → ('10년)5.33 → ('15년)6.07 → ('20년)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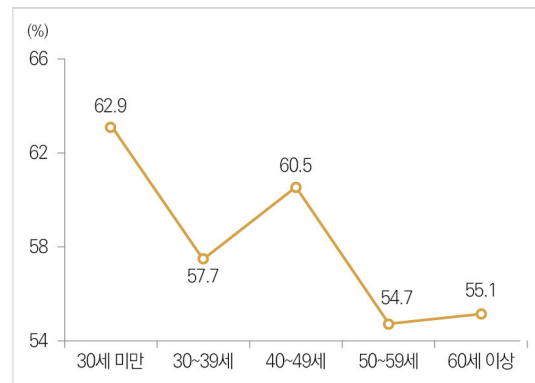
(55.1%)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공적연금 등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못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예비적 저축 등을 늘리면서¹²⁾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15~64세 생산가능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동하기 시작함에 따라 소비주력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나타나면서 소비활력이 더욱 저하될 전망이다.

[그림 III-27] 평균소비성향 추이



주: 국민총처분가능소득대비 최종소비지출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28]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자료: 통계청

다. 설비투자

(1) 2020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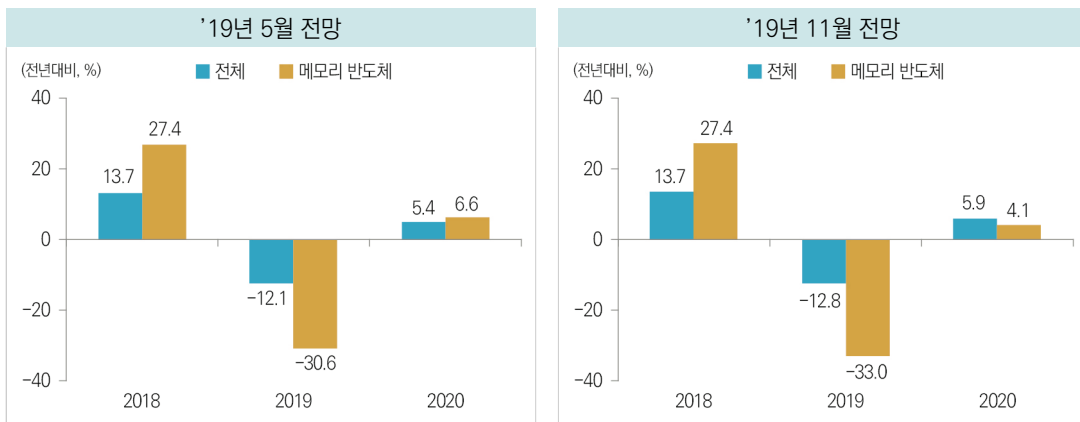
2020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장기간의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내외 수요 여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주요 업종의 신규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IT부문 설비투자¹³⁾는 반도체 가격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패널 시설 확대, 5G 상용화 지속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비IT부문은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여타 업종에서는 유지보수 위주의 제한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12)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저축액을 나타내는 저축성향(가계동향조사 흑자율 기준)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가구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60대 이상 가구의 저축성향은 32.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대비 2016년 저축성향 변동도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10.2%p로 40대(5.6%p), 50대(5.2%p)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 최근 5년(2015~2019년) 중 전체 설비투자에서 정보통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3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전체 실질설비투자(153.5조 원) 중 정보통신분야(57.3조 원) 비중은 37.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2020년 전체 반도체시장이 대비 5.9% 커지며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4.1% 성장하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세계 기술공급망(technology supply chain)과 기술수요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하방 위험을 높일 전망이다. IDC¹⁴⁾가 지난 3.19일 발표한 ‘코로나19가 2020년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분석¹⁵⁾을 보면, 중국의 기술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회복 시기는 불확실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반도체시장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큰(80%의 가능성)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요 급증으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 다른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III-29] 2020년 세계반도체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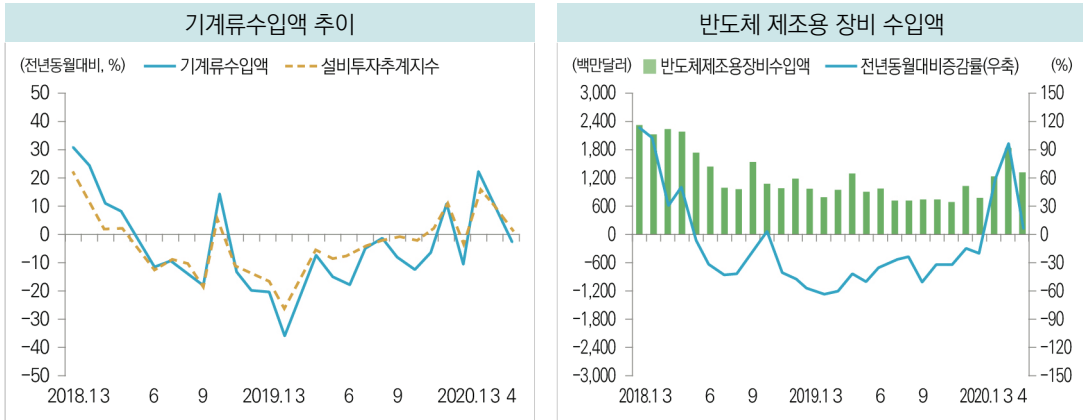
자료: WSTS

설비투자관련 월간 지표들은 기저효과 등에 기인하여 4월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4분기 들어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기업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악화고 있다. 전체 기계류수입액은 2월과 3월 중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3월 들어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제외한 기계류(-7.6%)에서 감소 전환되었고 4월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증가폭(3.3%)이 크게 줄며 전체 기계류수입액(-2.6%)도 감소 전환되는 모습이다. 다만 5월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속보치) 증가율이 167.8%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가 반도체부문 설비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14)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IT 및 통신, 컨슈머 테크놀로지 부문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이다.

15)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mpact of COVID-19 on the Worldwide Semiconductor Market Forecast,"(IDC #US46115520), 202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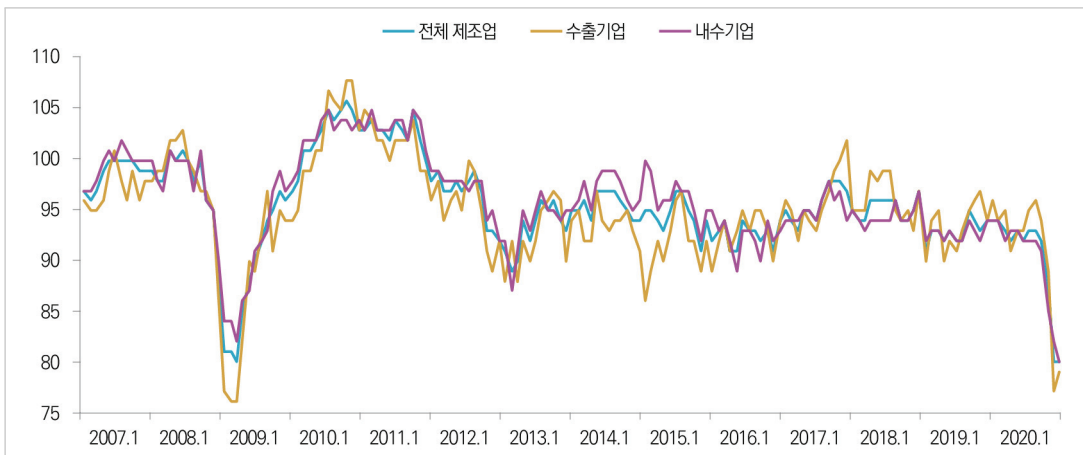
[그림 Ⅲ-30] 기계류 및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추이



자료: 통계청, 무역협회 DB,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외수요마저 위축되며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설비투자 실적 관련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4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5월(전체 제조업 80, 수출기업 79, 내수기업 80)에도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림 Ⅲ-31]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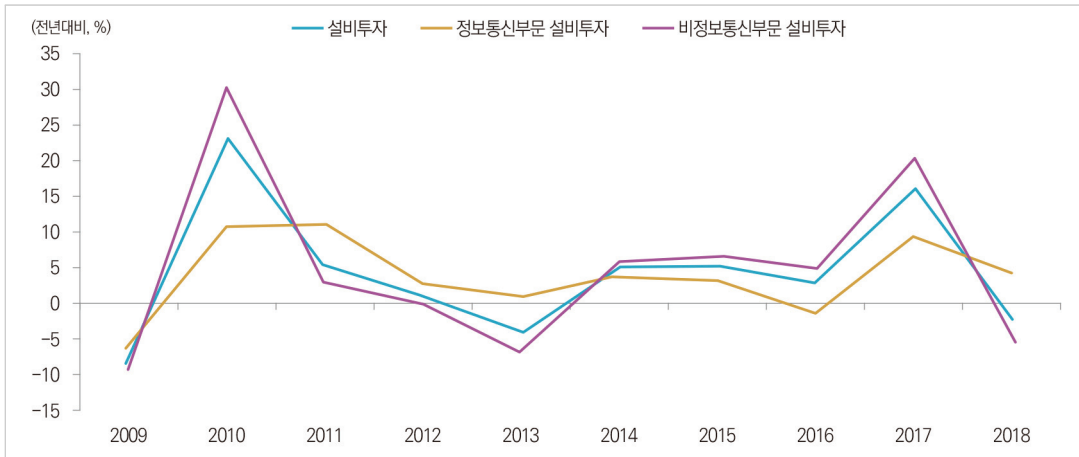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 중기 전망

2020~2024년 중 설비투자는 지난 5년(2015~2019년, 연평균 2.8%)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 기간(2015~2019년) 중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15~2016년에는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7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IT제조업 및 화학부문에 호조세를 나타내며 16.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2019년 중에는 반도체 업황 악화와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저조한 가동률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의 조정이 지속되며 연평균 -5.0% (2018년 -2.4%, 2019년 -7.7%)로 부진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IT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이후에는 세계경제성장세와 교역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3.5%대의 투자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III-32] 정보통신부문 및 비정보통신부문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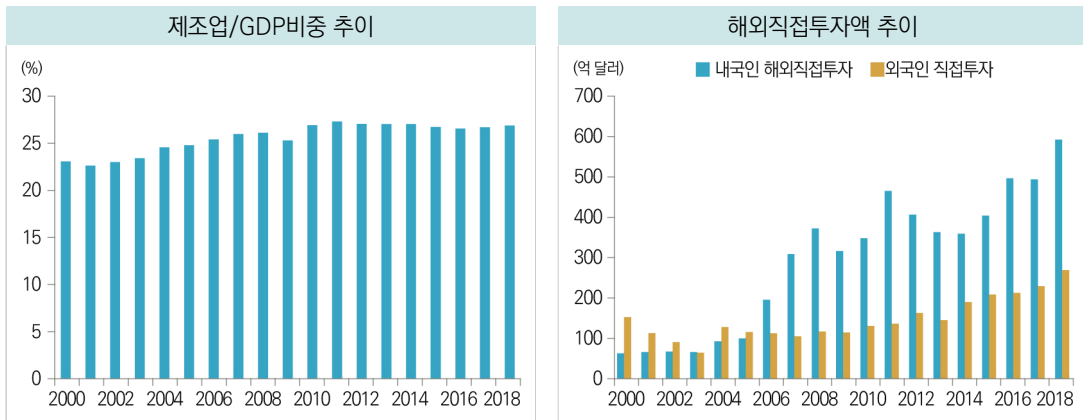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중기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 및 IT제조업과 연계된 제조업의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업 관련투자 확대가 전체 설비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업종에서는 2021년 이후 글로벌 수요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OLED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전통 주력업종에서는 글로벌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4차 산업과 연계된 환경 친화적 미래자동차,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의 투자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는 내수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업, 보건복지업,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교역량 증가을 둔화,¹⁶⁾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수평적 해외직접투자¹⁷⁾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확대에 따른 제조업생산비중 정체¹⁸⁾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상대적 중요성 증가 등은 설비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III-33] 제조업/GDP비중 및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라. 건설투자

(1) 2020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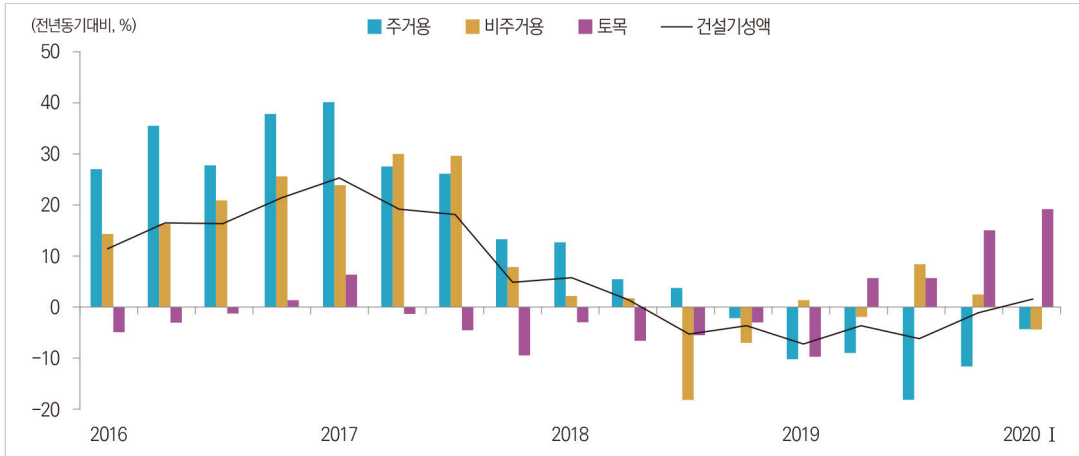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투자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토목투자의 확대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건설투자는 2018년부터 이어진 부진에서 소폭 개선되어 2020년 1/4분기에 전기대비 0.5%(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다. 주거용 건축은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3/4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들어서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토목투자는 SOC투자의 확대와 2020년 예산의 조기집행 효과 등으로 인하여 2019년 2/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 세계교역량(전년대비, 연평균, %): ('04~'08년)18.2→('09~'13년)6.1→('14~'18년)1.7

17)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중간재와 자본재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최종재는 저임금활용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하므로 국내투자와 보안관계로 작용하지만, 현지시장이나 제3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는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 대체관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8) 제조업생산/GDP 비중(연평균, %): ('04~'08년)25.3→('09~'13년)26.6→('14~'18년)26.7

[그림 III-34] 공종별 경상건설기성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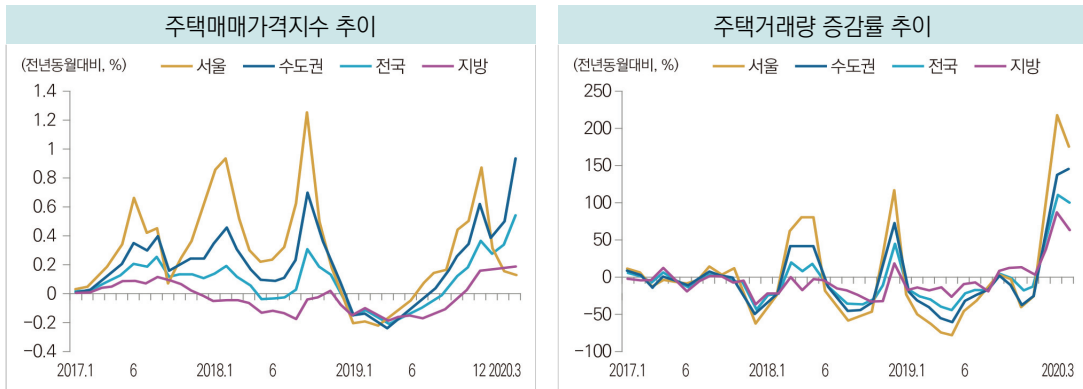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0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의 부진이 지속되어 전년대비 2.5%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건설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수주활동이 제한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부동산 규제 of 지속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조기집행 등에 따른 토목투자의 확대에 지난해(-2.5%)와 같이 전년대비 2.5%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건설 공사현장이 폐쇄되고, 건설노동자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건설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4분기에는 토목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의 노력으로 건설기성액(불변, 계절조정)은 전기대비 3.6% 증가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투자가 감소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부동산 정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2017년 6.19대책을 시작으로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및 2020년 2.20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지정, 주택 LTV 강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발표 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LTV 강화,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행한 2020년 2월 이후 주택매매지수와 주택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다수 위치한 서울의 경우 주택매매지수는 꾸준히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서울지역 주택가격 감소에 따른 풍선효과가 일부 반영되어 주택매매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I-35]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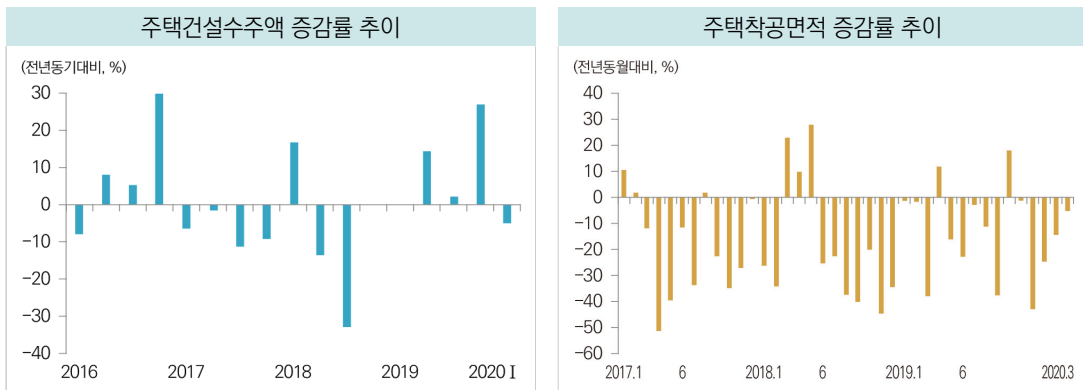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모두 포함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에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종합부동산세 인상, 전월세상한제 시행 여부에 따라 주택투자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투자의 선행지표도 향후 1~2년간 주택경기 위축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건설수주액은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건설수주 이후 착공까지 통상 4~6분기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착공 면적은 2020년 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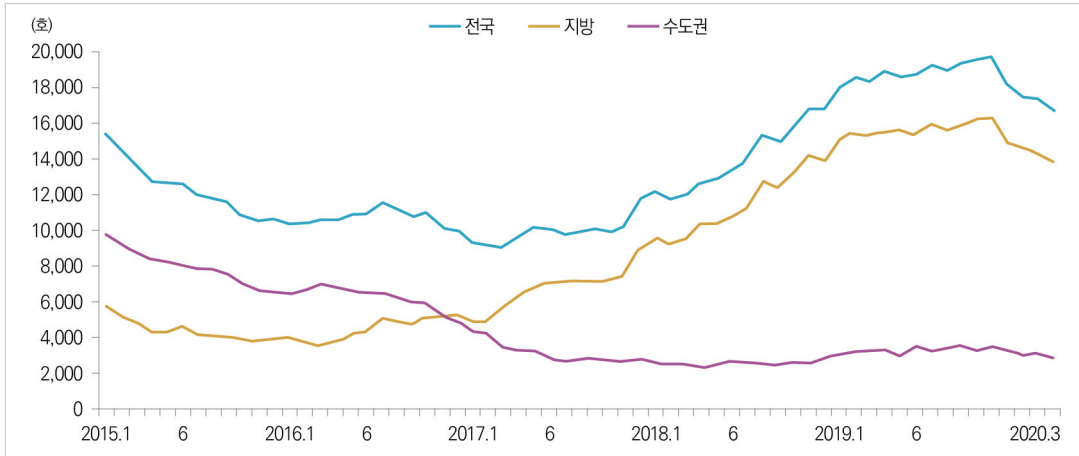
[그림 III-36] 주택건설수주액과 주택착공면적



자료: 통계청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2019년 11월에 19,587호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방의 미분양주택 물량도 최근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미분양물량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은 주택투자 개선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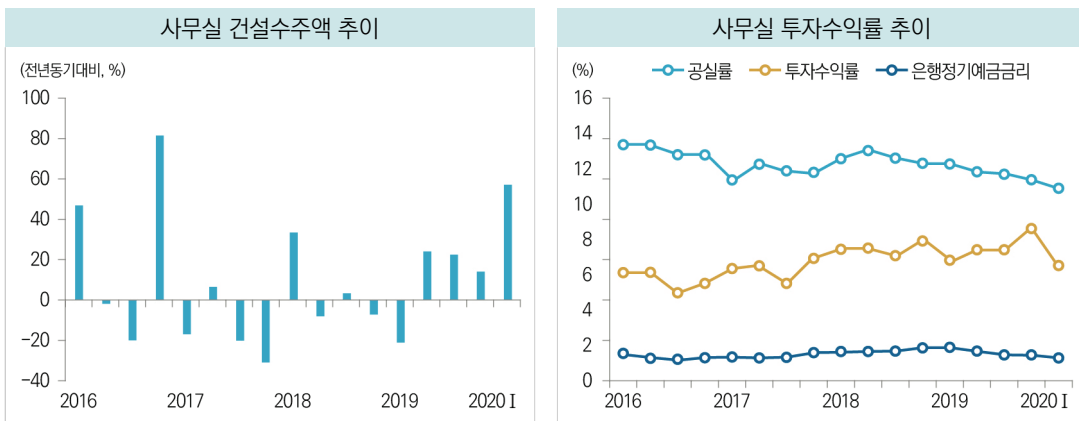
[그림 III-37] 미분양주택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비주거용 건축에서 비중이 큰 사무실의 경우 건축수주액은 2019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7.1% 증가하는 등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사무실 투자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임차수요가 위축되었다. 공실률은 2018년 2분기부터 하락 추세에 있고, 기준금리의 두 차례 하락(20.3.16, 5.28; 1.25%→0.50%)으로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면 사무실 투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8] 사무실 건설수주액과 투자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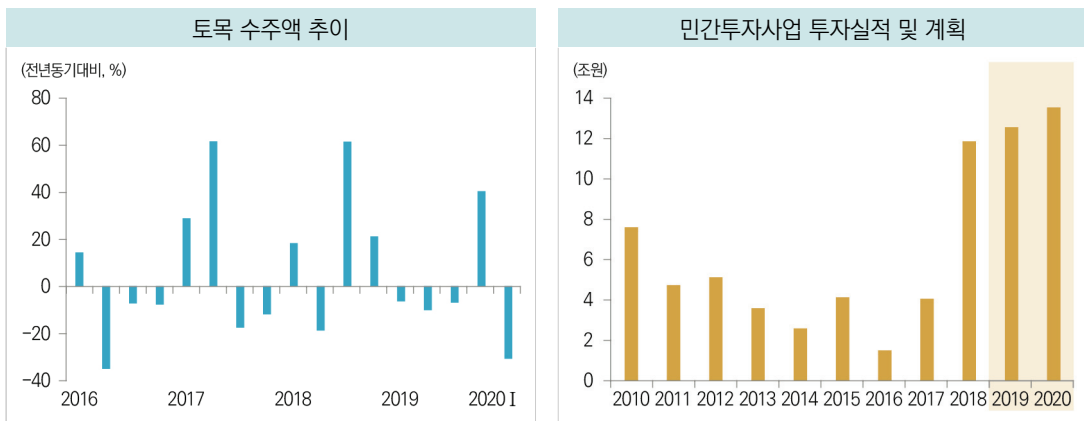


주: 사무실 투자수익률은 분기별 수익률 자료를 연수익률로 환산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감정원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이하 SOC) 관련 공공부문 투자 확충 계획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프라투자를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토목 투자는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SOC보다는 생활SOC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 SOC는 도로, 교량, 철도와 같이 대형 토목 사업을 의미하고 생활SOC는 문화·체육 시설 노후 수도권 교체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인프라를 뜻한다. 생활SOC는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노인요양센터 등 건물건축과 미세먼지저감숲, 노후도로 및 시설보수 등 비주거용 투자와 토목투자가 복합된 형태의 개념이다.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은 그동안 수익률이 저조하여 관련 건설수요가 감소했으나, 2018년부터 신규 16개 사업(실시협약 총 투자비 11.9조 원)을 체결하여 투자 활력을 촉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신규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추진 중인 민자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등 신규 사업 투자를 13.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연간 집행규모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4.2조 원 → 9.1조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토목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9] 토목 수주액 추이와 민간투자사업 계획



주: 민간투자사업 투자규모는 당해년도에 체결된 사업의 총투자비(경상)의 합계로 집행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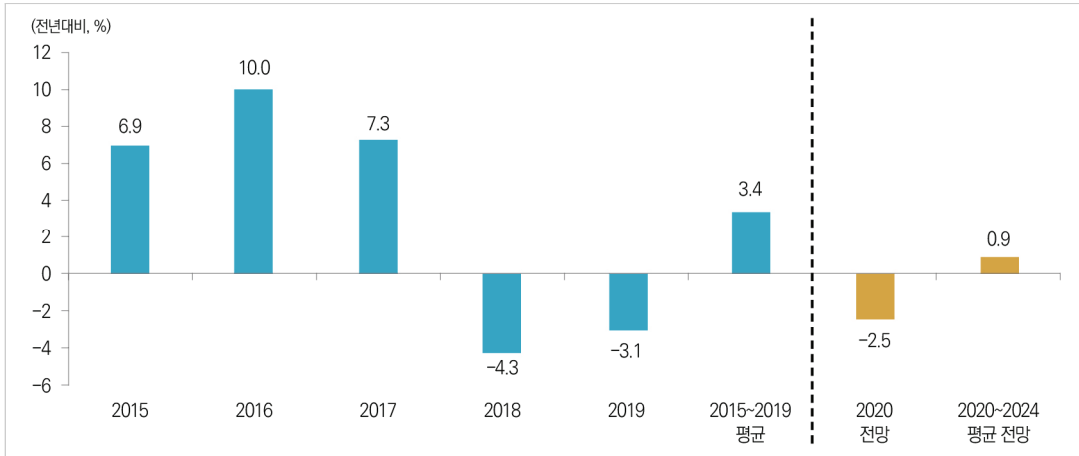
실제 집행까지 시간차가 존재함.; 음영 처리된 2019, 2020년은 기획재정부에 따른 계획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2) 중기 전망

2020~2024년 건설투자는 주택투자의 부진이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2020~2024년 중 연평균 0.9%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5년(2015~2019년 연평균 3.4%)에 비해 증가폭이 줄어들지만 2018년부터 이어진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투자 회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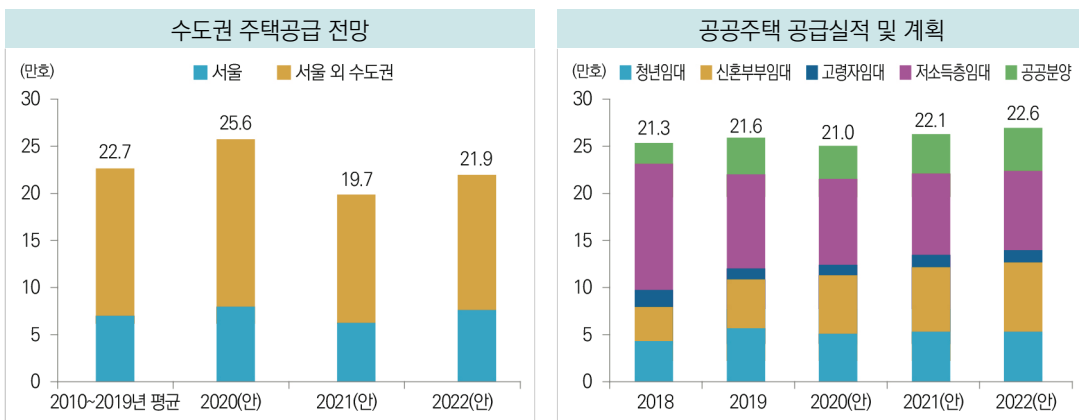
[그림 III-40] 건설투자 추이 및 전망



자료: 2019년까지 실적치는 통계청, 2020년 및 이후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주거용 건축 부문에서는 주택시장안정화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며 주택가격의 상승폭을 제한하려는 정책 목표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2020년에 25.6만호가 공급될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평균인 22.7만호에 비해 증가하나, 2021년과 2022년에는 못 미치는 19.7만호, 21.9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2020년에 21만호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 22.6만호 공급되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림 III-41] 주택공급 전망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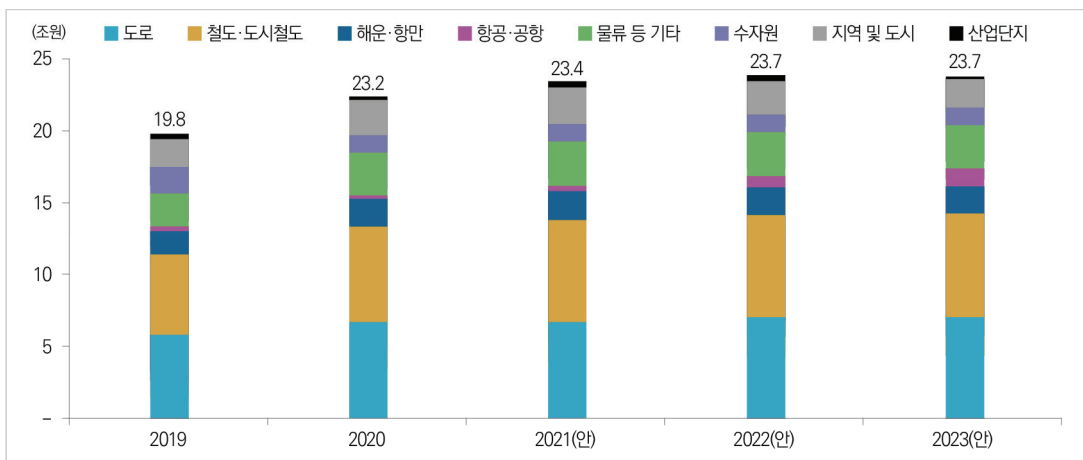
정책당국은 2023년까지 SOC 투자를 확대할 계획에 있어 전체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0~2022년)을 발표하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3년 간 생활SOC 투자액은 총 30조 원(지방비 포함 시 48.3조 원)이다. 생활SOC를 포함한 전체 SOC 분야 예산은 2019년 19.8조 원에서 2020년 23.2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23.7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5~2019년 평균 투자액인 21.9조 원에 비해 증가한 금액으로 대형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SOC,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과 GTX사업, 제6차(‘21~’25) 공항 개발종합계획 사업, 신항만 인프라투자 등 대형 투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조기에 착공하는 등 SOC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7] 전통적 SOC와 생활SOC 비교

	전통적 SOC	생활SOC
개념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토목 사업	국민 생활 편의 증진시설
주요 사업 분야	도로,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효과	국토의 효율적 개발,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격차 해소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림 III-42] 중기 SOC 예산 투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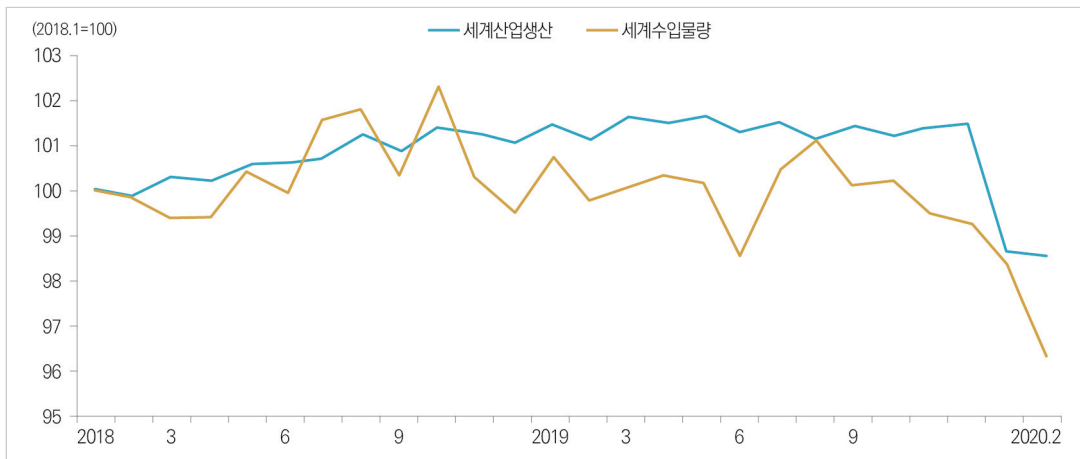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예산 집행금액, 2020년은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예산, 2021~2023년은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마. 대외거래

(1) 2020년 수출 전망

세계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침체에 빠져들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후 세계경제는 제조업생산증가, OECD경기선행지수 상승, 미·중 무역협상 1차 타결 등으로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2월부터 세계 산업생산과 세계수입물량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4분기 중에는 그 침체의 정도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 1/4분기 중 전년동분기대비 1.7% 감소를 보였으나, 2/4분기 들어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5.1%와 -23.7%로 급락하며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다. 수출을 둘러싼 최대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양상이라 할 수 있는데 세계경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반동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수출 부진은 연중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세계 각국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경봉쇄와 이동제한 등 경제활동제한 조치가 2/4분기 이후 완화 또는 해소되고 생산과 소비 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는다면 올 하반기 중 수출 감소폭은 상반기 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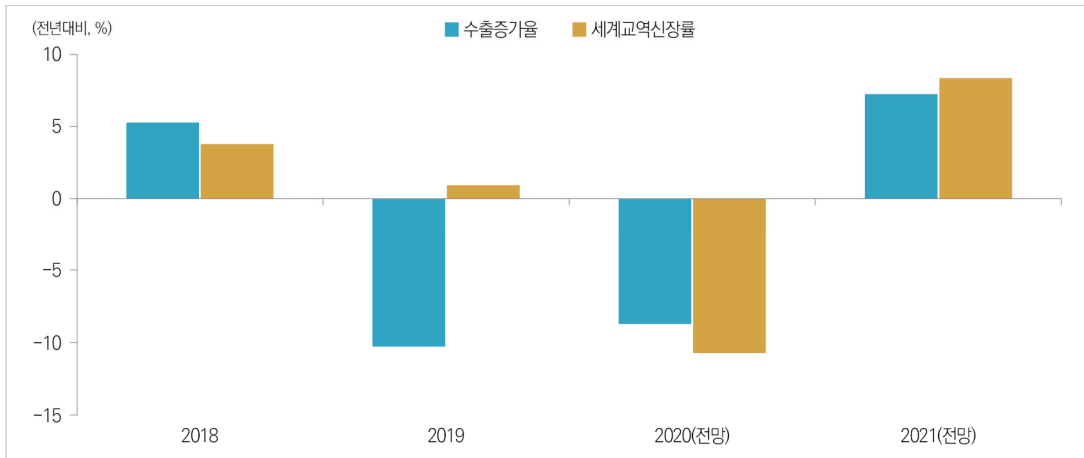
[그림 III-43] 세계 수입물량 및 산업생산 추이



자료: CPB

이상의 대외경제여건 하에서 2020년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증가율은 지난해(-10.4%)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며 -9.3%를 기록할 전망이다. IMF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신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대비 각각 -6.3%p와 -13.9%p 내린 -3.0%와 -11.0%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세계 수입수요 감소와 글로벌 교역량 위축 등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 수출 감소를 초래할 전망이다.

[그림 III-44] 수출증가율과 세계교역량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MF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국제유가의 움직임과 석유수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수요위축과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의 석유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유가 급락으로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석유제품 -12.2%, 석유화학 -14.8%)에 이어 큰 폭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공장 가동중단 사태, 미국과 유럽 등 주요시장의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올 1~5월 중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5.4%를 기록 중으로 주력 수출 품목들 중에서도 부진이 심한 편에 속한다. 철강 수출은 세계 철강 시장 부진과 자동차와 가전 등 전방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지난해(-8.6%)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스마트폰과 TV 등 전자제품 수요 위축으로 OLED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업체의 사업재편으로 인한 LCD 생산규모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대부분 주력 제품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지난해 반도체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단일품목으로 최대 수출액(939.3억 달러)과 비중(17.3%)을 차지한 반도체 수출은 여타 품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반도체가격(DDR4 8Gb 기준)은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전년대비 50%를 상회하는 하락을 시현하였으나, 올 들어 완만하지만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기준으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반도체 시장조사기관¹⁹⁾들의 전망에

19) 2020년 3월 현재 세계반도체시장 조사기관인 IHS 전년대비 2.5% 증가, Gartner -0.9%로 각각 전망하였다.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전보다 세계반도체 수요가 당초 예상을 하회하겠지만 여전히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13대 주요 수출품목 중 컴퓨터 수출은 유일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 1~5월 중 컴퓨터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3.1%를 기록 중이며 연간으로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이처럼 컴퓨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활성화와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확대, 전자상거래 관련 SSD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세계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I-8]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단위: 전년대비증가율, %, 비중)

	2019년		2020년(1~5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반도체	-25.9	17.3	-2.3	18.8
일반기계	-1.9	9.7	-8.9	10.0
석유화학	-14.8	7.9	-20.9	7.3
자동차	5.3	7.9	-25.4	6.5
석유제품	-12.2	7.5	-31.2	5.7
철강	-8.6	5.7	-17.3	5.4
자동차부품	-2.5	4.2	-23.6	3.6
디스플레이	-17.0	3.8	-26.0	3.0
선박	-5.2	3.7	-12.5	4.0
무선통신기기	-17.6	2.6	-12.2	2.4
섬유류	-8.0	2.4	-16.8	2.3
컴퓨터	-20.6	1.6	73.1	2.6
가전	-3.6	1.3	-16.8	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지역별로는 코로나19 충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지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중국, EU, 중남미로의 수출 부진이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 최대 교역상대국인 대중국 수출은 중국경기 부진심화로 중간재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와 관계 악화가 지속될 경우 직접적인 대중 수출 감소에 세계교역 위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까지 더해져 수출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EU 수출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역내국의 이동제한과 조업중지, 경기침체 등으로 큰 폭의 수출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대EU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수출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남미 수출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역내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올 1~5월 중 대중남미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4.0% 감소를 기록 중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경기부진으로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운송제한에 따른 현지 업체의 원자재 및 부품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수출품목을 위주로 대중남미 수출 감소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표 III-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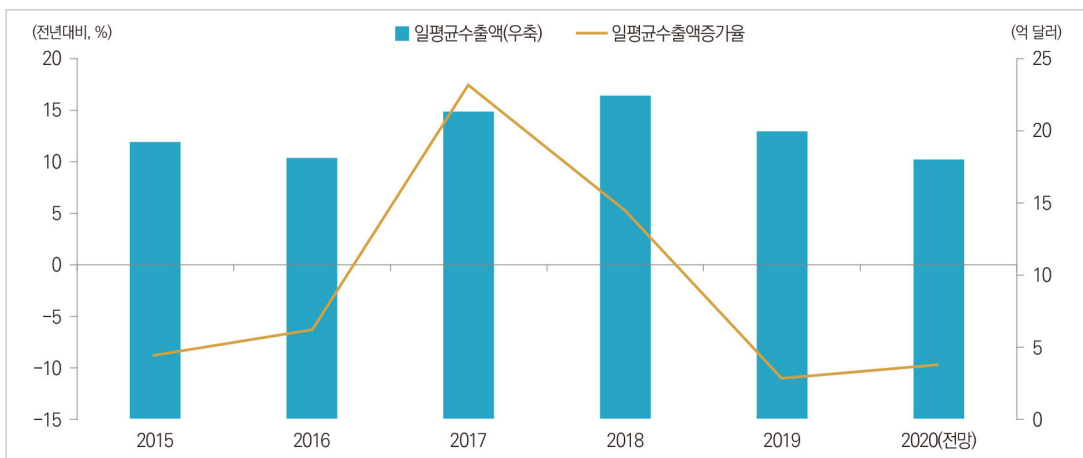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증가율, %, 비중)

	2019년		2020년(1~5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중국	-16.0	25.1	-10.0	24.7
아세안	-5.0	17.5	-9.4	17.9
미국	0.9	13.5	-4.8	14.3
EU	-8.5	9.7	-10.4	10.1
베트남	-0.9	8.9	-10.0	8.7
일본	-6.9	5.2	-6.8	5.5
중남미	-5.2	4.9	-34.0	3.8
중동	-18.6	3.3	-7.3	3.2
인도	-3.3	2.8	-26.6	2.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통관일수를 조정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일평균 수출액은 2016년 18.2억 달러 수준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22.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세계경기부진으로 2019년에는 19.9억 달러로 감소했다. 2020년 일평균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이 큰 폭 감소를 이어감에 따라 지난해(-11.3%)에 이어 전년대비 9.7% 감소한 18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5년래 최저치로 2016년 수준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일평균 수입액 또한 2019년 18.5억 달러에서 2020년 17.0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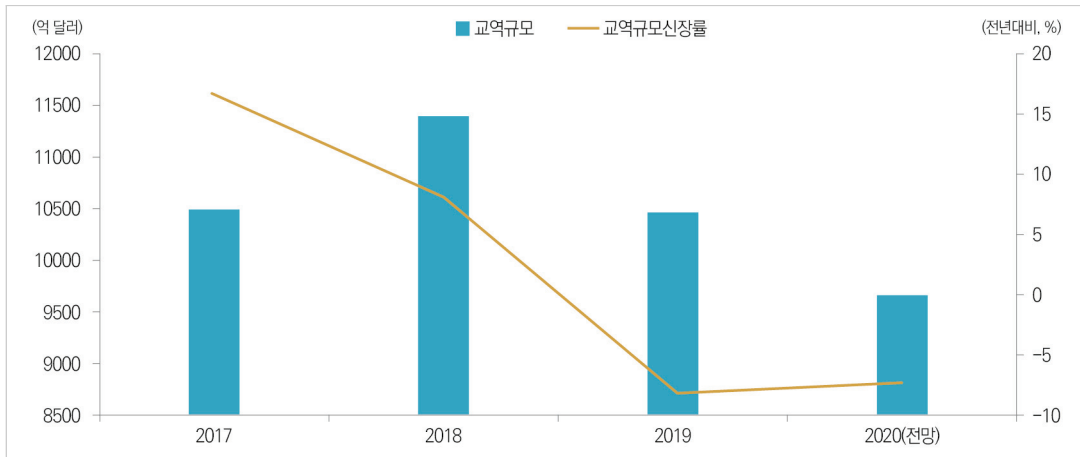
[그림 III-45] 일평균 수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2020년 무역수지(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는 수출(-9.3%)이 수입(-8.0%)보다 더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389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100억 달러 가까이 축소된 28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을 합한 교역규모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축소될 전망이다. 2020년 교역규모는 수출액(4,916억 달러)과 수입액(4,629억 달러)을 합하여 9,545억 달러를 나타내어 1조 달러를 다시 하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2011년 사상 처음 1조 달러대에 진입해 2014년까지 유지되었으며, 세계경기부진 시기인 2015~2016년 중 1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2017~2019년 기간 중 1조 달러대에 재진입 하였으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는 다시 1조 달러를 하회할 전망이다.

[그림 III-46] 교역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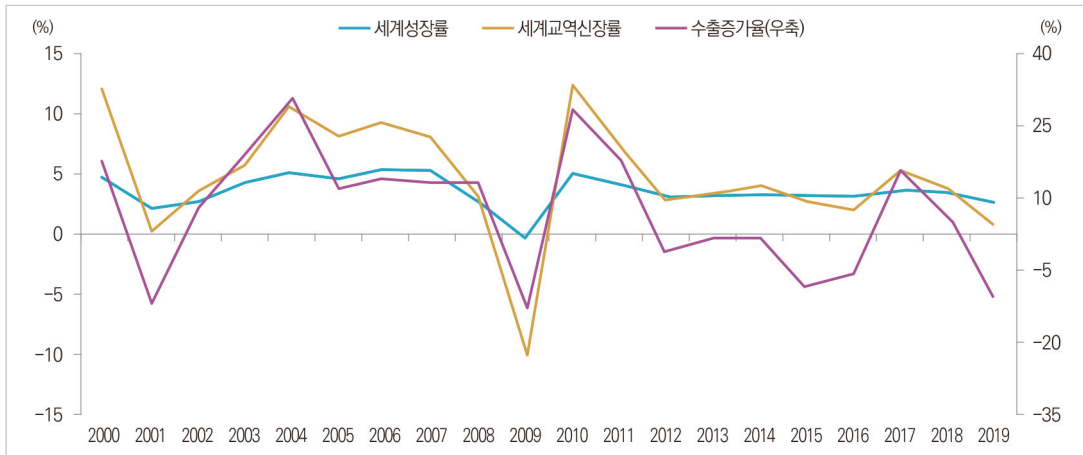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2) 중기 수출전망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은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신장률 추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IMF(2020년 4월)는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신장률 전망치를 각각 5.8%와 8.4%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우리의 대외 수출도 내년 이후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의 수출증가율이 과거와 달리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신장률과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대외수출환경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향후 5년(2020~2024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평균 1.2%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를 전망이다. 단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을 제외할 경우 3.9%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미래 수출에 대한 전망치는 이전 5년(2015~2019년)의 연평균 -0.6%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이나 그 이전인 2000~2014년 기간 중 연평균 수출증가율

(10.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기여도 또한 점차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47] 세계성장률, 세계교역신장률, 수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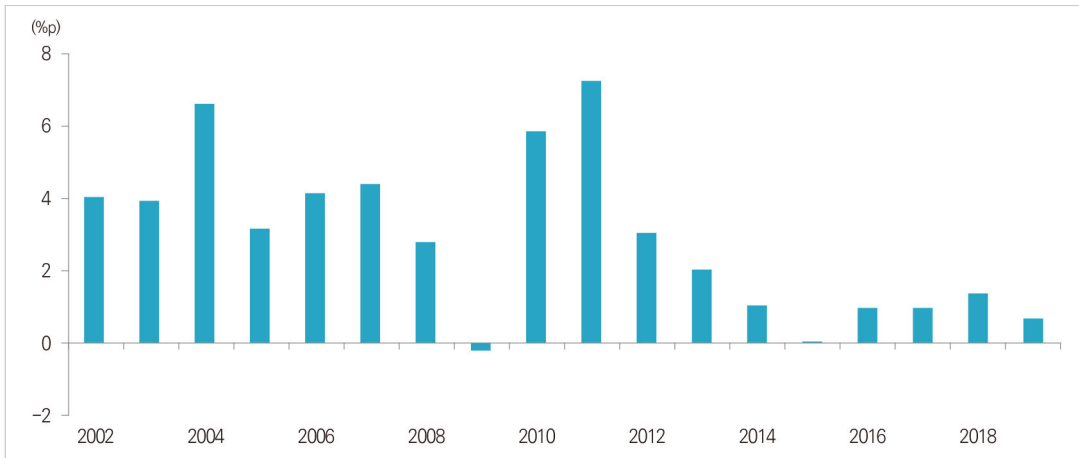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MF

실제로 수출이 우리경제의 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다. 2002~2013년 기간 중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3.9%p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이후 1%p대로 급락했으며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신성장수출품목 육성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 노력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경우 수출확대를 통하여 성장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년간 5대 유망소비재, 8대신산업, 유망산업을 포함하는 신성장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9%에서 2017년 20.6%, 2019년 22.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⁰⁾

20)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신성장품목 수출동향과 시사점' 참조

[그림 III-48]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III-10] 신수출성장품목 개요

품목	선정시기	대분류
농수산물식품	2016년 2월	5대 유망소비재
화장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의약품		
전기자동차	2017년 1월	8대 신산업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2019년 2월	유망산업
플라스틱제품		
정밀화학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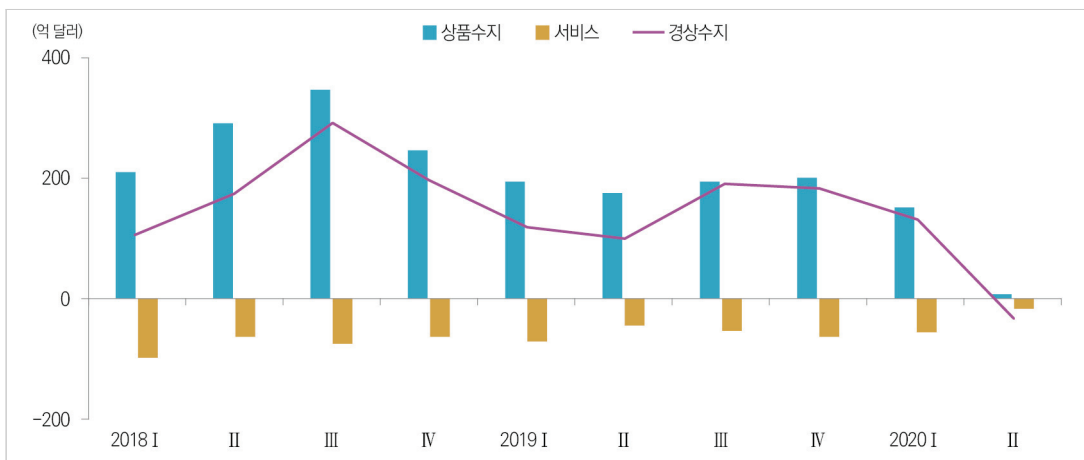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3) 경상수지 전망

2020년 1~4월 중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흑자규모가 소폭 줄어들었다. 특히 4월 중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수출 감소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는 등 경상수지는 31.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올 1~4월 중 글로벌 운송과 여행의 제약으로 관련 수지가 개선되는 등 서비스수지는 전년동기(-84.5억 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축소된 -66.2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 배당 및 이자 소득을 포함하는 본원소득수지 또한 지난해 1~4월 중 적자(-26.6억 달러)에서 올해 동기간 15.8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고 이전소득수지의 적자폭도 축소되었다. 코로나19 영향이 올해 2/4분기 들어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와 서비스수지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III-49] 경상수지 추이



주: 2020년 2분기는 4월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2020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600억 달러)보다 축소된 연간 54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규모(647억 달러)가 대폭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본원·이전소득수지는 해외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폭(-107억 달러)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의 연간 흐름은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2/4분기 중 최저를 기록한 뒤 하반기 중 상품수지 흑자폭이 늘어나면서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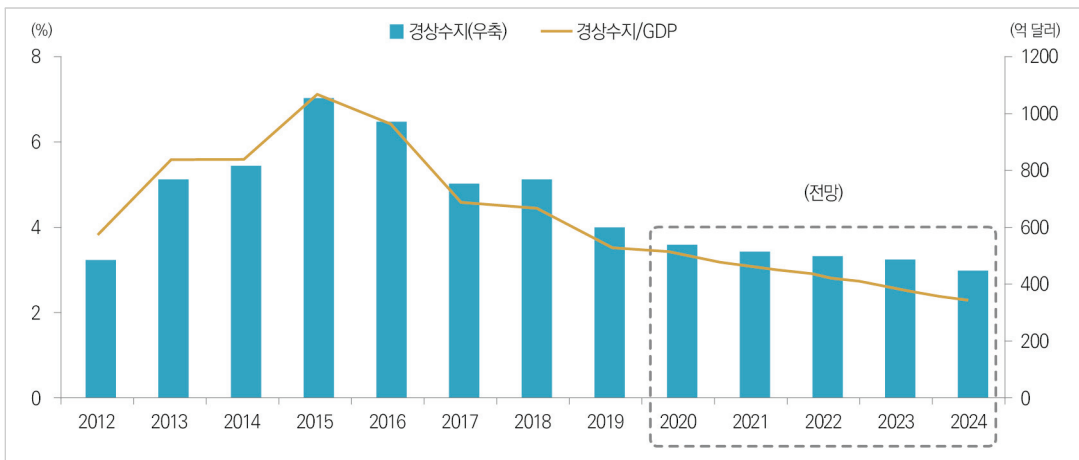
[표 III-11] 경상수지 전망

	2018	2019	2020(전망)
경상수지	775	600	540
상품수지	1,101	769	647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326	-169	-1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0년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지난해(3.4%)보다 낮은 3.2%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자인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분모인 미 달러화 기준 명목GDP 또한 원/달러 환율상승과 실질GDP성장률 하락으로 축소되는 영향으로 동 비율의 전년대비 변화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21년 이후로는 명목GDP상승과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대GDP) 흑자비율은 2022년 2.9%, 2024년경에는 2%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향후 5년(2020~2024년)의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평균 2.8%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5년(2015~2019년) 평균인 5.3%에 비해 2.7%p 낮은 수준이다.

[그림 III-50] 경상수지(GDP대비) 흑자 비율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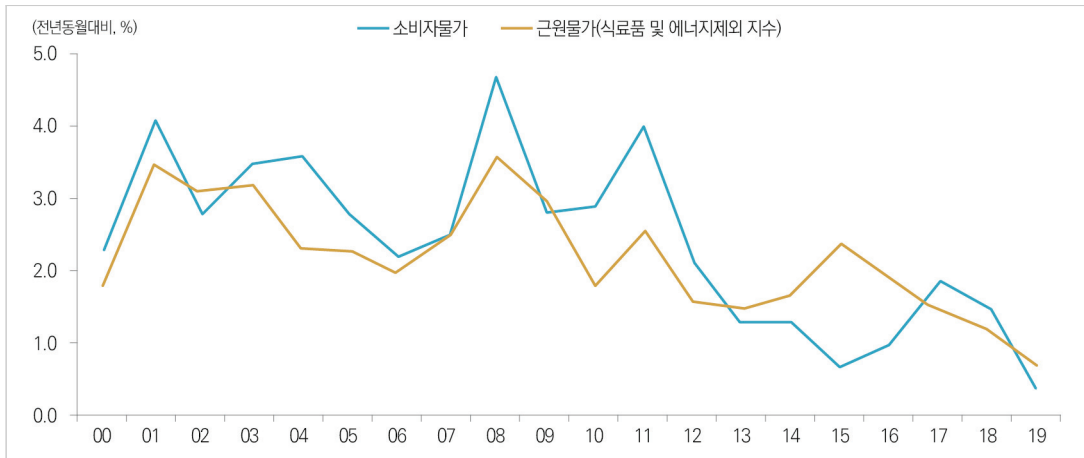
바. 소비자물가

(1) 2020년 전망

2020년 소비자물가는 2019년 중 이례적으로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국제유가 하락폭이 크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9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를 기록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 196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라 농산물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석유류제품 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 공공서비스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위축으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서비스물가의 오름세도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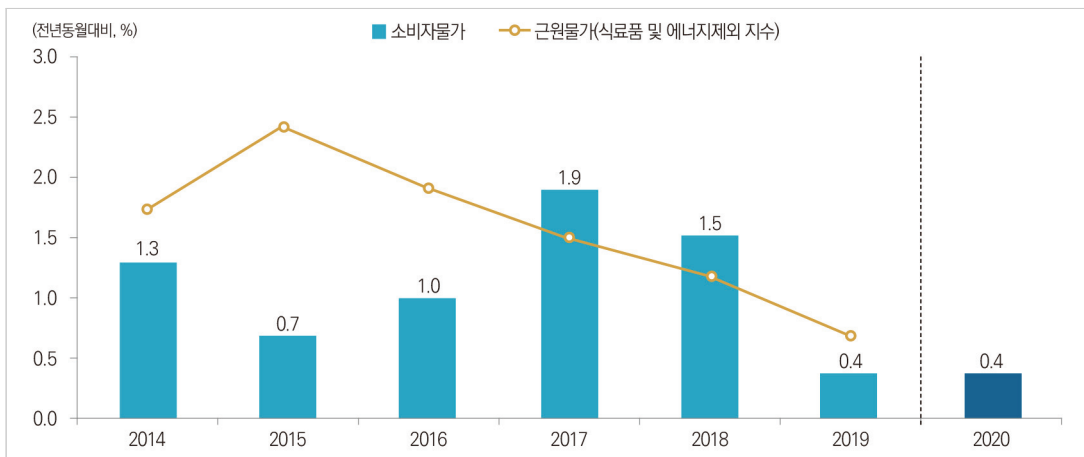
[그림 III-51] 연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2020년 소비자물가는 2019년의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폭락과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고 정부정책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서비스물가 상승률 둔화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지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근원물가의 상승압력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III-52]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2020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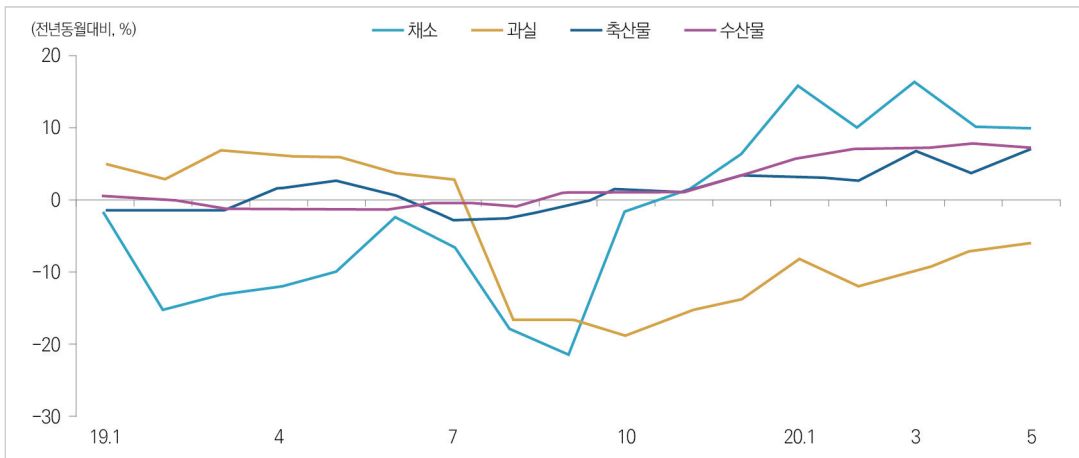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재배면적 축소, 폭염 예보 등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전년 양호한 기상 여건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중에는 엽근채소를 제외한 모든 작물의

재배면적이 0.6%²¹⁾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후측면에서는 6~8월 여름철 한반도 인근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와 평균 온도가 높게 예측되고 있어 한반도의 폭염발생 가능성이 평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²⁾.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을 기피하고 가정식을 선호하면서 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 가정용 식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농축수산물 물가를 상승시킬 전망이다.

[그림 III-53] 농축수산물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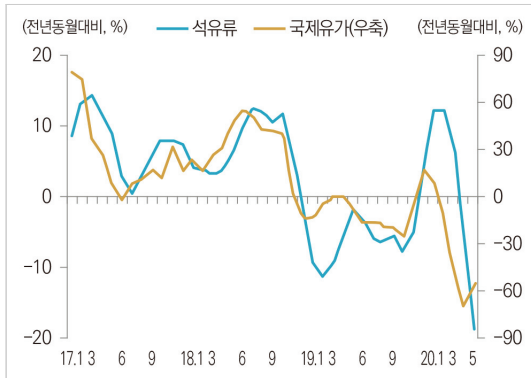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 물가는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모두 하방압력이 높아지며 둔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실시에 이어 올해 3월부터 대상을 2학년까지 확대하면서 전년에 이어 교육비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4월 고등학교 납입료는 전년동기대비 64.0%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2020년 연중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복부 및 흉부 MRI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12월부터 중증질환 등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2월부터 여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확대 등이 시행되면서 의료비 가격에 대한 하방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개인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서비스 업종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승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근원 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상승률도 둔화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근원물가는 4월과 5월 2개월 연속 0.1% 상승하는 데 그쳐 1999년 12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중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위축 등으로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0」, 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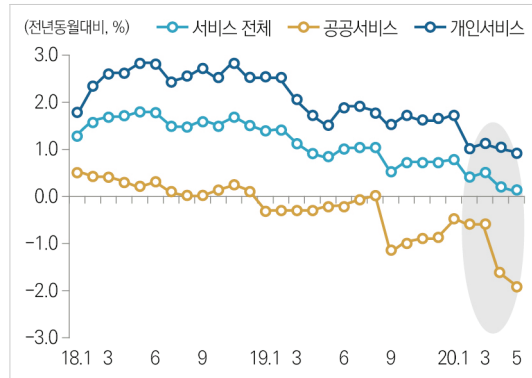
22) "2020년 봄·여름철 폭염전망", 기상청 지정 UNIST 폭염연구센터, 2020.5

[그림 Ⅲ-54] 석유류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그림 Ⅲ-55] 서비스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20년 중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공급측면에서도 물가 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업제품 물가는 유가급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 전환,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가격 하락 등으로 4월과 5월 각각 -0.7%, 2.0%를 기록하며 내림세로 전환하였다²³⁾. 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원유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0년 중 국제유가가 연중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9년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여 기업의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20년 임금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재무재표 분석 결과²⁴⁾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보다 0.47%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7.04%, 52.82% 감소했다. 기업수익 악화 및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2020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지난해의 3.4% 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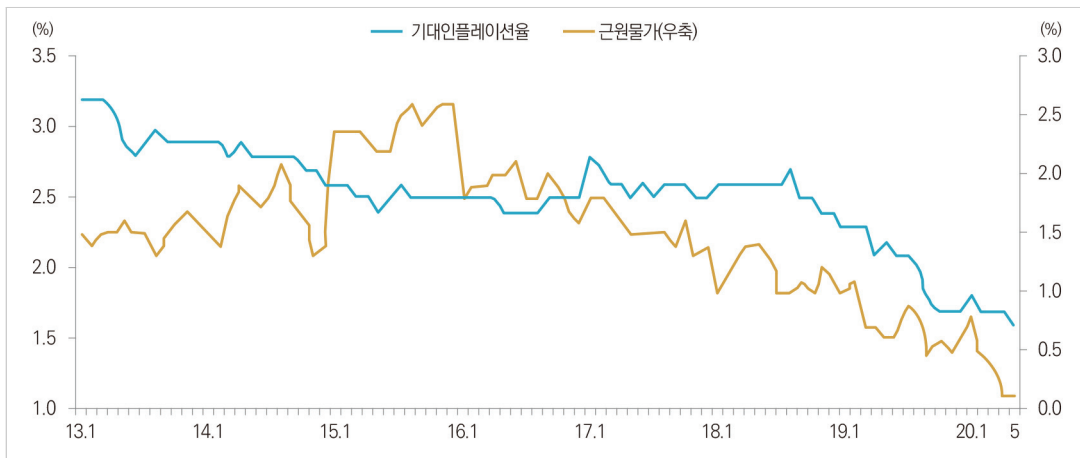
2020년 소비자물가는 수요 및 공급측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2019년에 이어 0%대의 저물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는 최근의 저물가 상황에서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미진하여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2020년 소비자물가는 0.4% 상승하는 데 그치겠으나 2021년부터는 완만하게 상승하여 제21대 국회 임기 기간인 2020~2024년 평균 1.1%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23) 다만, 정부의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6월로 종료되면서 승용차 가격은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한국상장사협의회, “2019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결산실적(12월 결산법인),” 2020.4.

2019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정책 시행 등으로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당초에는 2020년부터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며 하방압력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요둔화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공급측 물가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재인하 정책 시행과 무상교육 대상 확대 등 정부정책도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III-56]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2021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0%대의 물가수준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 GDP 갭이 음(-)의 수준에 머무는 등 여전히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아 물가 상승세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중기적으로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이 지속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측면에서는 국제유가가 단시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석유류 가격의 상승세 둔화도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원유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며 역대 최고치의 재고량에 비추어 볼 때 중기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도 향후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의 가격 결정 및 임금협상을 통해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²⁵⁾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9년 9월부터 2%를 하회하며 2020년 5월 현재 1.6%를

25) “인플레이션의 기대 형성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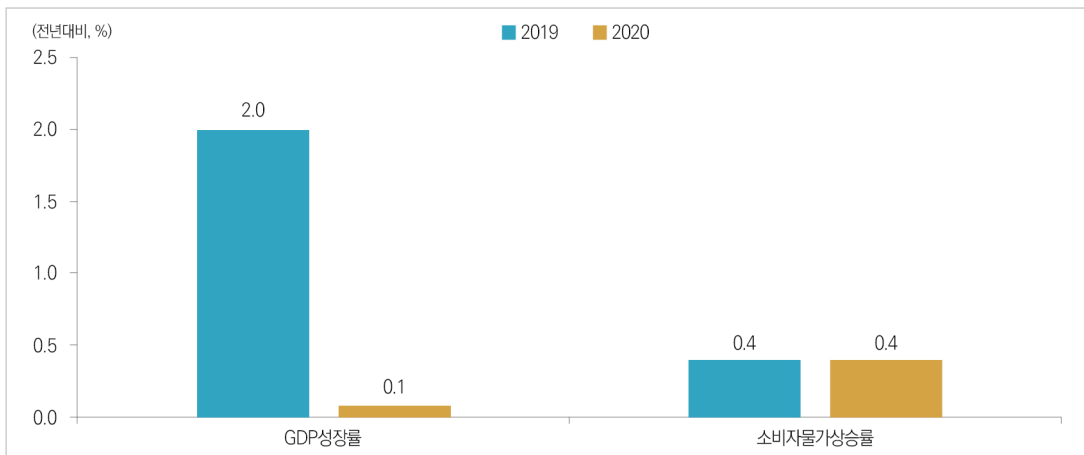
기록하였다. 이는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향후 경제주체들이 물가 상승률 급등을 예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 금리·환율

(1) 2020년 전망

2020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국내수요(소비 및 투자) 부진, 해외금리 하락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연평균 1.5%) 보다 하락한 연평균 0.9%를 나타낼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파장이 올해 중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정부가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아내고 있지만 백신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국민방역체제를 완화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국내 수요의 부진은 불가피해 보인다. 둘째,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불확실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불확실성은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2019년 중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7.7% 감소한 데 이어 2020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코로나19의 충격은 최근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소비, 투자)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양방향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점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급체인을 훼손하여 원활한 부품수급을 곤란케 함으로써 생산 및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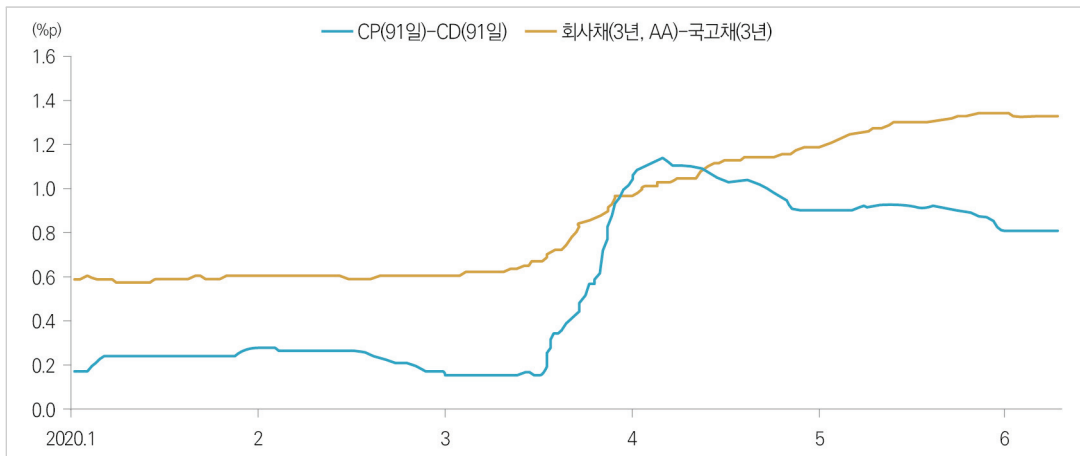
[그림 III-57] 국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한국은행

금융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업신용경색 완화 및 금융시장 안정,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시장금리 하락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 전년대비 2.0%에서 올해 0.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의 정체 및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0.4%)에 이어 2020년에도 0.4%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기업신용경색의 해소는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발행 장단기 사채의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채인 기업 발행 CP와 은행 발행 CD의 스프레드가 4월 3일부터 하락하고 있으나 하락폭은 크지 않았으며, 장기채인 3년 만기 회사채(AA-)와 국고채의 스프레드는 3월 12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I-58] 장기 및 단기 회사채의 스프레드



주: 단기채는 91일물 CP와 CD, 장기채권은 3년 만기 회사채와 국고채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경제의 저성장과 기업신용경색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0.75%p 인하,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5.22일 현재 2회 총 10조 원 증액),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참여,²⁶⁾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10조 원),²⁷⁾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지원제도(RP제도) 도입²⁸⁾ 조치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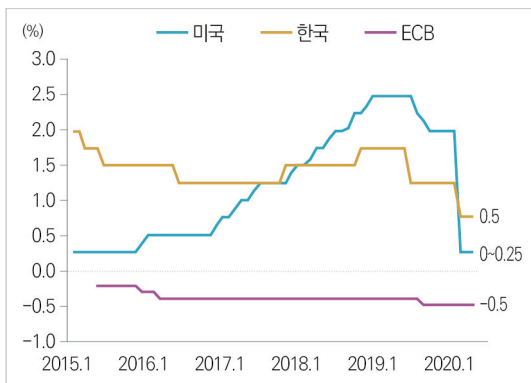
26) 정부·한국은행·산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기구로 초기 10조 원 재원(필요 시 20조 원까지 확대) 중 한국은행이 8조 원 선순위대출로 참여한다. 동 기구는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당초 투자등급이었으나 투기등급(BBB등급 이하)으로 하락한 채권도 매입한다.

27)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한다.

28) 매주 1회 정례 RP매입(91일 만기)을 통해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배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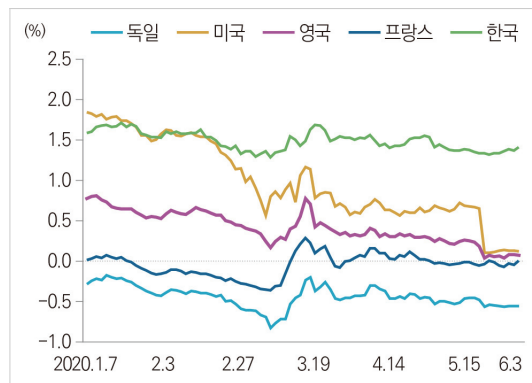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점도 국내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연준은 지난 2월 정책금리를 1%p 인하하여 제로금리정책(연방기금목표금리 0~0.25%)을 시작하였고, 유럽중앙은행(ECB)도 마이너스금리(일반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연준과 ECB가 양적완화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 국채 시장금리가 2020년 초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국채금리는 마이너스영역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국제금리의 하락은 해외자본의 국내 증권투자를 자극함으로써 국고채금리의 하락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금리 영역에 놓인 선진국 국채에 비해 국고채가 수익성이 높고 안정성도 겸비하여 투자자산으로 선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III-59] 한국·미국·유럽 정책금리 추이



주: ECB는 일반은행의 중앙은행(ECB포함) 예치금 금리
자료: 한국은행, 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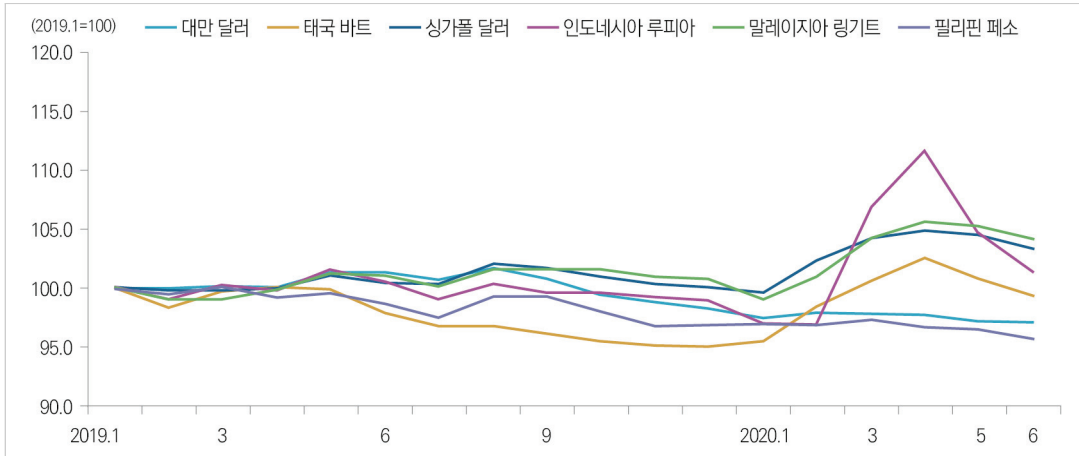
[그림 III-60] 한국 및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주: 10년 만기
자료: 인포맥스

2020년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하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신흥개도국 통화의 약세를 들 수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신흥개도국에서 국제자본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60일 경과 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자본이탈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흥개도국의 통화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도 대만과 필리핀을 제외하면 연초에 비해 미달러화 대비 환율이 상승하였다. 신흥개도국 통화의 약세는 원화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림 III-61] 미달러 대비 아시아국 통화 추이



주: 월평균치, 단 6월은 5일까지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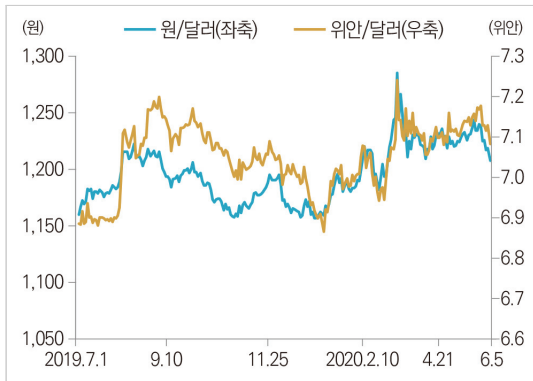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둘째는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분쟁이 한층 격화되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지난 1월 15일 1차 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의 책임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간 분쟁이 무역부문뿐만 아니라 금융부문까지 확대될 조짐이다.²⁹⁾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미·중 간 무역분쟁이 더해지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투자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위안/달러 환율의 상승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중 미·중 간 무역분쟁이 고조될 당시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1차 무역협정 직전인 1월 13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계기로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 아래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충격과 미·중 무역분쟁 재현에 따라 다시 7위안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만약 중국경제의 둔화세가 심화된다면 중국정부가 위안화 환율의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이 2017년부터 매우 동행적인 추이를 보여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안화 환율의 상승은 원화 환율의 상승을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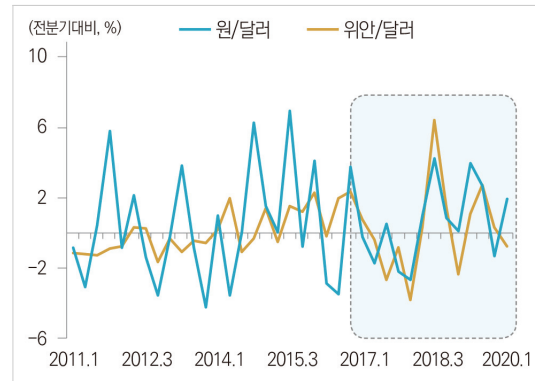
29) 최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미국 공적 연기금에 대해 중국투자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림 III-62] 달러 대비 원화 및 위안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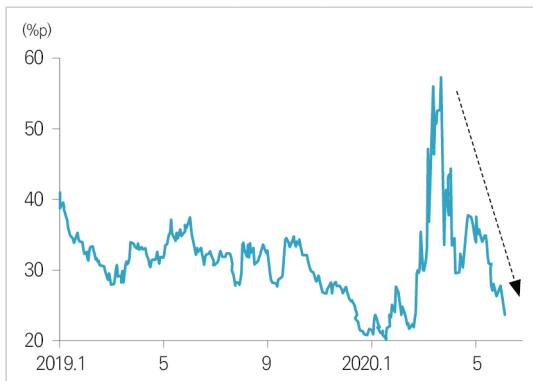
[그림 III-63] 원화 및 위안화 환율의 전분기대비 변동률 추이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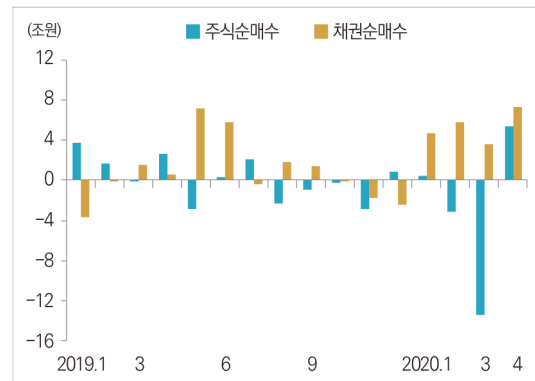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비교적 코로나19 통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내수활성화정책에 힘입어 국내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역성장이 예상되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0.1%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한미 간 통화스왑(600억 달러)은 외환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고 있다. 또한 3월 중 큰 폭으로 상승했던 외평채 CDS프리미엄이 최근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2019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2020년 4월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순매수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신흥개도국에서와 달리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64] 외평채(5년 만기)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III-65] 외국인의 국내증권 매매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비교적 양호한 이유는 높은 국가신용등급과 채권금리 격차 때문이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는 우리나라를 3번째 등급(무디스 Aa2, S&P AA, 피치 AA-)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S&P 기준으로 볼 때 영국, 프랑스 등과 동급이며, 일본, 스페인, 대만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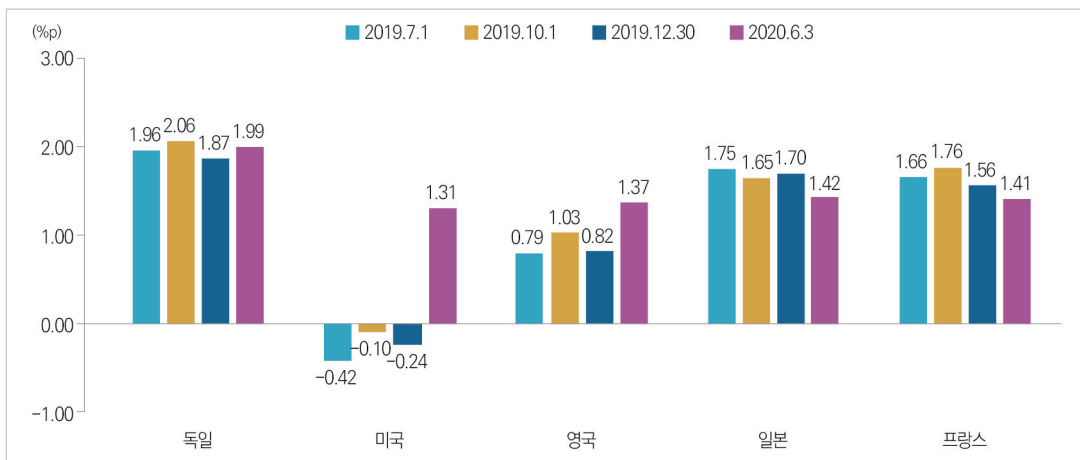
[표 III-12] S&P 기준 국가신용등급(장기외화채 등급)과 주요 등급별 국가

등급	주요 해당국
1	AAA
2	AA+
3	AA
4	AA-
5	A+

자료: 국제금융센터

우리나라 국고채와 주요 선진국의 국채의 금리차(10년 만기 기준)를 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0년 6월 현재 1%p 이상 높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미국국채의 경우도 지난해 우리나라 국고채보다 높았으나 올해 들어서는 낮은 수준으로 반전되었다.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고채를 투자대상으로 높게 평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외환수급요인들을 고려할 때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205원을 나타낼 전망이다.

[그림 III-66] 주요 선진국 국채와 우리나라 국고채의 금리차



주: 금리차=국고채(10년 만기)-주요국 국채(10년 만기)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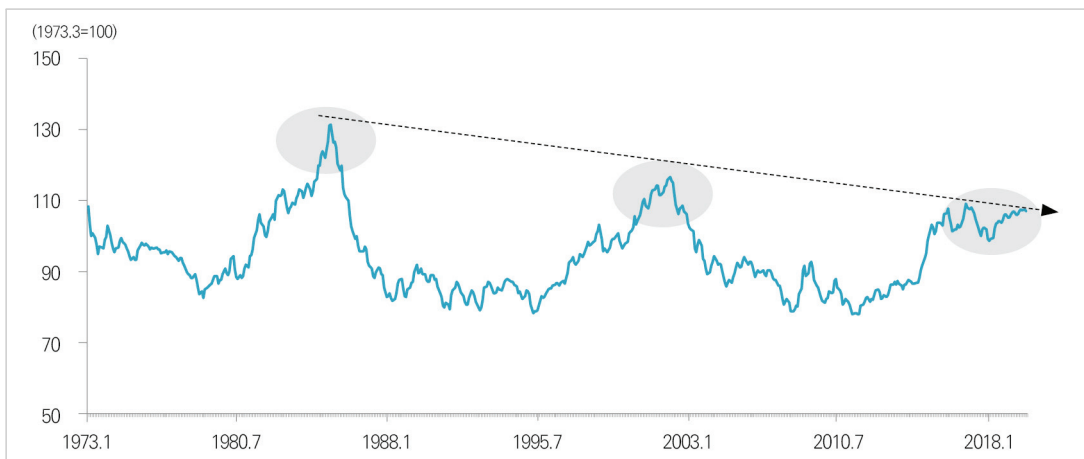
(2) 중기 전망

2021년부터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2020~2024년 중 국고채금리는 2020년 보다 높은 연평균 1.7%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통제가 하반기 중에 가능해진다면 2021년부터는 세계경제가 올해 마이너스성장에서 플러스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비교적 효과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우리 경제성장률도

2021년에는 2% 후반대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에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국내외적으로 총수요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2024년 중에는 연평균 1.1%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성장·저물가 환경 하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기본적으로 완화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0~2024년 중 국고채 수익률(3년 만기)은 연평균 1.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0~2024년 중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71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로 복귀하게 되면 미국 달러화의 강세국면이 종료되고 약세국면으로 진입하여 향후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달러화는 1993년 이후 3번째로 가장 가치가 높은 수준인데, 1985년 플라자합의, 2002년 IT버블 시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유럽 재정 위기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던 2012년부터 강달러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세와 시장금리, 다국적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과 높은 수익성, 미국주가 상승 등이 강세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미연준이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양적완화를 재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향후 미국경제가 회복양상을 보이고, 국제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는다면 미연준의 통화정책은 미달러화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달러화의 약세는 국제자금의 미국 집중을 완화시켜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림 III-67] 달러인덱스 장기 추이



자료: St. Louis Fed

원화측면에서 보면 2020년 6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1,991~1,225원 구간에서 변동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형성된 상한(평균치와 표준표차의 합)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2000년대 이후 동 상한을 크게 넘은 경우는 미국 IT버블붕괴(2001~2002년)와 미국 금융버블붕괴

(2008~2009년)로 모두 미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었던 시기이다. 현재도 코로나19의 방역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코로나19의 통제가 가능해지고 미국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적 성장궤적으로 복귀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중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68] 원/달러 환율의 장기 추이



주: 빨강선은 2001.1.2.일~2020.5.22일 평균치, 점선은 평균치(1,128원/달러)에 표준편차(106)를 가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IV

향후 과제

향후 과제

제21대 국회 기간 중 우리 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을 헤치며 나아가야 한다. 향후 우리 경제가 어떤 난제에 직면하게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첫째,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이 중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질GDP성장률이 지난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2.8%에서 향후 5년간(2020~2024년)에는 2.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 내외에 그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소비성향 하락 등 구조적 문제가 내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잠재성장률을 하락시켜 경제성장률 제고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가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팬데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경제주체들이 비대면 방식을 이용할수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이 위축될 것이다. 이는 가계의 실업 위험을 상승시켜 경제활동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가계는 노동공급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는 GDP의 약 49%(2019년 실질기준)를 차지한다. 따라서 가계가 파산, 실업 등으로 붕괴되면 경제가 충격을 받게 된다.

셋째, 향후 세계경제 여건이 한국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가 야기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특히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치료제 혹은 백신의 개발여부와 개발 시점은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늦어질수록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비록 저강도일지라도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면 세계경제의 침체도 심화될 것이다. 효과적인 백신은 적어도 1~2년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경제가 극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존한 수출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지난 20여년 간 한국이 수출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국제적인 기업분업체제였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부품과 같은 중간재 수입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대중 수출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미·중 간 분쟁의 격화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점차 글로벌 가치사슬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환율의 상승 가능성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만약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격화된다면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대미 수출이 위축된다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수출용 상품을 중국 내수로 모두 소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위안화 절하를 통해 상품가격을 낮추고 여타 지역 수출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수출은 GDP의 42.8%(2019년 실질기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우호적인 세계경제 여건으로 인해 수출이 부진해진다면 경제성장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안별로 수출부진을 타개할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막대한 저금리 유동성 공급에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는 대규모 기업금융지원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금융지원은 기업부채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중기적으로 기업의 지속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시장기능 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차별 없는 지원은 단기에 그쳐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국내외 경기 동향을 고려하면서 출구전략(금융지원액 축소, 구조조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의 급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한 자산가격의 상승은 결국 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경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막대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세계경제는 또 다른 심각한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겪게 될 것이다.

다섯째, 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인프라 및 기술투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수많은 인명과 물적 손실을 일으킨 코로나19를 기후재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인간과 전염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선진국들이 자국 내 혹은 대외거래와 관련한 환경규제를 보다 빠른 속도로 강화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의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적 지구 환경 살리기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장기적 시각에서 환경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환경 투자는 성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반면 일단 벌어진 기업 간 환경기술의 격차는 좁히기 힘든 경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21대 국회 기간 중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야기되는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과거 우리 경제는 위기를 항상 기회로 반전시키는 저력을 발휘해왔다. 금번 경제위기도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압력이 될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수용한다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져 새롭고도 다른 차원의 경제 환경이 전개될 때 새로운 변화에 적합하고 선도적인 기술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거래처를 찾기 어려웠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도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는 적기 납품 위험을 높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간재 공급처를 해외에서 국내로 돌리는 동기가 되고 있다.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협력의 공감대가 조성된다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압력이 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재도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 제21대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긴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영·안소연,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GDP 영향 비교”, 『Trade focus』 2019년 7호, 한국무역협회, 2019.
-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9.
- 김규연, “브렉시트 시행 및 향후 전망”, 『Weekly KDB Report』 제865호, KDB미래전략연구소, 2019.2.10.
- 남민호·고민지, “인플레이션의 기대 형성의 특징 및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제71권 제12호, 한국은행, 2017.
- 박소영,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 유지혜, “영국 녹색금융 추진 현황”, 『Weekly KDB Report』 제 875호, KDB미래전략연구소, 2020.4.20.
- 정인교, 「브렉시트와 한·영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9.
- 정재원,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ERI 정책제언』 (19-10), 한국경제연구원, 2019.
- 최기산·장태운,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농업·농가경제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황종률,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경제현안분석 제17호, 국회예산정책처, 2007.7.
- _____,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경제현안분석 제47호, 국회예산정책처, 2009.12.
- Clark, P. K., “Potential GNP in the United States, 1948~8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5, June, 1979, pp. 141~166.
- _____, “The Cyclical Components of U.S. Economic Activ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7, pp. 797~814.
- _____, “Trend Reversion in Real Outpu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etrics*, 1989, pp.15~32.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2020.6.

- EIA,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2019.
- _____, *Oil Market Report*, 2020.4.
- 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19.
- _____, *The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GFSR): Markets in the Time of COVID-19*, IMF, 2020, April.
- Jorda, Singh and Taylor, “Longer-Run Economic Consequences of Pandemics,” *Working Paper 2020-09*, FRB of San Francisco, Mar. 2020.
- Krugman, P., “It’s Baaack: Japan’s Slump and the Return of the Liquidity Trap,”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9(2), 1998, pp.137-206.
- _____, “Four Observations on Secular Stagnation,” CEPR Policy Portal, 2014.
 <<https://voxeu.org/article/four-observations-secular-stagnation>, 접속: 2020.6.8.>
- Kuttner, K. N., “Estimating Potential Output as a Latent Variable,”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Vol. 12, No.3, 1994, pp. 361~368.
- Okun, A. M., “Potential GNP: Its Measurement and Significance,” in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Proceedings of the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Section*, 1962, pp. 98~104.
-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2020.4.
- Stock, J. H. and M. W. Watson, “Variable Trends in Economic Time Se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 1986, pp. 147~174.
- Summers, L., “Demand Side Secular Stagn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5(5), 2015, pp. 60-65.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
- UK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The OBR’s coronavirus analysis*, 2020.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World Economic Forum, 2020.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발간일 2020년 6월 26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 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ISBN 978-89-6073-273-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5)

제 21 대
국회개원

건전한 재정
희망한 미래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7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6-001815-01